

■ 강원도의회 다문화사회연구회 연구용역 보고서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김규찬 · 이세원 · 정수용



국립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산학협력단

제출문

강원도의회 다문화사회 연구회 귀하

본 보고서를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연구책임자: 김규찬 교수

공동연구자: 이세원 교수

공동연구자: 정수용 교수

연구수행기관: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요약문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 본 연구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보육 및 돌봄, 교육, 건강과 보건의 세 측면에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이를 통해 강원도가 지역기반의 다문화가족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장기체류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이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결혼이민자 유입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점차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발생되고 있음.
- 강원도는 비록 전국대비 이민배경 인구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도 인구규모 축소 및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중요한 정책적 대상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은 성공적 사회통합의 핵심지표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글로벌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최근 우리 정부의 이민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은 지역기반의 특화된 서비스 개발과 운영(지역서비스 고도화)을 강조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강원도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 특성,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기반의 정책과제 도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2. 보육 및 돌봄 분야

1) 문제점과 욕구

-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인지·언어 발달과 정서·사회 발달의 지연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그러나 영영아기 아동이 다문화가족과 일반 가족에서 언어발달 차이가 없고, 정서·사회발달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로 볼 때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제공되는 환경(육아지원기관, 가정,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은 청소년기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유아기 지원을 간과하고 있음.
- 강원도 다문화가족정책의 전달체계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여성 청소년가족과에서 맡고 있어 가족구성원의 생애발달이나 욕구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으로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차 자료를 통해 분석한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욕구는 다음과 같음.
 - 육아지원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와 면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경우 인지적·정서적 자극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육아지원기관 이용도 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지도 않고 있는 경우 관련 정책의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바, 효과적인 정보 전달체계의 강구가 필요함.
 - 영유아 자녀와의 활동에 있어 결혼이주자의 배우자가 참여하는 매우 저조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봄을 공유하고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함.
 - 현재의 다문화프로그램은 한국어 소통 능력 향상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으나, 그 외에도 양육비 지출, 학습 지도, 양육방식 갈등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추진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가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욕구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내에서 양육 방법의 차이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것이지만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예: 아동 체벌 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하는 조건은 비용, 물리적 접근성, 긴 이용시간임.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자는 초기입국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를 육아지원기관에 보내면서 의사소통, 문화적인 차이, 교사와의 관계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도움을 받을 인적 자원이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지원기관은 다문화가족 영유아 연령에 따른 적합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자녀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동안 결혼이주자는 정착적응 및 근로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대부분 결혼이주자의 경우 연령이 낮고 정착 초기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부모됨의 준비나 교육이 필요함.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에게 제공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은 결혼이주자의 특성(물리적 접근성의 한계, 낮은 경제 소득 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실질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언어적·문화적 역량이 뛰어나므로, 한국어와 문화의 습득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함.

○ 영유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욕구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 어머니들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언어소통, 대체 돌봄의 부재,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하기 어려운 상황, 양육비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였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울 때 가족 이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은 부재해 보임.
-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에서는 대개 자녀가 만1세~만2세 무렵부터 육아지원 기관에 보내고 있으며, 물리적 접근성을 가장 큰 기관 이용 조건으로 여기고 있음. 자녀를 육아지원기관에 보내게 된 이유는 한국어 역량 증진때문이었지만, 그 외에도 사회성 발달, 기본생활습관 형성, 육아지원기관 선생님과 교류, 취업시간 확보 등 다방면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결혼이주 후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알려주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기도 어려웠고,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면서도 가정통신문의 이해나 특별활동의 선택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자녀가 다니게 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대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이와 관련한 도움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음.
- 자녀를 보다 잘 키우기 위해 이중언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 양육과 정착 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양육비의 지원 등이 필요함.

2) 정책 제언

○ 영유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은 영유아가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자가 초기 정착자임을 감안할 때 정착의 초기에 성공을 경험해야 정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이 강조된 정책이 구현되어야 함.

○ 정책전반 개선

- 국제결혼의 감소 및 저출산 경향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영유아기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야 하고(서문희 외, 2010) 친아동적(child friendly), 친가정적(family friendly)이어야 함.
- 다문화가족의 취약정보다 강점에 집중하는 정책을 지향하여야 함.
- 전반적인 보육 및 돌봄 환경의 개선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함. 선행연구

에서는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개인 역량이 국내 일반가족의 영유아보다 취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놓은 환경으로 인해 연령이 증가할 수록 취약성이 발현된다고 보고 있음. 또한 자녀의 영유아시기는 결혼이주자의 초기 정착기이자, 가족형성초기이기도 함. 부부간의 갈등 문제나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비밀관적인 양육태도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부부상담, 부모교육, 아버지 참여 교육 프로그램,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과 지원 등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실시가 필요함.

- 자녀의 성장과 함께 부모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특히 돌봄정책과 함께 결혼이주 여성의 역량을 극대화하며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예: 결혼이주 여성 멘토).

○ 전달체계 개선

-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복지 차원의 접근도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의 다문화가정 또는 국내 일반가정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정책을 구현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욕구에 대해 개입하되,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 부서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사 수행 결과 다문화가족 결혼이주 부모는 도움을 받을 인적자원이 부족하며, 정보 인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정보 전달에 대해 다음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

- 현재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사례관리 전담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님. 강원도 B시의 경우 8개 행정구역에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본인이 맡은 구역에 위 어려움으로 센터에 내방하면 직원들이 1:1로 천천히 안내 또는 관련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 후 통역사를 통해 전달 및 해결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개설시 안내를 하고 있음(전문가 2 서면조사 내용). 따라서 다문화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보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영유아의 연령별대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구 발주하여 운영(예: 영영아기: 부모자녀애착, 아이돌봄 / 영아 및 유아기: 언어, 영양과 부모상담 및 교육, 놀이 방법 등 / 취학준비시기-신체활동, 학습(예: 독서지도, 학습지도 등)

3. 교육 분야

1) 문제점과 욕구

-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 문제와 욕구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학생이 직면하는 교육/학업상의 위기는 다문화가족이 처한 매우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하에서 이해되어야 함.
 - 다문화학생의 취학률은 내국인 학생에 비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나,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내국인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음.
 - 학업성취도가 저하되는 경우에는 언어발달의 지연과 수준높은 언어능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국어와 사회, 역사와 같은 과목의 특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 비록 생활언어의 유창성이 확보되더라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공적 교육은 유아기부터 학령기로 이어지는 긴 과정속에서 달성되는 만큼, 언어습득과정부터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적 관계형성을 포괄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며, 가정(부모)과 학교(교사와 또래)에서의 동시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정부의 다문화가족 자녀(학생) 대상 지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이민배경 자녀들을 단순히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로서 육성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강조점이 이동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포함한 생애주기의 단계별 전환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음.
 - 동등한 교육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학교 밖 학생들과 같은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사회통합의 가치실현을 위해 내국인학생과 대중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 노력.
- 2차 자료(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 문제의 특징과 욕구는 다음과 같음.
 -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만6-24세) 양육상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만,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자녀와의 대화부족’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전국대비 더 높았음.

-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고민거리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보면 ‘고민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2%로 가장 높으며 이는 전국평균보다 7%를 상회하는 수치임. 그 다음으로는 ‘진로·진학·직업’이 30.6%, ‘공부(성적, 적성)’가 29.3% 큰 고민거리라고 응답함. 공부를 고민거리로 응답한 빈도는 전국평균과 비슷하지만, 진로관련 고민거리를 갖고 있다는 응답은 전국평균보다 5%가량 높았음. 이를 토대로 볼 때 진로지도를 포함한 교육분야 지원 욕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강원도는 전국평균과 마찬가지로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큰 3.4점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가 파악한 욕구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에 있어 ‘학업’의 중요성: 학업은 단순히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형성, 또래관계, 향후 진로에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핵심적인 이슈임.
- 가정의 중요성 및 가정(부모)대상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됨: 다문화가족자녀의 성공적 학업 및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 및 지지관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학교 및 교사의 중요성 및 학교기반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됨: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데 무지하거나 소극적임(이는 ‘식별’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한 것일 수 있음). 그러나 학교에서의 실질적 지원서비스 없이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 욕구는 해소되기 어려움.
- 자녀들의 생애주기(학령기)별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가 요구됨: 저학년일 경우 돌봄공백도 같이 해소되어야 하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요구되는 학습 수준에 준하여 학습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에서 ‘접근성’의 중요성 및 찾아가는(방문형) 서비스의 도입 및 확대가 요구됨: 서비스기관이 주로 접근성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크게 저하됨.
- 관련기관들의 서비스 확장성, 지속성 및 유기적 연계가 요구됨: 단회성이나 자원봉사자 활용과 같은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하며, 학교급이 올라가거나 전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일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어머니)들의 교육관련 욕구는 다음과 같음.
 - 학교 학습에 적응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또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학생별 특화 및 지속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명확했음.
 - 한국에서 ‘교육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교육 등 추가 교육을 시키고 싶으나 교육비 부담, 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망설이는 것으로 드러남.
 - 방문 서비스(돌봄 및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확인됨.
 - 활용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코로나로 인해 학교 등교 수업대신 온라인 기반 학습 수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드러남.
 - 기타 파악된 욕구: 어머니 취업기회 확대 및 생활밀접 기관들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

2) 정책 제언

- 교육 지원서비스(프로그램) 개발·운영의 방향 설정
 - 내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문제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정책의 ‘철학’이 요구됨. 정부의 다문화교육 기본정책의 이념과 목표는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시·군 단위에서는 자원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실현 하는 것에 어려움이 포착됨.
 - 내국인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급학교 진학률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며, 특히 20세 이전의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규교육과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공교육 진입실패 및 탈락이 아동의 언어 능력과 학습 능력이 한국 교과 과정의 어려움이나 가족(부모)의 특성에 의한 것인지, 한국 교육 행정 체계의 경직성과 사각지대에 따른 배제의 결과인지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보건사회연구원, 2018).
 - 다문화가족 부모나 자녀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 교육문화와 제도 이해 프로그램, 부모의 양육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필요. 단, 가급적 집단 프로그램 보다는 개별적 상담, 1:1 학습도우미, 멘토링 방식이 더 적합함.
 - 1:1 멘토링이나 개인 학습 지원과 같은 서비스 형태는 민간 자원 활용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서비스제공자(교사역할자)의 역량과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따라서 대학생이나 단회성 자원봉사자 보다

는 지역기업이나 부모회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교육봉사를 할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교육 지원서비스(프로그램) 접근성과 보편성 개선

- 다문화 학생들의 생활환경 안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각종 청소년 지원기관, 사회복지관 등이 가정,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동개발이나 적극적인 사례 공유와 의뢰(referral)가 필요함.
-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접근성에 한계로 인해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앞의 전문가 자문내용 참조).
- 외국인 부모들의 전형적이지 않은 근무 시간과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프로그램 운영시간(주말이나 야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때 반드시 자녀의 돌봄욕구와 교육욕구가 같이 고려되어야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음.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경우 공교육진입 자체가 차단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 파악이 상시 요구되며, 이들이 관련 서비스에서도 배제되지 않도록 국적이나 체류의 합법성보다는 욕구와 인권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인재육성’으로 보는 실용적 접근은 이들을 배제할 우려가 큼.

○ 학교와 교사의 역할 강화

- 학교 이동, 학교 급간 이동에 상관없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학교적응 및 교육 성취도가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이를 위해 학교내 다문화학생 사례관리자 역할을 할 인력이 지정되어야 함.
- 다문화 학생의 학교 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있어 다른 어떤 서비스 제공자도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 교사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화적, 심리적 특징을 이해하고 일반학생과의 협업 환경속에서 교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교실에서 다문화 학생을 ‘식별’함으로써 낙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수업설계가 요구됨).
- 그러나 학교 생활 부적응자나 학업성취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다문화 학생은 오히려 조기에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사례관리자의 지속적인 상담, 교육, 모니터링, 필요시 의뢰 등의 밀접관리가 요구됨.

○ 시·군 단위의 실태조사 및 사례 개발과 확산

- 본 보고서 제2장과 본장의 다문화학생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도내 시군간의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학생의 분포현황의 지역격차가 큼. 따라서 전국이나 광역단위 사업들은 현장에서 적합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시·군 단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욕구 파악 및 서비스 현황과 자원 개발을 현

실화 할 필요가 있음.

- 타지역 사례를 단순히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긍정적 역할 모델과 진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지역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상담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의 비대면 학습 장비 긴급지원이 요청됨. 최근 등교가 정상화되고 있기는 하나 향후 언택트(untact) 환경에서의 (진학이나 취업시)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학습 경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건강 및 보건 분야

1) 문제점과 욕구

○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건강취약 계층임, 출신국가별로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족갈등 뿐 아니라, 자녀양육의 어려움, 건강관리상의 문제를 경험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국적 취득 이전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성과 영유아 건강서비스가 요구가 매우 높은 집단임.

○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언어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는 연쇄적으로 미충족 의료경험과 부정적인 건강수준을 야기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자녀의 건강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함. 이러한 현상은 연령, 출신국가, 체류기간,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증폭되기도 경감되기도 함.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은 60.9%로,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51.8%)’ 다음으로 ‘임신·출산지원(45.5%)’가 높게 나타났는데, 임신·출산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관심이 한국어능력 배양만큼이나 높다는 것을 시사함.

○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정책은 타 부문에 비해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정책우선순위에서는 밀려있음. 따라서 낮은 예산제약 내에서 극대화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함. 앞서 분석된 선행연구와 정책검토를 종합컨대, 정책수혜집단은 ‘결혼이주여성’으로, 정책목표는 ‘모자보건, 생식건강,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정신건강서비스’로 설정하며, 정책수단은 ‘정보제공’을 채택한다면, 정책성과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해석은 아래의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조사결과와 궤를 같이함.

- (건강 및 보건 욕구, 의료이용 장애요인) 임신전후관리, 건강검진,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그러나 언어적 문제로 인해 병원이용 시 부정적 경험이 많음. 다문화가족의 거주형태(도시형, 도농형, 농촌형)에 따라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음. 언어적 문제의 구체적 예로서는, 한국 남편이 동행하지 않고서는 건강상태를 의사에게 설명하기 힘들고, 의료진의 설명이나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두려움이 큼. 따라서 가족단위의 접근(남편에게 주기적 정보제공, 경제적 지원제도 및 보험제도, 본인부담금 등)의 중재방법을 제안함.
- (보건의료체계의 차이) 건강보험 가입률 면에서 볼 때,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나, 자국에 비해 높은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등 보장성 문제가 제기됨.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의료이용 접근성을 제한시키므로, 소득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건강정보에 대한 낮은 문해력)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에 만족하는 편이나, 일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이해가 낮음. 따라서 정책집행자의 정보제공 수단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의 대표적 국적을 추려 다중언어로 번역된 건강정보를 안내하거나, 예방접종 문진표나 건강상태 설문조사 등 이주민 입장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정보를 수집할 시에는 일반적 공지시점 보다는 조기에 통보되어 건강정보를 독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할 것임. 최근 디지털화된 정보(카카오톡, SNS, SMS 등)로 가공하여 신속 전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임.
- (실효성 있는 사업기획)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화하고, 다문화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음.

2) 정책 제언

○ 강원도 다문화가족의 건강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함.

- 건강정보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 건강검진, 영유아 예방접종, 임신부 산전산후관리 프로그램 등 결혼이주여성의 요구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정책집행자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주요 언어관련 통번역 건강정보알림 메시지, AI 스피커를 활용한 이중언어 환경구축 등 다양하고 창의적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적용함.

- 결혼이주여성에 국한된 건강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배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부부공동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단위의 접근과 중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병원-지자체-다문화자조모임 간의 협의체와 같이 지역맞춤형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마련, 대학과 연계한 의료봉사단 구성을 통해 병원이용 시 복잡한 서류작성 및 검진예약절차의 지원, 의료정보에 대한 설명 지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인식증대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음.

○ 다문화가족의 건강문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

-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건강플랫폼 사업 추진]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결혼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그간 국가정보화사업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국가적 차원의 지능형 서비스 실증사업이 사실상 전무함. 그에 반해, 노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복지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됨. 구체적 사례로는, 청각장애인용 통신중계서비스, 시각장애인용 사이트 이용안내, 노인맞춤형 느린말ARS 등이 있음.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강플랫폼 사업추진을 제안함.
- [쌍방향 정보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의 행정·복지정보 및 서비스가 공급자(공공기관) 중심의 일방향적 흐름으로 편중되어 있음. 예를 들어, 민원24, 다누리 등 다문화가족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는 텍스트 위주의 인터페이스, 민원인(다문화가족)의 니즈에 대한 즉각적 해결이 어려움.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실제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와 쌍방향적 소통창구의 설치를 제안함.
-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활성화] 해외사례(아이즈대학, 이와테대학)에서 보듯, 중앙정부의 역할은 전반적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위주의 정책 수행이 강조됨. 특히, 지자체마다 현장의 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과 자질, 수요자의 요구도, 센터사업 및 행사 등이 다르므로, 서비스 제공요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이 필요. 이러한 지역문제의 실질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지자체-지역기업 주도의 협의체를 조직하고, 이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시스템 정립 필요

목차

요약문	i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4
4. 연구 기대결과와 활용방안	4
제2장. 다문화가족 자녀의 개념 및 현황	5
1. 개념 정의	5
2. 강원도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6
3.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현황	12
제3장.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 및 돌봄	17
1. 서론	17
2.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18
3.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정책 분석	20
4.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욕구: 2차 자료를 통한 욕구 파악	26
5. 강원도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욕구: 1차 자료를 통한 욕구 파악	30
제4장.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40
1. 서론	40
2.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다문화학생’) 현황	41
3.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정책 체계	48
4.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욕구: 2차 자료를 통한 욕구 파악	54
5.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욕구: 1차 자료를 통한 욕구 파악	66

제5장. 다문화가족 자녀 건강 및 보건	76
1. 서론	76
2. 다문화가족의 건강 관련 선행연구 분석	78
3.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 정책 분석	81
4.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87
5.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 및 보건 욕구, 건강지원사업 분석	90
 제6장. 결론	 101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01
2. 보육 및 돌봄 분야 주요 연구 결과	101
3. 교육 분야 주요 연구 결과	106
4. 건강 및 보건 분야 주요 연구 결과	110
5. 맺으며	114
 참고문헌	 116

표 목차

<표 2-1> 정부의 국내 이주민 지칭 용어와 내용	6
<표 2-2> 전국 외국인 주민현황(2018)	7
<표 2-3> 강원도내 주요 국적별 외국인주민수(2018)	8
<표 2-4> 강원도 시·군별 외국인주민 현황(2018)	9
<표 2-5> 전국 다문화학생 현황(2019, 명)	11
<표 2-6> 강원도 다문화학생수 추이(명)	11
<표 2-7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내용	14
<표 2-8> 강원도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영역별 실적	16
<표 3-1> 2019 강원도 다문화가구 현황	18
<표 3-2>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中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23
<표 3-3> 강원도청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분장	24
<표 3-4> 강릉시청 복지국 업무분장	25
<표 3-5> 다문화가족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	26
<표 3-6>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 돌봄 활동 분담	27
<표 3-7> 유아 자녀에 대한 부의 양육 참여	27
<표 3-8>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의 학교 정규수업 후 방치시간	28
<표 3-9> 영유아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	28
<표 3-10>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의 어려움	29
<표 3-11> 국내 거주 5~10년 미만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양육효능감	29
<표 3-12> 유아교육기관에서 다문화 영유아 적응의 문제점	30
<표 3-13>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육구 파악 전문가 조사 대상	31
<표 3-14> 다문화가족 어머니 조사 대상	35
<표 4-1> 강원도 다문화학생 초·중·고 재학현황(2019, 명)	41
<표 4-2> 강원도 다문화학생 도시-농촌 분포현황	42
<표 4-3> 강원도 다문화학생 재학 학교수 및 재학생 수 현황	42
<표 4-4> 강원도 다문화학생 지역별, 학년별 재학현황	43
<표 4-5> 강원도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자녀 지역별·급별 현황	44
<표 4-6> 강원도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 자녀 지역별·급별 현황	45

<표 4-7> 강원도 외국인자녀 지역별·급별 현황	45
<표 4-8> 강원도 다문화학생 부모 출신국별 총괄현황	46
<표 4-9> 강원도 다문화학생 부모 출신국별·유형별 세부현황	47
<표 4-10> 다문화가족 자녀(재학생)의 학교 적응정도	57
<표 4-11> 다문화가족 자녀(재학생)의 학업성적	59
<표 4-12>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 지원서비스 요구도(5점 척도)	62
<표 4-13>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지원지원시설 인지 및 이용 수준(%)	63
<표 4-14> 다문화학생의 사교육시간(주당 시간)	64
<표 4-15> 다문화학생의 희망교육 수준(%)	65
<표 4-16> 다문화가족 교육관련 욕구 파악 전문가 조사 대상	66
<표 4-17> 다문화가족 어머니 조사 대상	72
<표 5-1> 강원도 다문화가족 사업현황(2020년)	85
<표 5-2>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인지)건강상태	87
<표 5-3> 지난 1년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88
<표 5-4> 병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	88
<표 5-5> 지난 1년 지속적으로 2주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	89
<표 5-6> 건강관련 지원시설 이용경험	89
<표 5-7> 전반적인 건강상태	90
<표 5-8> 지난 1년 지속적으로 2주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배우자)	90
<표 5-9> 다문화가족 건강 및 보건 욕구-다문화가족 어머니 조사 대상	91
<표 5-10> 2020년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적(9월 기준)	97
<표 5-11> 2019년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적	98
<표 5-12> 2018년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적	99
<표 5-13> 2017년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적	100
<표 6-1>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및 돌봄 정책의 원칙	104
<표 6-2> 분야별 정책제언 요약	114

그림 목차

<그림 2-1> 강원도 ‘외국인주민’ 증가추이	8
<그림 2-2> 강원도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자녀 연도별 추이	10
<그림 2-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추진체계	13
<그림 3-1> 1·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교	21
<그림 4-1> 교육부 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목표와 추진과제	53
<그림 4-2> 다문화가족 만 6~24세 자녀 양육의 어려움(% , 중복응답)	57
<그림 4-3> 다문화 초,중등학생의 학교 부적응 이유(복수응답)(2015, 2018)	58
<그림 4-4>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고민거리(복수응답, %)	60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장기체류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이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결혼이민자 유입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점차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발생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¹⁾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귀화자를 포함한 전국의 이민배경을 가진 주민의 수는 2,054,621명으로서 전체인구의 4%에 해당함.
- 강원도에는 34,682명의 이민배경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 인구 대비 2.3%에 해당함. 이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의 수는 4,443명에 달함(교육부, 2019).
- 다문화가족 자녀는 부모의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개인적 편차가 존재하지만, 부모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그에 따른 사회적응의 어려움, 양육 태도 등에 따라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²⁾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학업·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중도입국청소년의 조기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정부의 외국인정책의 청사진인 「외국인정책기본계획」(법무부, 2018)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8)에서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제시되고 있음.
- 강원도는 비록 전국대비 이민배경 인구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도 인구규모 축소 및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중요한 정책적 대상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은 성공적 사회통합의 핵심지표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글로벌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1) 행정안전부가 집계하는 ‘외국인 주민’은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국적취득자 및 외국인주민 자녀(출생)를 포함함. 공표기관별 외국인 및 다문화 통계에 대한 비교는 송다영(2018)을 참고바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범위는 만24세이하로서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의 범위보다 넓음.

- 최근 우리 정부의 이민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은 지역기반의 특화된 서비스 개발과 운영(지역서비스 고도화)을 강조하고 있으며(법무부, 2018), 이런 맥락에서 지역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 특성,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기반의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됨.

2) 연구 목적

- 강원도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 및 제반 특성 파악.
- 강원도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 교육, 건강 관련 욕구 파악.
- 강원도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적응과 성장 지원을 위한 보육, 교육, 건강 관련 정책 개선 과제 및 제안 도출.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 다학문적 접근: 이민정책, 사회복지, 보건.
- 다면적 접근: 육아/돌봄, 교육, 건강.
- 지역기반 접근: 강원도의 특수성 및 지역성(locality)에 대한 강조.

2. 연구 내용

1) 강원도 이민배경 인구 및 다문화가족 자녀관련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

- 본 연구를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개념 정립.
- 강원도 이민배경 인구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과 특성 파악.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정책 분석.

2)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보육 및 돌봄’ 관련 현황, 욕구, 정책 분석

- 기존연구 검토를 통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특성 및 적응관련 문제 파악.
- 핵심 정보제공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가정 양육 현황, 자녀 돌봄의 분담 및 돌봄관행, 관련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한 정보수집.
-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다문화적 환경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고(어린이집안전공제회·한국보육진흥원, 2019), 영유아를 돌보고 양육하는 가정과 육아지원기관, 그리고 영유아와 부모를 둘러싼 지역사회

와 지자체의 바람직한 역할 도출.

- 강원도 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역량을 증진하여 미래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과 양육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3)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및 학교생활’ 관련 현황, 욕구, 정책 분석

- 외국인주민 통계(행정안전부, 2019), 교육통계(교육부, 2019) 등 각종 통계와 자료를 통한 강원도의 소위 ‘다문화학생’ 현황 파악.
- 기존연구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9) 등의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도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특성과 학업 및 학교 적응상의 문제점 파악.
- 도내 다문화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와 관련 서비스기관 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서비스 제공 실태, 미충족 욕구 및 정책 개선 요구사항 파악.
- 외국인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확대 및 적응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노력과 성과와 한계점 및 개선을 위한 제언 도출.

4)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건강 및 보건’ 관련 현황, 욕구, 정책 분석

- 강원도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조사.
- 도내 다문화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 분석: 강원도 다문화가정의 건강실태 및 서비스 요구도 분석.
- 전국 및 강원도 다문화가정 건강지원 정책사례 및 사업실적 조사.
- 강원도 다문화가정 건강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지원 개선점 및 중장기적 발전방안 제시, 강원도 지역특성에 부합한 다문화가정 건강관리 지원모델 및 서비스 대응전략 개발.

5) 분야별 자료분석 결과 통합

- 보육 및 돌봄, 교육 및 학교생활, 건강 및 보건 분야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 해석.
- 종합 해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개선 방안 취합.

3. 연구 방법

1) 2차 자료를 통한 분석

-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발표하는 각종 공식 통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보고서,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 도내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등).

2)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s)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부모) 10명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 6명 대상.
- 의료 및 보건 관련 전문가 2명 대상.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화, 서면,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 진행.

4. 연구 기대결과와 활용방안

1)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돌봄, 학업, 건강과 관련된 현황, 기존 제도의 문제점, 미충족 욕구 파악

2) 파악된 문제점과 욕구의 내용을 근거로 지역기반의 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교육, 건강과 관련된 기존 제도와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및 정책수립 방향 도출.
-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및 인력(보육/돌봄교사, 정규학교 교사, 보건/건강 전문가, 서비스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정책 대안 도출.
- 내국인과 이민배경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강원도민 일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협력 방안 마련.

제2장. 다문화가족 자녀의 개념 및 현황

1. 개념 정의

1) 이민배경 가족 관련 용어

- 국제결혼 및 국제이민을 통해 형성된 가족과 그 자녀들을 일컫는 표현들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으며, 용어의 혼란스러운 사용은 통계작성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이창원, 2015; 양계민, 2017; 송다영, 2018).
- 정부에서 법률(「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근거해 사용하는 용어에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이 있으며, 본 연구의 주 대상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용어로는 ‘외국인주민 자녀’(행정안전부), ‘다문화학생’(교육부), ‘이민배경 자녀’ 등이 있음.
- 아래 <표 2-1>은 정부에서 사용하는 이주민 관련 용어와 정의를 일괄함. 보는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음.

2)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 혼란스러운 용어사용과 정의로 인해 연구자들은 각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나름의 조작적 정의를 내려 연구를 수행할 수 밖에 없음.
- 본 연구는 국제이민과 결혼을 매개로 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을 주 대상으로 하되, 학령기에 속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어 범위와 정의에 있어 완벽히 일치하는 기존 용어가 없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서 사용되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이라는 표현과 직관적이면서도 미취학 및 취학 연령대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이라는 표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

<표 2-1> 정부의 국내 이주민 지칭 용어와 내용

용어	정의	근거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 ①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과, ②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①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②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주민	조사대상: ①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90일미만 단기 체류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동포 등), ②한국국적취득자(혼인귀화자, 그 외 국적취득자), ③외국인주민자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외국인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취득자’의 자녀 - 유형에 따라, ①외국인부모(부모가 모두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②외국인-한국인 부모(부모 중 한쪽이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 경우), ③한국인부모(‘출생시부터 한국인’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또는 모)가 이혼 후 ‘출생시부터 한국인이 아닌자’와 재혼한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	- 국제결혼가정 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국내출생자녀(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중도입국자녀(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부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교육부 「교육통계」,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다문화학생	다문화가정자녀 중 학령기(초,중,고)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처: 이창원(2015: 3)을 토대로 저자 일부 수정

2. 강원도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1) 강원도 ‘다문화가족’ 현황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만을 의미함으로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등의 여타 유형의 이민자로 구성된 가족은 배제되는 한계가 있음.
-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주민’의 개념은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비국적자)뿐만 아니라 귀화자와 한국국적을 보유한 국내출생 자녀들을 포함하고 있어 지자체의 이민관련 인구를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함.³⁾

○ 아래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기준 강원도 총 외국인주민수는 34,682명이며 도 전체 인구대비 2.3%를 차지함. 이는 전국대비 낮은 편에 속하며 서울이나 경기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그러나 <그림 2-1>이 보여주듯이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로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2-2> 전국 외국인 주민현황(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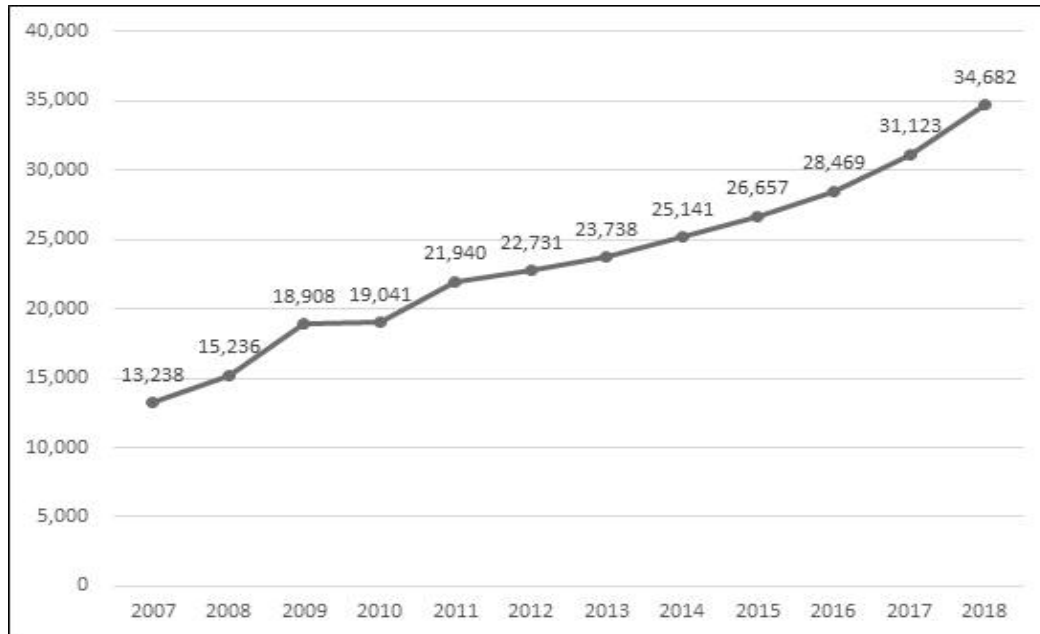
구분	총인구(A)	비율(B/A)	합계(B)		
			계	남	여
전국	51,629,512	4.0%	2,054,621	1,098,135	956,486
서울특별시	9,673,936	4.6%	446,473	210,415	236,058
부산광역시	3,395,278	2.1%	71,570	37,623	33,947
대구광역시	2,444,412	1.9%	47,017	24,117	22,900
인천광역시	2,936,117	3.9%	115,720	61,181	54,539
광주광역시	1,490,092	2.6%	38,698	19,943	18,755
대전광역시	1,511,214	2.1%	31,100	14,053	17,047
울산광역시	1,150,116	3.1%	35,249	19,555	15,694
세종특별자치시	312,374	2.6%	8,187	4,545	3,642
경기도	13,103,188	5.1%	672,791	376,838	295,953
강원도	1,520,391	2.3%	34,682	16,952	17,730
충청북도	1,620,935	4.2%	68,641	39,331	29,310
충청남도	2,181,416	5.4%	117,094	66,392	50,702
전라북도	1,818,157	3.1%	55,940	27,479	28,461
전라남도	1,790,352	3.4%	61,607	33,283	28,324
경상북도	2,672,902	3.5%	94,873	53,669	41,204
경상남도	3,350,350	3.7%	123,947	75,537	48,410
제주특별자치도	658,282	4.7%	31,032	17,222	13,810

주: 외국인주민=비국적취득자(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귀화자+외국인주민자녀

출처: 행정안전부(2019)

3) 법무부에서 집계하는 '체류외국인'에는 90일 이하의 단기체류자도 포함되는 반면, 행안부의 '외국인 주민'은 국적자(귀화자나 한국인의 자녀)를 '외국인'으로 칭하는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장기체류 이민배경 인구를 포함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이 개념도 거소 미등록 등으로 인해 지역에서 생활하는 실제 이주민들을 모두 통계에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2-1> 강원도 '외국인주민' 증가추이



출처: 행정안전부(2019)

-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이 한국계를 포함하여 총 5,316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이 각각 4,673명과 3,589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하면 네팔과 캄보디아가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큼.

<표 2-3> 강원도내 주요 국적별 외국인주민수(2018)

국적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전국	531,263	215,367	169,177	151,104	66,003	57,598	47,532	45,144	38,890	37,346
강원	2,223	3,093	4,673	3,589	1,184	700	858	1,000	781	1,362

출처: 행정안전부(2019)

- 시·군별로 보면 춘천시와 원주시에 각각 7,021명과 6,765명이 거주하여 타 시군 대비 월등히 높은 수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강릉시가 3,97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주민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대비 비율로 보면 고성군이 5.4%, 횡성군이 3.2%, 홍천군이 3.1% 등으로, 도 전체 평균인 2.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구규모가 작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욕구 및 정책 대응 필요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음.

- 유형별로 보아도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결혼이민자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704명이 거주하는 원주시이며, 춘천시가 608명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 그 외에도 홍천군, 삼척시, 속초시, 동해시도 약 200명 내외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됨.
- 특기할 점은 원주시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규모(1,312명)가, 춘천시의 경우는 유학생의 규모(2,268명)가 타 시·군대비 월등히 크다는 점임. 이는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원주와 대학이 밀집해 있는 춘천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표 2-4> 강원도 시·군별 외국인주민 현황(2018)

시/군	총계(B)	국적을 미소유자						국적 취득자(혼인 귀화 등)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시/군 인구(A)	비율(B/A)
		소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34,682	24,149	6,553	3,645	4,248	1,818	7,885	3,567	6,966	1,520,391	2.30%
춘천시	7,021	5,443	560	608	2,268	315	1,692	515	1,063	284,985	2.50%
원주시	6,765	4,533	1,312	704	511	469	1,537	818	1,414	344,168	2.00%
강릉시	3,976	3,007	609	406	686	237	1,069	329	640	215,528	1.80%
동해시	1,524	1,057	430	185	14	83	345	149	318	87,830	1.70%
태백시	653	340	68	102	0	23	147	101	212	43,488	1.50%
속초시	1,819	1,346	542	174	106	132	392	185	288	78,312	2.30%
삼척시	1,397	953	333	187	100	15	318	130	314	67,881	2.10%
홍천군	2,071	1,335	601	211	0	126	394	257	479	67,177	3.10%
횡성군	1,413	841	315	147	6	90	283	197	375	44,116	3.20%
영월군	818	485	69	115	0	49	251	101	232	36,762	2.20%
평창군	916	560	132	134	11	78	205	118	238	40,025	2.30%
정선군	789	364	53	134	0	35	140	135	290	35,580	2.20%
철원군	1,473	1,032	566	124	0	44	297	129	312	44,346	3.30%
화천군	580	355	141	85	0	15	114	67	158	23,950	2.40%
양구군	598	379	119	109	0	26	125	68	151	22,101	2.70%
인제군	747	456	187	78	0	25	166	105	186	30,373	2.50%
고성군	1,508	1,258	335	61	539	22	301	95	155	28,127	5.40%
양양군	614	405	181	81	0	34	109	68	141	25,642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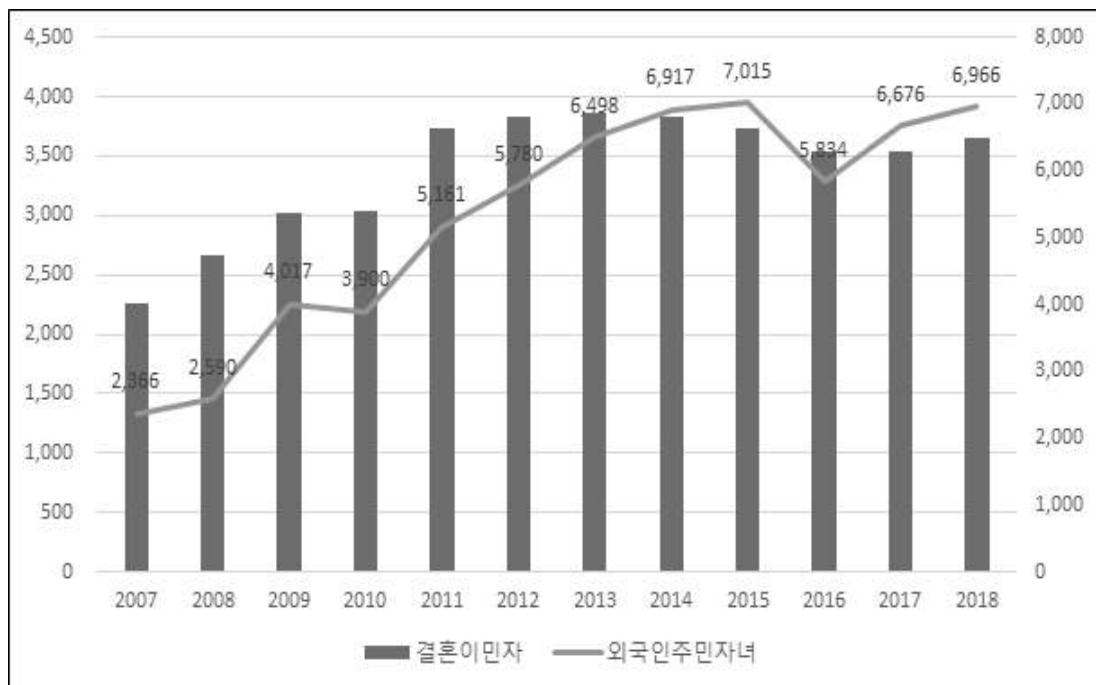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2019)

2)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은 두 가지로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음. 하나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한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교육부의 교육통계에 의거한 ‘다문화학생’ 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음. 특히 교육과 관련된 욕구 파악 및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다문화학생’ 자료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미성년자만 집계되며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를 포함함. 이 중 ‘외국인주민자녀(출생)’ 범주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 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른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 강원도의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6,966명이며, 지역별로 보면 춘천시(1,414명), 원주시(1,063명), 강릉시(640명) 순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위의 <표 2-4>참조).
-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강원도의 ‘외국인주민 자녀’ 수는 결혼이민자의 수의 변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결혼이민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이후로 등락은 있으나 추세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

<그림 2-2> 강원도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자녀 연도별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2019)

- 두 번째 개념으로, 교육부의 ‘다문화학생’은 학령기(초·중·고)에 해당하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중도입국)’과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하는 수치이며, 개념의 정의상 취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외되는 한계는 있음(양계민, 2017).
- 2019년 전국 다문화학생 수는 총 137,225명으로 전체 학생의 2.5%를 차지하는 규모이며(교육부, 2019),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표 2-5> 참조).

- <표 2-6>에서 보듯이 강원도의 다문화학생의 규모는 4,443명으로서,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다문화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학생 대비 비율도 전국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2-5> 전국 다문화학생 현황(2019, 명)

연도	전체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소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각종 학교	소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각종 학교	소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각종 학교	소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각종 학교
'19년	137,225	103,881	21,693	11,234	417	108,069	83,602	15,891	8,464	112	8,697	5,148	2,131	1,220	198	20,459	15,131	3,671	1,550	107
'18년	122,212	93,027	18,068	10,688	429	98,263	76,181	13,599	8,361	122	8,320	5,023	1,907	1,185	205	15,629	11,823	2,562	1,142	102
'17년	109,387	82,733	15,945	10,334	375	89,314	68,610	12,265	8,335	104	7,792	4,843	1,722	1,063	164	12,281	9,280	1,958	936	107
'16년	99,186	73,972	15,080	9,816	318	79,134	59,970	11,475	7,589	100	7,418	4,577	1,624	1,075	142	12,634	9,425	1,981	1,152	76
'15년	82,536	60,162	13,827	8,146	401	68,099	50,191	11,054	6,688	166	6,261	3,965	1,389	723	184	8,176	6,006	1,384	735	51
'14년	67,806	48,225	12,506	6,734	341	57,498	41,546	10,316	5,562	74	5,602	3,262	1,386	750	204	4,706	3,417	804	422	63
'13년	55,780	39,360	11,280	4,858	282	45,814	32,823	9,162	3,793	36	4,922	3,006	1,143	565	208	5,044	3,531	975	500	38
'12년	46,954	33,740	9,627	3,409	178	40,040	29,282	8,194	2,536	28	4,288	2,669	985	547	87	2,626	1,789	448	326	63

출처: 교육부(2019)

주 1) 다문화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제결혼가정 자녀 :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 국내출생 자녀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표 2-6> 강원도 다문화학생수 추이(명)

연도	전체 학생수	강원도 다문화학생수				강원도 비율	전국 비율
		초	중	고	계		
2010	214,916	1,356	293	79	1,728	0.8%	0.4%
2011	208,283	1,454	479	120	2,053	1.0%	0.6%
2012	201,546	1,591	643	188	2,422	1.2%	0.7%
2013	194,734	1,694	672	294	2,660	1.4%	0.9%
2014	189,355	1,920	716	444	3,080	1.6%	1.1%
2015	182,057	2,177	709	566	3,452	1.9%	1.3%
2016	174,530	2,542	714	602	3,858	2.2%	1.7%
2017	168,018	2,619	692	586	3,897	2.3%	1.9%
2018	162,074	2,794	751	578	4,123	2.5%	2.2%
2019	156,823	3,070	838	535	4,443	2.8%	2.5%

출처: 강원도교육청다문화센터, 한울타리, <http://damunhwa.gwe.go.kr>

3.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 기관 및 서비스 현황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목적 및 법적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해 설치·운영되는 가장 핵심적인 다문화가족 대상 지원서비스 전달기관임.

○ 설치 목적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법적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강원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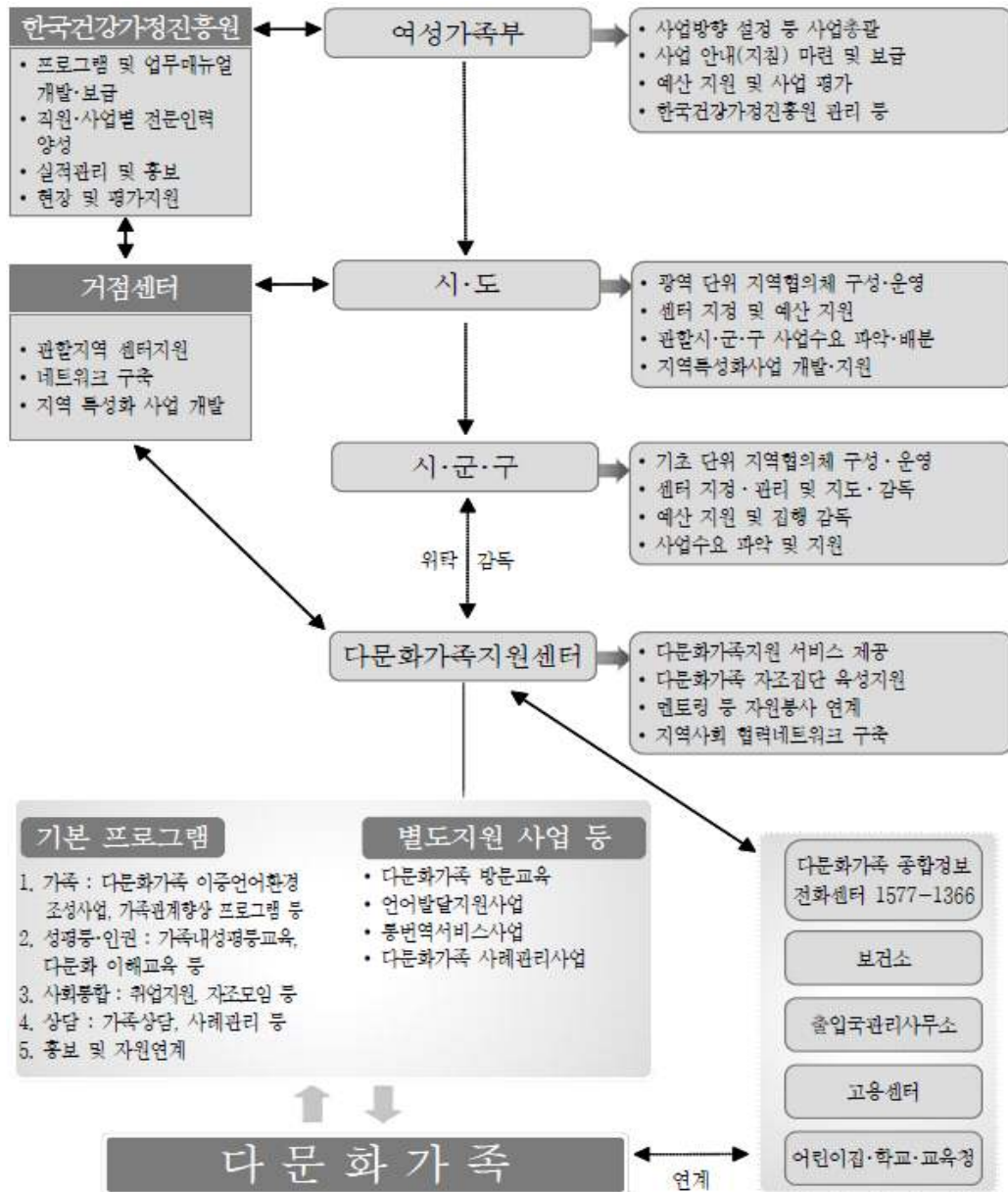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유형은 가형(센터 기본운영비 172,900천원)과 나형(센터 기본운영비 137,830천원)으로 구분되며, 전년도 사업실적 70%(센터 이용 결혼이민자 실인원 50%, 연인원 20%)과 관할지역 결혼이민자 및 자녀수 30%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지원함.

○ 주목할 점은 강원도에는 18개 시·군 모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합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개요

○ 추진 체계

<그림 2-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추진체계



출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은 크게 4개 영역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부모역할지원,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등 7개 사업은 필수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음.

- 영역에 맞는 기본사업은 지역적 여건, 특성, 수요에 따라 운영.
- 서비스 이용 제고를 위해 서비스 제공 시간을 주중, 야간, 주말 등 다양화하여 운영.

<표 2-7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내용

영역	기본사업	비고
가족관계	부모역할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노년기 부부지원, 아버지역할지원, 부부갈등예방 및 해결지원, 이혼위기가족지원, <u>다문화가족관계 향상 지원</u> , <u>다문화가족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u> , <u>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u> , 가족상담	교육, 상담(정보제공 및 초기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자녀돌봄지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교육, 상담(정보제공+초기상담 -> 전문상담), 돌보미 파견, 사례관리 등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사랑의 날, <u>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u>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주: 밑줄친 7개사업은 필수사업임

출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 다문화가족에 특화된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 대상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정체성·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기존 서비스 기관과 연계 등.
-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입국 초기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내·외부 자원 연계 등을 통한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서비스.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하여 통번역서비스를 지원 하는 사업.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기초 소양교육, 취업훈련 전문기관 연계, 자격증·면허증 반 운영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 한국생활 초기적응이 이루어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가 스스로 본인의 정착과정을 설계하고 관련서비스 탐색, 실행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4) 강원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적현황

○ 전국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전국 152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4개 사업영역의 총 참여인원은 4,063,660명으로, 센터 평균 참여인원은 26,735명이었음.
- 사업영역별 참여인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가족관계 664,160명(16.34%), 가족돌봄 752,386명(18.52%), 가족생활 343,096명(8.45%),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2,304,018명(56.70%)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영역이 가장 높았음.
- 남녀 성별에 따른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1,713,786명(42.2%)으로, 남성(658,628명, 16.2%)보다 여성이 약 2.6배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나머지 41.6%는 성별 비구분 프로그램).
- 가족구조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1,485,834명(43.85%) 참여하여 가장 많은 가족구조를 차지하고 있어, 통합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부모와 자녀 가족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사업 진행방법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진행방법이 교육인 회기에 참여한 인원이 1,147,997명(33.88%)으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문화 1,026,261명(30.28%), 공간운영 664,575명(19.61%)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전문상담 등의 유형은 매우 제한되었음.

○ 강원도의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영역별 실적과 그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사업영역별, 성별, 가족유형별, 서비스 전달방식 별 특성 등은 평균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동해시의 사업실적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원주시를 제외하고는 센터당 사업 실적이 전국평균보다 낮아 사업 활성화가 요구됨.

<표 2-8> 강원도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영역별 실적

소재지	통합연도	유형 ⁴⁾	총계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강릉시	'17	마	13,458	1,696	6,199	474	5,089
고성군	'17	마	16,683	3,253	1,877	1,860	9,693
동해시	'17	나	34,656	2,346	5,262	1,294	25,754
삼척시	'15	마	16,146	1,677	3,704	1,512	9,253
속초시	'16	나	10,315	1,210	1,509	1,231	6,365
양구군	'17	나	11,014	4,404	1,093	492	5,025
양양군	'18	마	5,768	1,092	1,032	119	3,525
영월군	'16	라	10,954	1,699	3,169	2,762	3,324
원주시	'16	다	26,503	2,113	14,974	1,754	7,662
인제군	'18	마	5,061	1,027	1,932	345	1,757
정선군	'18	마	9,578	3,485	1,421	449	4,223
철원군	'18	마	4,932	952	2,291	564	1,125
춘천시	'16	마	9,531	1,044	3,599	2,668	2,220
태백시	'18	마	8,417	2,666	1,519	2,331	1,901
평창군	'18	마	3,536	1,080	699	695	1,062
홍천군	'18	마	14,750	4,002	4,876	2,151	3,721
화천군	'18	마	3,184	1,529	1,355	0	300
횡성군	'18	마	15,241	1,389	4,196	1,450	8,206

출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4) 통합형의 경우 5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가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독립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형이 합쳐진 유형, 나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독립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형이 합쳐진 유형, 다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화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형이 통합된 유형, 라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화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형이 통합된 유형, 마형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단독으로 있다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된 경우나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액 지방비를 받은 센터인 경우에 해당

제3장.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 및 돌봄⁵⁾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영유아기는 인생 전반의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critical period)임은 많은 연구에서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임(Bailey, 2002; Mayberry & Eichen, 1991; Kuhl et al, 2005).
 - 실제로 미국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는 유아 프로그램에(preschool program) 1달러를 투자했을 때 사회 전반에 7.14달러의 환급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음(Reynolds, 2003).
 - 개인적으로는 영유아의 시기를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 학령기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인적자원으로의 성장으로 직결됨.
- 따라서 영유아의 보육과 돌봄 이슈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사회는 이들이 건강한 생애 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음. 특히나 다문화가족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결혼이민자 부모가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입국자여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보육·돌봄과 관련된 욕구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 그러나 국내 다문화가족 영유아 지원 정책의 현실은 이러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지 못함. 서문희 외(2010), 장명림 외(2011), 최은영(2015) 등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 모두에서 부족함을 강조하고 있음. 영유아 자녀를 둔 초기 정착 다문화가족의 경우 이민자 부모의 언어 역량 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학령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임.
- 또한 기존에 수행되었던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역시 다문화가족의 역동, 이민자 어머니의 역량 증진,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역량 및 부적응에 대한 주제가 중심이 되었을 뿐,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생 첫 단계인 영유아기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함.⁶⁾

5) 영유아에 대한 보육에 한정하며, 돌봄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함.

6)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검색결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전체 2,939건) 중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키워드로 한 연구는 61건임. 검색 일자 2020. 9. 1.

- 강원도 내 보육과 돌봄이 필요한 0~9세 연령 자녀는 2019년도 현재 5,300여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많지 않은 규모임. 그러나, 이들의 강원도 내 건전한 인적자본으로의 형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영유아자녀의 보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은 매우 절실함.

<표 3-1> 2019 강원도 다문화가구 현황

구분	총 가구원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	외국인(기타)
계	28,359	20,157	3,762	574
0~9세	5,349	5,273	58	18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고(어린이집안전공제회·한국보육진흥원, 2019), 영유아를 돌보고 양육하는 가정과 육아지원기관⁷⁾, 그리고 영유아와 부모를 둘러싼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바람직한 역할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강원도 내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역량을 증진하여 미래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과 양육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조례와 정책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챕터 구성

-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정책 분석
-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욕구: 2차 자료를 통한 욕구 파악
- 강원도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욕구: 1차 자료를 통한 욕구 파악
- 강원도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정책 제언(제6장 결론 참조)

2.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보육과 돌봄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 큰 주류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및 적응의 어려움에 대해 실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용현황을 분석하거나 효과성을 입증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음.

7) 본 연구에서 육아지원기관은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의미함.

1)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및 적응의 어려움

○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인지·언어 발달과 정서·사회 발달의 지연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서문희 외, 2010; 변영희, 2019; 전해정, 2007 등). 특히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적응적인 언어발달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주양육자(어머니)의 언어 능력과 양육행동, 가구의 사회경제적 취약성 등 아동을 둘러싼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성희, 2013).

○ 인지·언어 발달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음.

-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국내 저소득층 자녀의 언어지능 발달 수준을 비교한 전해정(2007)의 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언어지능 평균(표준편차)은 81.22(15.02)이고 국내 저소득층 자녀는 98.39(13.09)로 나타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언어지능이 국내 저소득층 자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생태적인 지적 능력이 국내 아동과 다르지 않음을 감안할 때, 국제결혼가정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적 환경이 주어져야 함을 시사하였음.
- 영유아 연령별로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일반 국내 가정의 언어발달 차이를 알아본 변영희(2019)의 연구에서 출생 직후인 1세와 2세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족 영유아간 언어발달 차이가 없었지만, 3, 4, 5세에서는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일반가정 영유아보다 언어발달이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문희 외(2010)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낮은 언어발달의 이유로, 한국어만의 사용을 강요하는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모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의 부재로 보고 있음.

○ 정서·사회발달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음.

- 영아 연령별로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일반 국내 가정의 사회성발달 차이를 알아본 변영희(2019)의 연구에서 출생 직후인 1세는 통계적 유의함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2, 3, 4, 5세의 영유아들은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족의 통계적 유의함이 나타났음. 특히 3~5세 다문화가족 유아는 .05 수준에서 국내 일반가정 아동과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 사회성 발달이 현저히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도시 및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강원도 내 도시 지역 및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짐.

○ 즉, 영유아를 보육하고 돌보는 데 있어 영유아의 역량보다 환경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며, 초기 아동기(early childhood)일수록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박순영, 이종인, 김희경, 2007).

2)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기관 이용 효과성

-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기관 이용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이 다수임.
 - 소도시 및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언어발달과 사회성발달을 측정한 변영희(2019)의 연구에서, 초기 영아기에는 언어발달과 사회성발달에 있어 국내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다가 그 차이가 2~3세쯤부터 벌어지기 시작하여 6세쯤에는 두 집단 간 격차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음.
 - 전라북도지역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양육환경과 발달상태를 연구한 박신규, 이성희(2015)의 연구에서도 육아지원기관 교사들의 평가 결과 아동의 재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해 정은희(2004) 연구에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언어능력 이해 표현에 있어 지체 비율이 높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일반 아동에 부합되는 발달 결과가 나타나 조기교육의 효과성을 강조하였음.
-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영유아 프로그램에는 한계점이 있음.
 - 영유아 대상은 언어발달이나 신체발달의 특정 사업에만 집중되고 있음(서문희 외, 2010)

3.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정책 분석

1) 범정부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정책 분석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과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었고, 2018년도에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되었음. 이에,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2018. 3.)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그림 3-1> 1·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교

구 분	그간의 정책	3차 기본계획('18~'22)
국제결혼	· 결혼이민관 파견 후 중지 · (女현지사전교육) 대면 · (男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 결혼이민관 파견 추진 · 교육방식 다변화(전화, 우편 등) · 시수 확대 및 인권·상호 존중교육 추가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상담소) 없음 · (보호시설) 운영 외국인등록해야 입소가능 · (퇴소 후) 임대주택 지원 · (자립지원금) 없음	→ · 종합상담소(상담, 법률, 의료, 치유, 통역 등) 신규 설치 추진 · 확대추진 외국인 등록여부 무관하게 입소 가능 · 확대 추진 · 신설추진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운영(5개 권역 대표) ·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다양화 사례관리 사업 및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확대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지역 대표성 확대(16개 시도 대표) ·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가능
다문화가족 자녀	·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예비학교 확대,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중심	→ ·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이 중언어 인재 양성 사업 글로벌 브릿지 사업 등 중점 추진 · 성장배경이 특수한 중도입국자녀 지원 강화 (레인 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 방식 다양화 취업사관학교 운영훈련과정 확대)
다문화 수용성	· 대상별(공무원 경찰 종사자 등) 다문화 교육 실시 중점	→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및 부처간 이해교육 협업체계 강화 · 지역사회 다문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포상,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확산
정책 추진체계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	→ · 위원회 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외국인정책위원회) 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실화(차우개선 지역 여건별 통합 추진 서비스 역량 제고)

출처: 여성가족부(2018)

○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그간의 성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수용성의 제고로 보고 있음(여성가족부, 2018). 또한 초기 적응 중심의 정책에서 장기정착화에 따른 재편의 필요성과 중장기 관점에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한계 및 향후 과제에 맞추어(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림 3-1>은 그간의 정책과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기본계획을 비교한 표임.

-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련된 그간의 정책과 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비교해 보면, 그간의 정책은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생활 초기적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음. 반면, 국제결혼 비중이 높았던 2005~2008년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학령기에 이르면 따라 초등기의 비중이 높아지고 더불어 중고생 비중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여성가족부, 2018), 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와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정책이 청소년기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이 맞추어지게 되었음.
- <표 3-2>는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분석한 것으로서,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다문화가족 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고용부, 법무부, 외교부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음.
 - 세부 과제들의 대상 연령층을 분석한 결과,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과 진로 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은 다문화가족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과제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학교밖 청소년지원과와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어, 학령기에 있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포함된 과제 중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만이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마저도 부모교육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직접 수혜 대상이 영유아자녀는 아니며, 교육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은 학령기에 있는 아동기 이상의 학생을 둔 학부모가 대상임.

<표 3-2>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中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명	내용	소관 부처	대상 연령
1.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	* 다재다능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성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 상담지원 강화	진로 및 진학 등 청소년기 고민해소를 위한 상담 및 자녀교육, 의사소통 등 해결을 위한 부모상담 지원	여성가족부·교육부	청소년기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양질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유관기관 등에서 주관기관의 특성에 맞게 추진	여성가족부	청소년기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 자녀양육 지원, 가족상담 등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 진로·진학 정보 영상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교육부	영유아기~청소년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를 통해 위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기
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이중언어 인재 양성 사업 내실화	- 이중언어 인재 DB 등록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여성가족부·교육부	청소년기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여성가족부·교육부	아동기~청소년기
글로벌브릿지 사업	* 글로벌브릿지 사업: 다문화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4개 분야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교육부	아동기~청소년기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청소년국가교류 및 해외자원봉사단	여성가족부·외교부	청소년기
3.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 기회 확대	- 진로체험지원센터 - 다문화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활성화	여성가족부·교육부	청소년기
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을 위한 진로활동실 확충 유도		교육부	청소년기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인턴 활성화	청년층 대상 차세대 무역전문인력 양성	KOTRA·외교부	청년기
직업교육훈련기관 운영 지원 및 우수 사례 발굴	다문화 청소년 특화 폴리텍 다솜학교	고용노동부	청소년기

(앞의 표에 이어)

과제명	내용	소관 부처	대상 연령
4.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수준 제고		여성가족부·교육부	청소년기
중도입국자녀의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	* 레인보우스쿨: 한국어,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 교우관계 개선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	여성가족부·법무부	청소년기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청소년기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지원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교육부	아동기~청소년기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및 내실화	*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지원	교육부	아동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취업사관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기

출처: 여성가족부(2018)에서 발췌 및 정리

2) 강원도 다문화가족 보육 및 정책 전달체계

- 강원도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업무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할하고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가족과, 보건정책과, 공공의료과, 식품의약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지역복지, 보육지원, 아동복지 등을 담당하며,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여성정책, 여성복지,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 더불어 건강가정지원업무와 한부모가정 지원등에 대한 업무도 같이 수행함.

<표 3-3> 강원도청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분장

과명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가족과	보건정책과	공공의료과	식품의약과
업무	복지기획 생활보장 지역복지 사회서비스원TF 보육지원 아동복지	경로정책 경로시설 장애인정책 장애인재활	여성정책 여성복지 다문화가족 청소년	보건행정 방역관리 건강증진 질병관리	공공의료정책 공공의료운영 응급의료	위생관리 식품안전 의약관리

출처: 강원도청 홈페이지(2020. 9. 1)

- 강릉시의 경우 복지국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아동보육과, 민원증명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성청소년가족과 건강가정팀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을 담당함.
- 한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정책, 보육지원 등의 업무와 취약계층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보육과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3-4> 강릉시청 복지국 업무분장

과명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아동보육과	민원증명과
업무	복지기획 지역복지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무장애도시	자활지원 조사관리 복지행정	어르신정책 어르신시설 어르신일자리 청솔공원	여성정책 건강가정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아동정책 보육정책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민원소통 시민소통 생활기반 기동처리반 가족관계 등록 주민등록

출처: 강릉시청 홈페이지(2020. 9. 1)

- 강원도와 강릉시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정책 추진 전달체계 및 업무분장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맡고 있음.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인데서 기인하는 것이겠으나, 보육 및 아동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복지정책과는 다른 노선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여성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업무를 맡다보니,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 영유아자녀에 대한 고려는 매우 미흡해 보임.
 - 강원도의 보건복지여성국이나 강릉시의 복지국 모두 영유아·아동·청소년·어르신 등 생애주기발달에 따라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경우 건강한 가정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한 대상으로만 보고 있을 뿐 생애주기발달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음.

4.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욕구: 2차 자료를 통한 욕구 파악

- 전국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한 여성가족부의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의 2010년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와 강원도와 비슷한 지역에서의 조사 결과 등 2차 자료를 통해 다문화가족 보육과 돌봄에 대한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검토하였음.

1) 보육 및 돌봄 현황

- 약 10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중 대부분인 76%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상당수인 20.2%의 다문화가족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여, 가정에서 충분한 인지적·정서적 자극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양육수당 지급과 연동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도 않고 양육수당을 받지도 않는 경우는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각 다문화가족에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표 3-5> 다문화가족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 돌봄 유형

단위: %, 명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냄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음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도 받지 않음	잘 모르겠음	합계
76.0 (78,520)	20.2 (20,850)	3.0 (3,131)	0.8 (844)	100.0 (103,345)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영유아의 의식주 활동과 놀이 활동에 대한 부모의 돌봄 활동 분담을 조사한 결과, 의식주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하는 비율이 8.7%에 불과하였고, 놀이와 관련해서는 11.5%로 나타났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대부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참여와 지원이 있을 때 역량이 배가가 될 수 있는 만큼 배우자가 자녀 돌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표 3-6>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 돌봄 활동 분담

단위: %, 명

	항상 내가	대체로 내가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배우자가	항상 배우자가	합계	평균
1) 의식주 활동	26.5 (21,272)	40.2 (32,316)	24.6 (19,791)	6.8 (5,437)	1.9 (1,518)	100.0	-0.83
2) 놀이 활동	15.8 (12,671)	32.8 (26,324)	40.0 (32,152)	9.9 (7,916)	1.6 (1,271)	100.0	-0.51

주: 부부가 똑같이 분담하는 것이 0점, -2점에 가까울수록 항상 내가, 2점에 가까울수록 항상 배우자가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다문화가족 내에서 유아 자녀에 대한 부의 양육 참여에 대해 조사한 또 다른 연구에서 역시 각 문항 모두 5점 만점 중 2점대로 나타났음.

- 특히 모든 문항에서 시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보다 군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서 부의 양육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 부모 모두 함께하는 영유아 자녀의 보육과 돌봄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표 3-7> 유아 자녀에 대한 부의 양육 참여

단위: 점

구분	밥 먹고 옷 입히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책 읽거나 공부 봐주기	등·하원 시키기	M(SD)
시	2.65	2.97	2.99	2.52	2.43	2.62(0.745)
군	2.60	2.81	2.89	2.44	2.39	2.55(0.777)
t	.283	.125	.086	.369	.514	.371

출처: 박순영, 이종인, 김희경(2007)

○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치시간을 조사한 결과 53.4%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방치된 평균 시간은 1.3시간으로 나타났음.

- 초등학교 저학년은 영유아시기 이후의 학령기 시기로, 학교와 가정간 돌봄의 공백을 줄임으로써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인지적·정서적 발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3-8>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의 학교 정규수업 후 방치시간

단위: %, 명, 시간

0시간	1~2시간	3~5시간	6시간 이상	합계	평균
46.6 (25,908)	32.4 (17,983)	19.8 (10,992)	1.2 (657)	100.0 (55,540)	1.30

출처: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 보육 및 돌봄 애로 사항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양육시 어려운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렵다는 비율이 양육비 지출(72.6%), 자녀 학습 지도(52.5%), 가족 내 양육방식 갈등(44.0%), 언어소통(38.2%)으로 나타났음(최윤경, 2010).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어려운 점은 언어적 배경이 다른데에서 비롯된다고 추정되어 언어에 대한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이 많음. 그러나 언어소통 외에도 양육비 지출, 학습 지도, 양육방식 갈등에 더 어려움이 있음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표 3-9> 영유아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

단위: %, 점

구분	전혀 없음	없음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	평균
언어소통	18.6	23.7	19.5	31.4	6.8	100.0	2.85
양육비 등 경제적 상황	5.1	3.4	18.8	42.7	29.9	100.0	3.89
가족내 양육방식 갈등	13.6	27.1	15.3	34.7	9.3	100.0	2.98
외국인이라는 선입견	10.2	44.9	11.9	21.2	11.9	100.0	2.80
아이의 외모 차이로 인한 사회적 적응	33.9	45.8	7.6	8.5	4.2	100.0	2.04
아이 돌봐주는 사람/보육시설 부족	22.0	34.7	12.7	22.9	7.6	100.0	2.60
자녀 학습 지도	16.9	17.8	12.7	33.9	18.6	100.0	3.19

출처: 최윤경(2010)

-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전국다문화가족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21.8%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제일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부모의 부재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으로 26.9%임.

-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이 잘 적응해 나가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모델로 정립하는 것도 다문화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외에도 비정기적이고 긴급한 시기에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함.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상시 이용 기관마저 예고 없이 등원을 금지하는 경우가 생기는 만큼,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돌봄받을 수 있는 대안을 지역사회에서 마련하여야 함.

<표 3-10>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 명

어려움 없음	자녀 양육에 대해 배우자나 가족과 의견 차이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	한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잘 모름	자녀 양육에 대한 내 의견을 주위 사람들이 무시	기타	합계
21.8 (18,507)	12.8 (10,876)	26.9 (22,877)	26.3 (22,321)	9.1 (7,689)	0.8 (691)	2.3 (1,986)	100.0 (84,948)

출처:여성가족부(2019)

-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국내 거주 직후 출산을 경험하는 만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게 된 지 5~10년임. 국내 거주 5~10년 미만 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은 5점 만점에 3점 후반대로서,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양육효능감은 보통 이상인 편임.

<표 3-11> 국내 거주 5~10년 미만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양육효능감

단위: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1)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잘 다룬다	0.4	4.6	24.1	45.0	25.9	100.0	3.91
2)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0.1	6.5	34.1	39.2	20.0	100.0	3.72
3) 나는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0.4	4.2	22.9	44.3	28.3	100.0	3.96

출처: 여성가족부(2019)

-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에게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기관에 적응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언어발달의 지연 36.4%, 가정환경의 차이 17.3%, 자신감과 자아정체성의 부족 13%, 부모의 관심 부족 10.5%, 학습의 지연 9.3%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경우 언어가 상이한 배경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국내 일반 아동들보다 한국어에 능숙치 못할 수 있음. 그러나 언어의 차이라는 요인을 제외하고 국내 일반 아동에 비해 가정환경의 차이, 자신감과 자아정체성의 부족, 부모의 관심 부족, 학습의 지연이 발견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3-12> 유아교육기관에서 다문화 영유아 적응의 문제점

단위: %(명)

구분	%(명)	구분	%(명)
자신감·자아정체성 부족	13.0(21)	신체적 발달의 지연	1.2(2)
원만한 교우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5.6(9)	부모의 관심 부족	10.5(17)
언어발달의 지연	36.4(59)	가정환경의 차이	17.3(28)
학습(인지발달)의 지연	9.3(15)	기타	6.8(11)
합계			100.0(162)

출처: 박순영, 이종인, 김희경(2007)

5. 강원도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욕구: 1차 자료를 통한 욕구 파악

1) 전문가 조사 결과

- 전문가 조사 대상은 <표 2-13>과 같음. 연구수행 기간 내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외부 출입자가 제한되어 비대면 조사로 수행함. 사전에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송부하여 응답을 받고 확인함.

<표 3-13>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육구 파악 전문가 조사 대상

구분	기관	직책	연령대	조사 방법
전문가 1	강원도 A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40대	서면 조사
전문가 2	강원도 B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40대	서면 조사
전문가 3	B시 M 어린이집	원장	40대	서면 조사

(1)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및 돌봄의 어려움

○ 양육 방법의 차이로 인한 가족간 갈등이 있고, 이로 인해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을 하게 됨.

- 시부모와 함께 살 경우에 육아 방법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함. (전문가 1)
- (영아의 경우) 양육과 훈육적인 부분에서,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는 언어가 느리고, 고집을 부릴 때, 육아에 대한 시부모님과 가족과의 갈등에서 힘들어하십니다. (전문가 3)

○ 양육에 있어 문화차이가 크며, 문화차이로 인한 문제 의식이 부재함. 자녀를 체벌한다거나 영유아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을 고국의 문화라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금기시되고 있는 양육 태도임.

-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과 관련해 문제시 되는 상황이 있지만 이민자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예를 들면, 핸드폰 및 티비에 어렸을 때부터 장시간 노출 시킨다던가, 발달단계에 따라 섭취해야 하는 음식이 있는데 특히 과자와 초콜릿, 심한 경우 커피를 먹는 등의 문제를 문제시 생각하지 않음. (전문가 1)
- 베트남 가정의 경우 따귀를 때리거나 체벌이 빈번하지만 일상적인 일이라 여기며 아동학대라 생각하지 않음. 필리핀 가정의 경우 어린나이(3세~4세경) 때부터 집안일을 하기에 집에서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당연함이 있음. (전문가 1)
- (유아의 경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문화적 정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전문가 3)
- 문화의 차이가 있다 보니 위생적인 부분에서 씻기지 않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3)

(2) 육아지원기관 이용

○ 다문화가족에서 영유아 자녀의 재원 기관을 선택하는 조건은 비용, 물리적 접근성, 이용시간 등임.

- 어린이집을 선호 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해서이며,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가정에서의 물리적 접근성이 높고, 입소하는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고 느낄 수 있음.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전문가 1)
- (유치원의 경우) 국립 유치원을 희망하시며, 경제적으로 비용이 저렴해서 선호하십니다. 또한, 맞벌이 다문화가족에서는 근무시간으로 오후 4시 이후, 늦게까지 자녀 돌봄이 가능한 곳을 희망 함. (전문가 1)

○ 대부분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는 초기입국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문화적인 차이, 교사와의 관계 미숙 등으로 영유아자녀를 기관에 보내면서도 어려움이 큼.

○ 또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맞벌이를 희망하는 곳이 많은데 부모님의 근로시간과 자녀 재원 기관의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 돌봄공백이 생길 수 있지만, 자녀를 맡아줄 인적 자원이 부재함.

- 영유아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는 대체로 초기입국자들로 언어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정통신문 이해 부분이 어려울 것 (전문가 1)
- 언어적인 소통이 어렵다 보니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 준비물 챙겨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 3)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대부분 등하원 시간이 8시 30분~18시 30분 사이로 공장근로시 자녀돌봄 공백이 있을 수 있음. (전문가 1)
- 친정이 없어 돌봄 공백 발생 시 인적자원이 없음. (전문가 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자녀를 기관에 보내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영유아자녀들은 발달 시기에 적합한 보육을 제공받으며 사회성 능력과 언어 능력이 향상되고,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됨. 동시에 결혼이민자 부모는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동안 한국어수업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근무를 할 수 있고, 다른 결혼이민자 학부모를 만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음.

- 또래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 발달 및 한국어 능력향상(전문가 2)
- 발달 시기에 적합한 보육을 제공받으며 사회성, 언어가 발달. (전문가 3)
- 긴 돌봄 시간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며 바른 기본생활습관들. (전문가 3)
- 기관을 보내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센터에서 한국어수업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전문가 2)
- 근무시간 중 아이를 맡길 곳이 있다는 점에 만족해하십니다. 또한, 기관을 통해 다른 다문화가족 엄마들과 만날 수 있는 점 (전문가 1)

(3)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및 돌봄과 관련 정책의 개선 사항

○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정책까지 진행되고 있지는 못함. 부부교육과 부모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정책과 유인책이 필요함. 대부분 결혼이주자의 경우 초산 연령이 낮아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양육 방법 등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생각됨. 이에 기본적으로 자녀 돌봄에 있어 필요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양육의 기본기를 갖추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교육은 부부가 모두 이수함이 필요함. (전문가 1)

○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의 정책 개선

-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주자만을 대상으로 하나, 대부분의 결혼이주자는 결혼 후 바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져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음.
- 다문화가족 영유아 학습지 지원사업(강원도 사업)은 주 1회 방문, 10분 수업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횟수와 시간을 늘려야 함.
- 다문화가족의 경우 기관의 접근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방문지도서비스가 매우 유용할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용하기 어려움.
- 근로중인 다문화가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을 다각화해야 함.

-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 초에 곧바로 임신, 출산으로 이어져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취업을 하여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자체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입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1)

- 강원도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7세 아동에게 학습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으나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이유는 학습지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1회 방문 시 10분~15분 정도 가르쳐 주며, 숙제를 내주고 있는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숙제를 봐 줄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중략)...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이 바라는 점은 잠깐 집에 와서 아이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40분~1시간 정도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아이 학습을 도와주면서 가정통신문 및 준비물 등도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전문가 2)

- 방문지도사들이 하는 자녀생활서비스는 소득판정에 의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다문화가족에서 이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한 예로 가족역량강화사업은 강원도에 원주, 강릉, 동해, 삼척센터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득판정에 의한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100%지원으로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집으로 배움지도사가 방문하여 학습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습능력도 많이 향상되고 성적도 올랐다고 부모님들과 대상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전문가 2)
- 취업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현 센터 프로그램들은 아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낮에 집중되어 진행을 하고 있다. (전문가 2)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지역 간 격차 제고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함(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교육-예를 들면,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말이 늦다, 지저분하다 등) (전문가 3)
-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인식개선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1)
-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은 매우 수준이 높은 편이나 도시와 농어촌간의 지원 환경 및 정보제공의 개인차가 매우 커서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자녀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준비할 때 환경적으로 불균등하다고 생각함. (전문가 3)

(4)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역량

○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모두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역량에 주목하고 있었음.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특히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분절적이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한국과 모국의 문화, 언어를 영유아기부터 학습하기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가진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소수 민족의 언어는 희소성도 높을 수 있기에 다양한 언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1)
-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일반아동들과 같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결핍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들이 믿고 따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기관들이 소속된 정부부처의 정책이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 때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가장 행복해 지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 2)
- 언어에 대한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 (전문가 3)

2) 다문화가족 어머니 조사 결과

- 다문화가족 어머니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음. 연구수행 기간 내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비대면 조사로 수행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에 e-mail로 질문지를 보낸 뒤, 전화로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연구 철회 및 익명으로의 조사 참여 등 연구 윤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고 난 후 면담을 수행하였음.

<표 3-14> 다문화가족 어머니 조사 대상

구분	출신 국가	자녀 연(학)령	조사 방법
어머니 1	베트남	3세	전화 조사
어머니 2	중국	4세, 1세	전화 조사
어머니 3	베트남	7세, 3세	전화 조사
어머니 4	일본	13세, 9세	전화 조사
어머니 5	베트남	8세, 12세	전화 조사
어머니 6	베트남	6세	전화 조사

주: 번호는 면담이 진행된 순서대로 임의 부여됨.

(1)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언어소통(이중 언어 양육환경), 양육효능감 부재, 대체 돌봄의 부재,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하기 어려운 상황, 양육비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였음.

- 병원 가서 한국어로 설명하는 게 힘들어서 남편이 도와줘야 해요. 제가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 다 어려워요. 방법도 어려워서 남편이 같이 가야 하고 혼자 가면 쉽지 않아요. (어머니 1)
- 아기가 모르는 단어를 물어봐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어머니 3)
- 저는 제가 스트레스받으면 아기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돼서 답답해요. 그런데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어린이집에 못 가서) 아기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날이 갈수록 힘들어요. (어머니 1)
-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아기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이 스트레스받는 게 일을 못 하는 거, 24시간 아기만 케어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육아 맘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아기를 맡기기에 안심이 되는 기관이 있으면 여자들이 아기 낳아도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머니 2)

- 돈 때문에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들어서요. (어머니 3)
- 애를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애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아들 보면서 그거는 제일 걱정이고 언어도 언어겠지만 내가 처음 아이를 안는 순간부터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하는 건지... (어머니 5)
- 아이가 이중언어라서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생활은 한국말 쓰는데 나가자마자 저랑 베트남 말해요. 그래서 어떤 언어인지 제가 만약에 ‘한국말 이거 뭐야’ 이런 거는 내가 모르는 거를 애가 통역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애기가 베트남 말 잘 모를 때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많이 편해졌어요. (어머니 6)

(2) 영유아 자녀 양육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원

○ 이처럼 영유아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움은 많으나,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경우 도움이나 정보를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함.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주민센터와 같은 전달체계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이상 때때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보통 남편이 도와줘요. (어머니 1)
-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동서한테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정부는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지 애매해요. (어머니 2)
-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아기랑 한 번만 갔어요. 검사를 해서 한번 가서 받았는데 아직 참여하는 프로그램 같은 건 없어요. (어머니 2)
- 여기저기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전화하고 대기신청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외국인한테는 힘들어요. (어머니 2)
- 다문화 선생님도 도와주세요. 아기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 알려줬어요. 돌보는 것, 3살, 4살, 5살 이렇게 달라진다는 점ियो. 가끔 만나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면서 알려주세요. (어머니 3)
- 제도가 있어도 알기가 어려우시니까, 남편이 해주면 하는 거고 안 해주면 안 하는 거고 (어머니 4)
- 처음에는 주로 남편이나 시누이나 주변에 한국에 먼저 들어온 일본친구들,,, 그때는 (정보 얻기가) 어려웠던 거 같아요. (어머니 4)
- 시어머니가 계셔가지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다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도 씻겨주고 아이도 봐주고 같이 조금 조금씩 해서 저도 이제 아이도 키우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문화도 배우고 점점 나아지는 거죠. (어머니 5)
-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오래 되서... 온지 얼마 안 되서 애기 낳고 사실은 병원에서 다 간호사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 와서도 그때 맡은 잘 안 통하지만 애 키우는 방법은 그냥 인터넷에서 보거나 아니면 그 새로운 친구 그때 새로운 친구 한명 생겼어요. 그 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6)

- 저희 시어머니 계신데 또 나이 좀 있어서 병도 걸리시고 아무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그래서 큰형님이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어머니 6)

(3)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게 된 이유

- 어머니 1의 경우 자녀가 20개월, 어머니 2의 경우 자녀가 15개월, 어머니 3의 경우 자녀가 2살 때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였다고 응답함.
- 응답자 모두 자녀가 한국어를 잘 배우기를 위해 육아지원기관에 보내게 되었다고 응답함.

- 한국은 다 일찍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둘 지나면 보내는 거로 알고 있어서 둘 지나서 보내려고 했는데 첫째는 늦게 보냈어요. (어머니 2)
- 우리 아이는 집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워요. 아이 아빠가 일 때문에 좀 바쁘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해요. (어머니 1)
- 가면 한국말 잘할 수 있으니까 보냈어요. (어머니 2)
- 친구들하고 같이 놓고, 또 한국어도 배우려고요. (어머니 3)

(4) 어린이집/유치원 선정 조건

- 다문화가족에서 육아지원기관의 선정 조건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물리적 접근성임. 운전능력의 미숙, 근무지와 가까움 등이 이유였기 때문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외에도 그밖에 전달체계(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 등)도 다문화가족 어머니에게는 물리적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음.

- 제가 지금 운전 못 하니까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무슨 일 생기면 아이 아빠가 집에 없어도 빨리 갈 수 있고 다른 베트남 엄마도 그렇게 해요. (어머니 1)
- 가까운 것을 원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동네예요. 일하는 곳이란 어린이집이 가까워서 안심돼요. (어머니 3)

(5)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며 만족하는 점

- 자녀를 육아지원기관에 보내게 된 이유는 자녀의 한국어 증진이었지만, 그 외에도 친구들과의 교제, 사회성 발달, 기본생활습관 형성, 자녀의 발달상황에 대한 선생님의 상담, 어머니의 취업 시간 확보 등 만족스러운 점이 많음.

- 어린이집 보내서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한국어 배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아기가 어린이집 가서 성격이 조금 좋아졌어요. 전에는 제가 아이 밥을 먹여줬는데 지금은 혼자 먹어요. 그리고 인사도 잘하고요. (어머니 1)
- 거의 한 달, 두 달 한 번씩 전화하고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많이 알려주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행동들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어머니 2)
-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어머니 3)

(6)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며 어려운 점

○ 자녀를 육아지원기관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도 있는데, 주로 의사소통과 관련한 것으로서 가정통신문의 해독이나 특별활동 선택 등에 있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음.

- 일주일 학습 있잖아요. 그거 외국인한테 어려워요. 저도 가끔 새로운 말이 나와서 검색해야 해요. 사전 봐도 모르는 경우 많아요. 근데 만약 한국어 많이 못 하는 엄마들이면 사전 봐도 몰라요. (어머니 1)
- 특별활동 같은 거 있을 때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있어서 선택할 때도 뭐 때문인지 다 얘기 안 해줘서 되게 어려웠어요. (어머니 2)

(7) 자녀를 키우면서 걱정되는 점

○ 다문화가족에서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언어발달·사회성발달 등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원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자녀의 발달이 지체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음.

○ 또한, 어떤 곳에서도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에 다녀야 할 기관이나 학교, 교육과정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본인과 자녀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막막하고 걱정된다고 함.

- 아기가 베트남어 모국어로 가르쳐졌는데 베트남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한국에 와서 아기가 한국말보다 베트남 말을 더 잘해요. 그래서 한국말이 다른 친구보다 늦어서 그게 걱정돼요. (코로나-19 상황때문에) 어린이집도 안 가고 아빠도 일하고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어머니 1)
- 한국에서 초등학교 엄청 일찍 끝난다고 하니까 그런 게 걱정돼요. 학원 보내야 한다고 하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학원 보내는 거요. 한국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보낸대요. 학교에서 한글 같은 것은 안 가르쳐준다고, 학원에서 배우고 간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도와주면서 하는 거데 그런 거는 꼭 필요해서 보내야 하는지 그런 게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정부에서 지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르기가 너무 어렵고 뭐가 필수인지

그런 거 모르고 다른 한국 엄마들보다 못하잖아요. 또 한글도 모르고 하니까 아기가 자신감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아기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고 안 좋은 길로 갈까 봐 걱정돼요. (어머니 2)

- 그래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잘 몰라서)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2)

(8)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필요한 지원

○ 다문화가족에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다음과 같음.

- 자녀가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육아지원기관 신청 방법,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 연령별 발달특성 등 결혼이주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 지원
- 양육비의 지원

- 다문화센터나 베트남 수업 있으면 좋아요. 집에 저 혼자만 있을 때는 통화하기(베트남어를 가르치기) 어려워요. (어머니 1)
- (자녀가)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3)
- 다문화 아이니까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1)
- 다문화 아이들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아이들이랑 같이 참여하면서 놀 수 있는 공통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2)
- 임신했을 때나 아이가 어릴 때 한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미리 설명해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고르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이가 5살이 되면 유치원도 보내야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기저기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전화하고 대기신청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서 알려주지 않으니깐, 외국인한테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게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12시에 끝나고 학교 일찍 끝난다는데 학원 보내면 학원 비용도 부담스럽고 저희가 어디에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첫 번째 어린이집 보낼 때 실패해서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아기와 맞는 곳을 보내야 하는데 여기서 같이 키우는 친구들도 없고 정보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고 문제가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어머니 2)
- 돈 지원이 가장 필요해요. (어머니 3)

제4장.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1. 서론

1)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문제의 중요성

- 본 장은 강원도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관련 현황, 지원체계, 욕구 파악을 토대로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학업·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중도입국 청소년의 조기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정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법무부, 2018),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8)에서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제시되고 있음.
- 강원도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제2장 참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자체 소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증가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님.
- 결혼이주민 가족형성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점차 학령기로 진입하고 상급학교 진학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적응과 발달과 관련된 제 측면 가운데, 학습과 학교생활 등 교육관련 문제가 핵심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개인적인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증연구에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학생들이 영유아기 언어발달 지연의 결과가 취학기 학업상의 어려움과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음.
-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제도들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12년 교육부가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장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학업과 학교생활)관련 현황과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기존연구와 관련자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를 분석하여 미충족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과 챕터 구성

- 현황파악: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다문화학생’) 현황 파악.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정책체계: 범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지원체계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지원체계,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체계.
- 문제점 및 욕구 파악: 기존 연구 등 2차 자료에 의한 문제점 및 욕구파악, 1차 자료(면접 및 자문)에 의한 문제점 및 욕구파악.
- 연구결과에 의거한 정책제언(제6장 결론 참조).

2.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다문화학생’) 현황

1) 총괄

- 2019년 4월기준 강원도의 다문화학생은 총 4,443명이며, 절대다수(4,151명)는 국제결혼에 의한 국내출생자녀이며 중도입국 자녀는 166명임.
- 급별 분포를 보면 초등학생이 3,070명으로 강원도 다문화학생의 69%를 차지하고 있음. 이를 볼 때 현재로선 초등학생이 핵심적인 서비스 대상이 되어야 하겠으나 3천 명에 달하는 다문화학생들이 불과 수 년 안에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됨에 따라 학업과 교우관계 등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표 4-1> 강원도 다문화학생 초.중.고 재학현황(2019, 명)

구 분		초	중	고	계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자녀	2,893	769	489	4,151
	중도입국자녀	83	48	35	166
외국인가정자녀		94	21	11	126
계		3,070	838	535	4,443

출처: 강원도교육청다문화센터, 한울타리, <http://damunhwa.gwe.go.kr>

- 도-농간 분포를 보면 61%의 다문화학생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도시 지역 거주자들과는 달리 서비스 접근성 등이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요구됨.

<표 4-2> 강원도 다문화학생 도시-농촌 분포현황

도시	농촌	합계
1,732(39.0%)	2,711(61.0%)	4,443(100%)

출처: 강원도교육청다문화센터, 한울타리, <http://damunhwa.gwe.go.kr>

- 다문화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수 및 학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도내 초중고 학교 중 다문화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비중은 89%로서 거의 모든 학교에 다문화학생이 재학중인 것으로 드러나 다문화학생 관련 문제의 보편성을 알 수 있음.
- 전체 학생수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중은 평균 2.8%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4.0%, 중학교 2.2%, 고등학교 1.3%로서 급별 차이가 존재함.

<표 4-3> 강원도 다문화학생 재학 학교수 및 재학생 수 현황

구분		초	중	고	합계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내출생 재학 학교수	344	137	90	571
	중도입국자녀 재학 학교수	46	24	18	88
외국인가정 자녀 재학 학교수		46	13	10	69
전체 학교수		378	162	116	656
다문화학생 재학 학교수 (전체 학교수 대비 비율)		348 (92.1%)	142 (87.7%)	93 (80.2%)	583 (88.9%)
전체 학생수		76,356	37,837	42,630	156,823
다문화학생 수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		3,070 (4.0%)	838 (2.2%)	535 (1.3%)	4,443 (2.8%)

출처: 강원도교육청다문화센터, 한울타리, <http://damunhwa.gwe.go.kr>

2) 지역별-유형별 총괄현황(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자녀, 2019년 기준)

- 시·군별 다문화학생의 현황을 보면 원주에 가장 많은 867명의 다문화학생이 재학중이었고, 다음으로 춘천 674명, 홍천 377명, 강릉 326명 순이었음.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등학교 재학 다문화학생 수가 가장 많으며, 초등학교 학년별로 보면 2학년 재학생 수가 557명, 3학년 532명, 1학년 528명으로 고학년 대비 저학년 학생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임.

<표 4-4> 강원도 다문화학생 지역별, 학년별 재학현황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춘천	83	91	79	77	71	49	450	44	41	44	129	19	37	39	95	674
원주	85	106	119	107	100	130	647	52	48	50	150	25	28	17	70	867
강릉	54	42	47	40	34	27	244	12	17	21	50	13	10	9	32	326
속초양양	25	44	29	34	27	25	184	11	10	11	32	15	8	13	36	252
동해	22	32	21	27	15	12	129	8	6	4	18	3	2	3	8	155
태백	19	16	10	21	13	8	87	4	6	3	13	4	5	4	13	113
삼척	29	30	23	18	23	16	139	9	8	14	31	3	7	6	16	186
홍천	34	39	31	31	44	39	218	29	38	32	99	18	22	20	60	377
횡성	27	31	27	39	32	39	195	27	21	13	61	11	10	15	36	292
영월	17	23	22	15	16	23	116	14	7	11	32	7	8	1	16	164
평창	28	11	20	18	12	20	109	14	15	16	45	6	16	9	31	185
정선	26	27	28	37	20	22	160	10	14	6	30	8	10	8	26	216
철원	16	16	27	18	23	20	120	13	15	17	45	5	8	5	18	183
화천	22	12	7	4	4	11	60	4	5	11	20	16	7	7	30	110
양구	13	11	13	9	14	13	73	7	13	17	37	9	5	9	23	133
인제	17	12	16	6	11	10	72	4	10	13	27	6	5	6	17	116
고성	11	14	13	12	10	7	67	5	6	8	19	4	1	3	8	94
계	528	557	532	513	469	471	3,070	267	280	291	838	172	189	174	535	4,443

출처: 강원도교육청다문화센터, 한울타리, <http://damunhwa.gwe.go.kr>

- 다문화학생 유형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에서 국내출생한 자녀의 지역별, 급별, 학년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원주와 춘천에 약 1,400명의 다문화학생이 거주하고 있어 타 시군과의 편차가 큼. 이는 결혼이민자 규모의 지역별 편차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특기할 점은 홍천의 경우 총 다문화학생수가 354명에 달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의 규모도 춘천이나 원주의 사례에 근접할 정도로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4-5> 강원도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자녀 지역별·급별 현황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춘천	71	87	64	69	66	44	401	41	36	39	116	16	32	36	84	601
원주	76	98	112	100	94	121	601	46	43	46	135	21	24	16	61	797
강릉	51	38	42	40	26	23	220	11	11	21	43	9	5	6	20	283
속초·양양	25	42	26	31	25	22	171	11	9	9	29	12	8	12	32	232
동해	20	31	21	24	15	12	123	7	6	4	17	2	2	3	7	147
태백	19	16	8	21	12	7	83	3	5	2	10	4	4	4	12	105
삼척	29	30	23	18	23	16	139	8	8	13	29	3	7	6	16	184
홍천	33	37	30	30	40	37	207	29	35	24	88	18	21	20	59	354
횡성	27	31	25	38	32	38	191	27	21	13	61	9	9	15	33	285
영월	17	23	22	14	16	22	114	14	6	10	30	7	8	1	16	160
평창	25	11	18	16	12	20	102	14	14	14	42	6	15	9	30	174
정선	26	27	28	37	20	21	159	9	13	5	27	7	10	8	25	211
철원	16	16	27	17	21	20	117	13	15	17	45	5	7	5	17	179
화천	22	12	7	3	4	11	59	3	4	7	14	16	7	7	30	103
양구	11	10	13	8	13	12	67	7	13	17	37	9	4	9	22	126
인제	17	12	16	6	11	10	72	4	10	13	27	6	5	6	17	116
고성	11	14	13	12	10	7	67	5	6	8	19	4	1	3	8	94
계	496	535	495	484	440	443	2,893	252	255	262	769	154	169	166	489	4,151

출처: 강원도교육청다문화센터, 한울타리, <http://damunhwa.gwe.go.kr>

- 국제결혼가정 자녀중 중도입국한 자녀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중도입국 자녀의 규모는 춘천과 원주의 경우도 50명 미만이며 대부분 한 자리대 인원이거나 전혀 없는 시군도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입국 자녀가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한 경우 한국어 습득이 국내출생 다문화학생들에 비해 늦어지고, 학업 수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교육 지원 서비스 욕구는 오히려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음.
-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중도입국 자녀의 상이한 성장배경으로 인한 가중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을 지원 대책이 대거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8).

<표 4-6> 강원도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 자녀 지역별·급별 현황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춘천	6	2	5	6	4	3	26	2	1	5	8	2	3	3	8	42
원주	5	2	4	4	6	6	27	4	5	4	13	3	3	1	7	47
강릉	0	1	3		2	1	7	0	2	0	2	3	3	3	9	18
속초양양	0	2	1	2	2	3	10	0	1	1	2	3		1	4	16
동해	0	1	0	1	0	0	2	0	0	0	0	0	0	0	0	2
태백	0	0	2	0	1	0	3	0	1	0	1	0	1	0	1	5
삼척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1
홍천	0	1	1	1	0	0	3	0	3	8	11	0	1	0	1	15
횡성	0	0	1	0	0	0	1	0	0	0	0	2	1	0	3	4
영월	0	0	0	0	0	1	1	0	1	1	2	0	0	0	0	3
평창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정선	0	0	0	0	0	1	1	0	1	1	2	0	0	0	0	3
철원	0	0	0	1	1	0	2	0	0	0	0	0	1	0	1	3
화천	0	0	0	0	0	0	0	1	1	4	6	0	0	0	0	6
양구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1
인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11	9	17	15	16	15	83	7	16	25	48	13	14	8	35	166

출처: 강원도교육청다문화센터, 한울타리, <http://damunhwa.gwe.go.kr>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양측이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자녀’는 규모가 미미하나 중도입국 자녀와 같이 맥락에서 이들의 욕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4-7> 강원도 외국인자녀 지역별·급별 현황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춘천	6	2	10	2	1	2	23	1	4	0	5	1	2	0	3	31
원주	4	6	3	3	0	3	19	2	0	0	2	1	1	0	2	23
강릉	3	3	2	0	6	3	17	1	4	0	5	1	2	0	3	25
속초양양	0	0	2	1	0	0	3	0	0	1	1	0	0	0	0	4
동해	2	0	0	2	0	0	4	1	0	0	1	1	0	0	1	6
태백	0	0	0	0	0	1	1	1	0	1	2	0	0	0	0	3
삼척	0	0	0	0	0	0	0	1	0	0	1	0	0	0	0	1
홍천	1	1	0	0	4	2	8	0	0	0	0	0	0	0	0	8
횡성	0	0	1	1	0	1	3	0	0	0	0	0	0	0	0	3
영월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1
평창	3	0	2	2	0	0	7	0	1	2	3	0	1	0	1	11
정선	0	0	0	0	0	0	0	1	0	0	1	1	0	0	1	2
철원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1
화천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1
양구	2	1	0	1	1	1	6	0	0	0	0	0	0	0	0	6
인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21	13	20	14	13	13	94	8	9	4	21	5	6	0	11	126

출처: 강원도교육청다문화센터, 한울타리, <http://damunhwa.gwe.go.kr>

3) 부모 출신국별 현황(2019년 기준)

- 부모의 출신국별 다문화학생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이 1,457명으로 전체 강원도 다문화학생의 32.8%를 차지함. 다음으로 필리핀 출신이 813명(18.3%), 중국출신 616명(14.1%)으로 10%를 상회하고 있음.
- 비록 규모가 크진 않지만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 몽골, 아프리카 출신의 부모들도 존재하는 만큼, 자녀들의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교육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고 전달 할 것이냐는 매우 큰 도전이 될 수 있음.

<표 4-8> 강원도 다문화학생 부모 출신국별 총괄현황

국가	인원수	비율(%)	국가	인원수	비율(%)
베트남	1,457	32.8	몽골	71	1.6
필리핀	813	18.3	러시아	43	1
중국	626	14.1	대만	27	0.6
일본	429	9.7	미국	26	0.6
중국(조선족)	304	6.8	유럽	13	0.3
기타	223	5	인도네시아	7	0.2
중앙아시아	170	3.8	아프리카	7	0.2
남부아시아	122	2.7	오세아니아	3	0.1
태국	102	2.3	계	4,443	100

출처: 강원도교육청다문화센터, 한울타리, <http://damunhwa.gwe.go.kr>

- 부모출신국별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의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총량적으로 볼 때 베트남, 필리핀, 중국 출신의 부모를 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유형별로 학급별로 소수 문화나 언어 배경을 고려한 서비스 욕구가 존재할 수 있음.

<표 4-9> 강원도 다문화학생 부모 출신국별·유형별 세부현황

구분	국가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계
국제결혼가정자녀	일본	147	110	171	428
	중국	412	120	63	595
	중국-조선족	189	75	30	294
	대만	14	5	7	26
	몽골	39	10	3	52
	필리핀	418	220	173	811
	베트남	1,272	144	32	1,448
	태국	41	37	24	102
	인도네시아	5	1	1	7
	남부아시아	110	5	1	116
	중앙아시아	93	47	7	147
	미국	19	3	1	23
	러시아	17	17	2	36
	유럽	7	2	2	11
	아프리카	1	1	0	2
	오세아니아	3	0	0	3
	기타	189	20	7	216
	국가합계	2,976	817	524	4,317
	국내출생	2,893	769	489	4,151
	중도입국	83	48	35	166
	합 계	2,976	817	524	4,317
외국인가정자녀	일본	1	0	0	1
	중국	22	3	6	31
	중국-조선족	9	0	1	10
	대만	0	0	1	1
	몽골	16	3	0	19
	필리핀	1	1	0	2
	베트남	9	0	0	9
	태국	0	0	0	0
	인도네시아	0	0	0	0
	남부아시아	5	1	0	6
	중앙아시아	14	7	2	23
	미국	3	0	0	3
	러시아	4	2	1	7
	유럽	2	0	0	2
	아프리카	2	3	0	5
	오세아니아	0	0	0	0
	기타	6	1	0	7
	국가합계	94	21	11	126
	총 계	3,070	838	535	4,443

출처: 강원도교육청다문화센터, 한올타리, <http://damunhwa.gwe.go.kr>

3.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정책 체계

1) 정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정책 체계

-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별 업무를 분장하는 마스터 플랜으로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제도 중요한 정책 분야로서 일관되게 다루어 지고 있음.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그간 추진된 교육분야 정책 추진 경과를 검토하고자 함.
- 2008년부터 시행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시에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중점과제가 이미 설정됨(법무부, 2008). 이는 당시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수년내 학령기에 도달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임.
- 정부는 이민배경 자녀들이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초학습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외모·언어·문화적 차이등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음(법무부, 2008).⁸⁾
- 이에 정부는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중점과제의 하위 과제로서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을 제시함.
- 다문화가족 자녀들 학습 지원 방안으로는 미취학 자녀들에 대한 ‘취학전 자녀의 기본 학습 능력 발달지원’, ‘언어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언어 교육지원’, ‘유치원 유아 중 다문화 유아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놀이 중심의 교육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학령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강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도’, ‘다문화교육 담당 전문가 양성·배치’,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방과후 활동을 위한 다문화가족 학부모 활용’, ‘교과부·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협의체 운영 및 교육청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등 광범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음.
- 한편 다문화가족 학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글, 한국문화이해, 자녀교육상담 등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제고’하고, ‘학교별 상담주간을 지정 운영하여,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상황을 안내’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음.
-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적응을 돕기위해 ‘한국어 교육·한국사회문화 입문 프로그램(디딤돌 과정)’을 개발하고,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한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들(다문화학생 재학 대안학교 지원 등)도 모색.

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7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2세의 고민거리는 학업문제(33.3%)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직업/진로문제(13.3%), 언어문제(11.7%) 등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08에서 재인용).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도 ‘이민자 자녀’라는 표현이 달라지긴 했지만,⁹⁾ ‘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 사회통합이라는 정책목표하의 중점과제의 하나로서 1차 계획에 이어 유지되었음(법무부, 2013).
- 주목할 점은 1차 계획 수립때와는 달리 2차 계획에서는 국내 결혼이민자 유입증가 초기 출생한 이민자 2세대들이 본격적으로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 혼란 문제와 중도입국 자녀들의 적응 문제를 보다 강조하기 시작.
- 이런 맥락에서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민배경 자녀에게 외국인 등록, 국적 취득 시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입학절차 안내’, ‘외국인가정 자녀가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 전국적으로 운영’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함.
- 한편 중도입국 자녀들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미성년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는 국적취득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함.
- 또한 이민배경 청소년들의 진학 및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도입국 자녀 초기적응 프로그램인 'Rainbow School'¹⁰⁾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 활동을 확대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 이민배경 청소년의 진로·진학상담을 활성화 하도록 계획을 수립함.
- 더불어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10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지원,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글로벌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상호 이해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방학 중 캠프 등 다문화 친화적 학교 육성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함.
- 지역의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이중언어 강사를 전국으로 확대 양성·운영하여 각급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초급 외국어(베트남어 등) 교육 실시.
- 201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실행중인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는 지난 10년간 진행되어온 정책노선을 유지하되 사회통합 목표 실현을 위한 ‘이민배경 자녀의 역량 강화’를 중점과제로 제시하여 그간의 정책과의 차별성을 모색함(법무부, 2018).
- ‘역량 강화’라는 표현은 이민배경 자녀들을 단순히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로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내포된 표현임.

9)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10) 이주배경 청소년(9세 ~ 24세)을 대상으로 전일제(주 5일, 4개월), 방과후 과정, 여름과정, 주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한국어, 한국생활문화, 정체성, 편입학 및 진로지도, 취업연계 등.

- 이를 위해 그간 추진되어온 이민배경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아·학령기 등 성장주기별 지원을 강화함.
- ‘다문화 유치원’¹¹⁾을 확대하여 다문화 유아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 개발.
-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및 한국어 교육과정 내실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허가 시 자녀의 취학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수학·과학·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브릿지 사업’¹²⁾ 추진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 DB’를 구축하고 이중언어 인재의 진출 가능 분야·직종 등 정보 제공 활성화, 이중언어 인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 적응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적응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이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중도입국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지원 프로그램의 폭이 넓어지고 내용은 고도화 됨. 최근에는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보는 소극적 관점에서 글로벌 인재로서 인식하는 적극적 관점으로서의 변화가 감지되며, 생애주기 전반에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적응, 교육, 진로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음.

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정책 체계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관련 정책과제를 일관성있게 구현하는 역할을 함.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로서 ‘건강한 가족’의 실현이라는 정책이념을 지향하며, 다문화가족은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서 인식함.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영역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지난 1,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되었던 정책들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취학률이 향상되고, 학업중단율이나 차별 경험이 축소되는 등 학교생활 적응도가 향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여성가족부, 2018).
- 그러나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에 대한 정책환경은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 최근 국제결혼의 감소추세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반면, 결혼이민자들의 정착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자녀들의 초등학교 재학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향후 5년내 중고생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고 있음.

11) 다문화 유아의 언어와 기초학습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5년에 도입. 일반아동과 통합하여 언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되, 다문화유아 특성고려 개별적 추가 지도 실시.

12) 다문화학생의 잠재 능력을 적극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4개 분야(수학·과학, 글로벌 리더십, 언어, 예체능)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포함한 생애주기의 다음 단계로의 전환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음.
- 예컨대, 다문화학생들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전체 취학률과의 격차가 커지며(중. 고등 3%p, 대학교이상 15%p), 중학교 학업중단률(1.15%)이 전체학생(0.63%) 대비 두배 가량 높은 점을 지적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8).
- 또한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는 유.초등기(만11세이하) 비중이 높은 반면, 중도 입국청소년은 만 18세 이상 비율이 높은 편(69%)이며, 국내성장 자녀와 달리 가정 애로를 겪는 부분은 한국어이며, 한국에서의 진학 및 학력 인정, 진로 및 취업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에서 청년기로의 생애주기 전환 지원 욕구가 상당함(여성가족부, 2018).
- 따라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도입 및 성장기’에서 ‘정착기’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전체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음 4가지 정책 목표가 설정됨: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관련 정책.
 -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으로 추진, 다양한 운영모형 개발
 - 진로 및 진학 등 청소년기 고민해소를 위한 상담 및 자녀교육, 의사소통 등 해결을 위한 부모상담 지원
 -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양질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자녀양육 지원, 가족상담 등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CYS-Net)를 통해 위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관련 정책.
 - 이중언어 인재 양성 사업 내실화
 -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멘토링 지원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협업하여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멘토링 연계 추진)
 - 지리적 여건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대상 방문교육 서비스 강화
 - 언어, 수·과학 등 특화된 분야의 다문화학생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브릿지 사업 지속 추진
 - 국제교류 프로그램(청소년 국가간 교류 및 해외자원봉사단 등) 참여 활성화(예, KOICA 드림 봉사단 선발 시 다문화 청소년 가산점 부여)

○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고취 및 진로직업체험 기회 확대
- 학교에 진로지도 및 상담 등을 위한 진로활동실 확충 유도
-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인턴 활성화

○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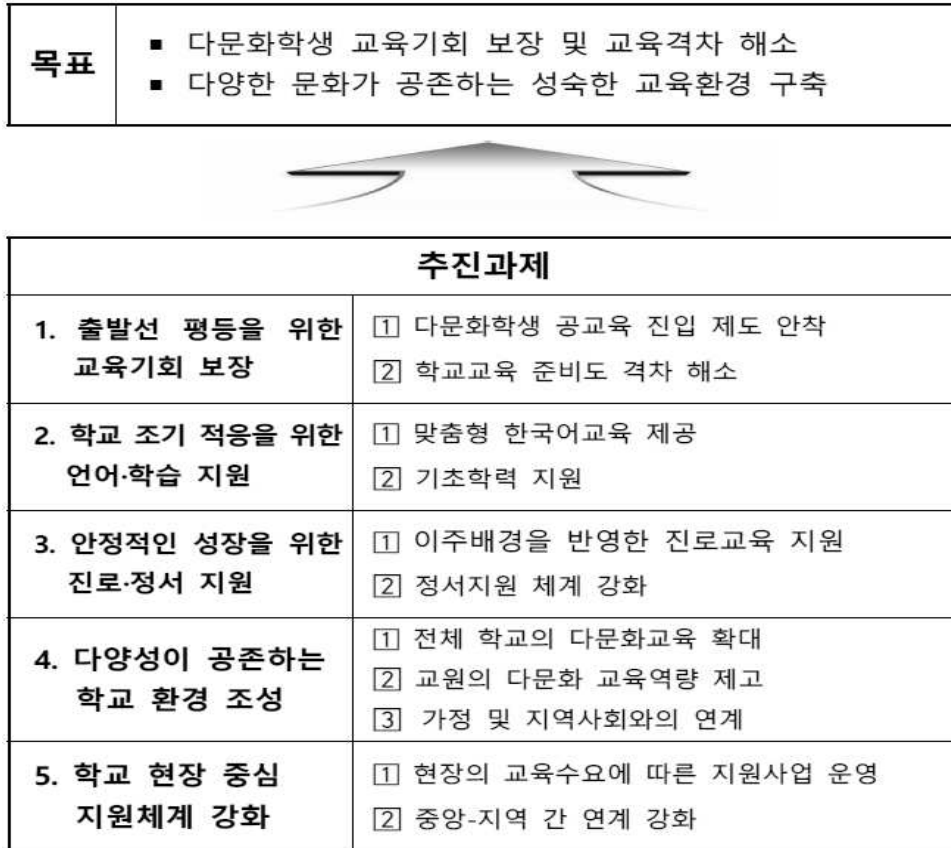
- 중도입국 자녀대상 한국어 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수준 제고
- 중도입국 자녀의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
- 중도입국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상담 및 사례관리,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통합캠프 운영
- 학력증빙이 어려운 중도입국청소년의 편입학지원 및 학력심의위원회 활성화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예비학교’¹³⁾ 운영
-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 등 교육기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 운영 및 훈련과정 확대

3)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의한 정책 체계

- 교육부는 2006년 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처음 수립한 이후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꾀하고 있음.
-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은 ‘평등한 출발선의 보장’이라는 다문화교육 목표를 유지하되 최근 다문화학생의 국적·연령·특성 등이 다양해지고,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증가에 따른 학생별 맞춤형 교육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함 (교육부, 2020).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맥을 같이하여 다문화학생을 ‘미래의 인재’로서 프레이밍하고 그들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개방성과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방향이 설정됨.
-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추진과제가 마련됨: 1.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보장, 2.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언어학습 지원, 3.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4.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 5. 학교 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

13) ‘다문화예비학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지원

<그림 4-1> 교육부 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목표와 추진과제



출처: 교육부(2020)

○ 주목할 만한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공교육 진입 강화)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시 학교장의 입학 허가에서 교육장의 학교 배정 방식으로 절차 개선
- (공교육 진입 강화)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편입학 절차 안내 및 상담, 정책학교 안내, 학적 생성 등 공교육 진입 전과정 지원
- (공교육 진입 강화)법무부 정보연계(연 2회)를 통해 중도입국·난민자녀에게 해당 국가 언어(13개)의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 발송
- (한국어 교육)특별학급 형태의 한국어학급을 확대하여 입국 초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교육 지원
- (한국어 교육)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에 중도 입국·외국인학생이 편입학하는 경우 한국어교육 지원

- (유치원)다문화 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유아'에 대한 기본현황 파악 추진, 교육기본통계(4.1.자)에 '다문화 유아'를 추가하고 이를 근거로 보통 교부금의 교육복지 지원비 반영
- (초등학교)초등학교 입학·편입학 예정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준비교육 운영
- (중학교)신체적·정서적·환경적 변화를 겪는 중학교 입학·편입학 예정 다문화학생 대상 징검다리과정 시범운영
- (기초학력)다문화학생과 멘토 대학생의 1:1 멘토링을 통해 학습·숙제지도·고민상담 등 체계적·개별적 학습지원 제공
- (기초학력)다문화학생이 어려워하는 교과 주요 개념 및 어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중학교 수학·과학 교과 보조교재 개발·보급
- (정서 및 생활지원)학교폭력 예방부터 사안 처리 등 전 과정에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보호 장치 강화, 피해학생 치유·상담 지원 시 다문화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고, 다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연계)지자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출입국외국인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통한 통·번역, 전문상담, 공교육 진입 등 지원 내실화
- (대국민 교육)언론·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다문화교육 성과 확산 및 다문화 인식 제고 도모
- 기타 '이중언어 강점 개발 지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진로 지원 강화',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다문화교육 실시', '다문화교육 선도모델 개발 및 확산' 추진

4.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욕구: 2차 자료를 통한 욕구 파악

1) 선행연구

- 다문화학생이 직면하는 학업상의 위기는 다문화가족이 처한 매우 복합적인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함. 결혼이주민(주로 '어머니')의 국적취득전까지의 불안정한 법적지위,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과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낮은 양육효능감, 충분한 신뢰와 애정관계 형성전에 성립된 부부관계, 제한적인 사회적 지지망,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그들의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에 영향을 줌.

- 최근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¹⁴⁾,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전체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19): 초등학교에서의 취학률이 개선된 것은 중요한 정책적 성과로 인정할 만하나, 중학교에서부터 대학교로 이어지는 중등·고등교육에서의 취학률은 여전히 전체 국민과 비교해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특히 의무교육인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학률이 낮다는 점은 학교밖 청소년의 증가를 의미하는 바이기에 우려할만함.
-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내국인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음(김경식외, 2018).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일반 가정의 자녀 간에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발달 수준에 있어 두 집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가 있으며(이재분, 2002; 정하성, 2009), 일선 교사들도 일반적으로 발달수준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음(김경식외, 2018).
- 반면, 상당수의 연구들에서(조영달, 2006; 구효진·최진선, 2007; 정덕희, 2008)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 발달의 제 측면에서 뒤처짐을 보이며, 학습결손 및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됨.
- 학업성취도 저하의 원인으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것은 언어발달의 지연임(본 보고서 제2장 참조). 언어발달-인지발달-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주양육자가 서툰 한국어로 양육하는 경우 초기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학교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문해능력을 갖추기 까지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장덕희, 2008; 양송희·박성지, 2016; 김경식외, 2018). 특히, 수준높은 언어능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국어와 사회, 역사와 같은 과목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김경식외, 2018).
- 주목할 점은 다문화학생의 실제적인 학업수행 및 학교생활의 질은 본인이 인지하거나 표현하는 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사실임. 2008년 국회보고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17%, 중등 38%, 고등학교 약 69%가 학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적인 있는 만큼, 제한된 표본조사나 취학률 등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의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 않아야 함(한재희, 2010)
-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비일관된 연구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인지 및 정서발달-학업성취 간의 관계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부모의 출신국과 사회경제적 지위, 이주기간,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지지, 자존감등의 개인적 편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 언어의 유창성은 확보되지만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등

14)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 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한 결과, 93.1%가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비율은 2012년 78.7%, 2015년 84.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여성가족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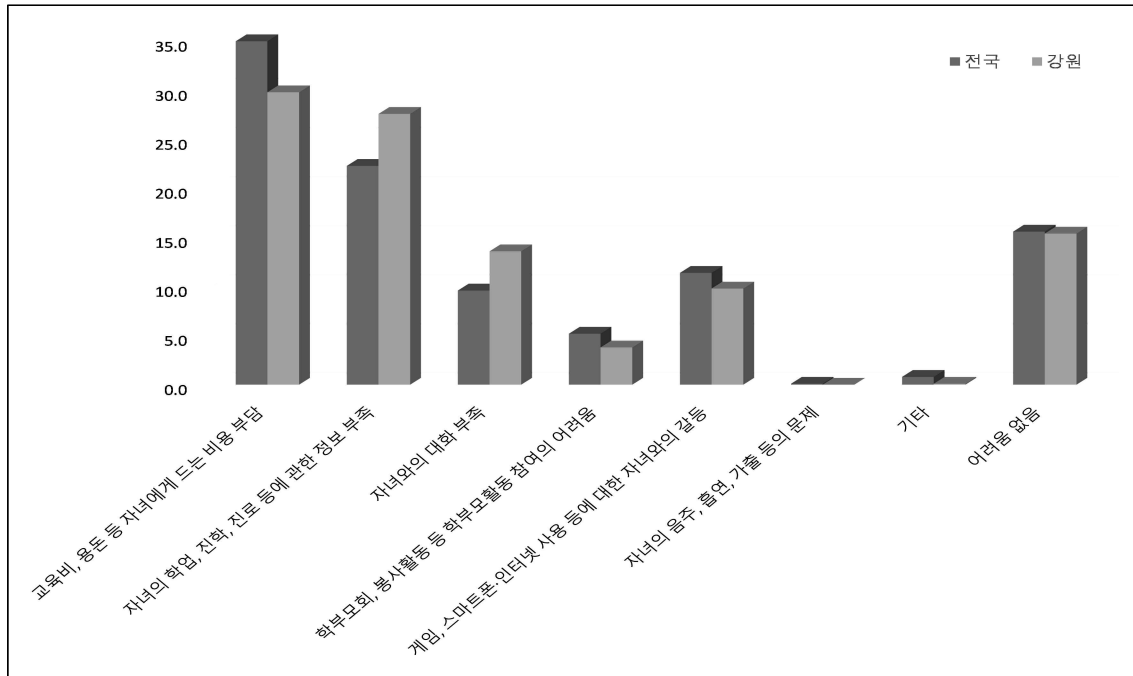
과 같은 요인들이 학업 성취에 갈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교육현장에서 다문화학생을 별도의 집단으로 ‘식별’하여 접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문화학생과 내국인학생의 성취도나 적응정도에 대한 교사나 학생본인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다문화학생 본인이 식별을 원하지 않는 성향이 강할수록 ‘잘 적응하고 있음’, ‘문제없음’과 같은 응답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학교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습을 하는 곳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활발히 발생하는 생활공간임. 학년이 올라가면서 가정보다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이들의 사회화에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 학교생활의 적응여부가 갈수록 중요해 짐(이영주, 2007).
- 또래와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속에서의 긍정적인 학교생활 경험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성취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 수립과 자아존중감 강화에도 도움을 줌. 한편, 또래로부터 따돌림과 폭력, 차별과 소외와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하게되는 경우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학업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음(정옥분, 2005).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그들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효능감, 언어(한국어)능력, 자녀와의 관계의 질, 부부관계의 질, 가족생활문화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음. 다수의 연구에서 결혼이주 어머니들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자녀의 한국어 습득, 학교 학습지도, 사교육 등)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하고 있음(오성배, 2005; 김갑성, 2008; 문혁준 외, 2009).
-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공적 교육은 유아기부터 학령기로 이어지는 긴 과정속에서 달성되는 만큼, 언어습득과정부터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적 관계형성을 포괄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며, 가정(부모)과 학교(교사와 또래)에서의 동시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2) ‘2018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8)’ 강원도 자료 분석

- 본 소절은 가장 최근(2018)년에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의 강원 자료를 국가통계포털(KOSIS)로부터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임.
- [양육상의 어려움]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만6-24세) 양육상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만, ‘교육비, 용돈 등 자녀에게 드는 비용 부담’이나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자녀와의 대화부족’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강원도가 더 높았음.

<그림 4-2> 다문화가족 만 6~24세 자녀 양육의 어려움(% , 중복응답)



출처: 여성가족부(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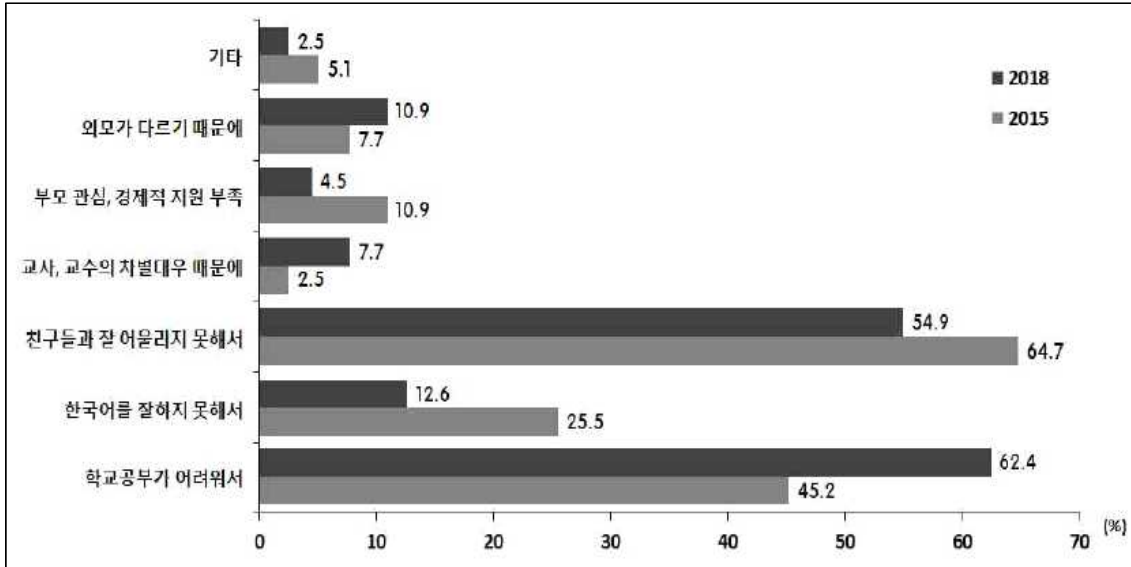
○ [학교 적응도] 재학생 자녀의 학교 적응도를 보면 강원도의 다문화학생들은 전국 평균과 동일한 4.3/5.0점으로 양호한 적응정도라고 응답하고 있음. 한편,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학교공부가 어려워서’(62.4%),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54.9%)가 가장 큰 이유로 드러났음. 이를 2015년 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는 9.8% 감소한 한편, ‘학교공부가 어려워서’는 17.2%로 증가하여 학습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적응 원인으로 나타났음.

<표 4-10> 다문화가족 자녀(재학생)의 학교 적응정도

학교적응	매우 잘 적응한다 (%)	잘 적응하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적응하지 못한다 (%)	평균(5점 척도) (점)
전국	48.8	37.9	10.9	2.3	0.2	4.3
강원도	47.2	38.1	12.6	1.9	0.3	4.3

출처: 여성가족부(2019)

<그림 4-3> 다문화 초·중등학생의 학교 부적응 이유(복수응답)(2015, 2018)



출처: 여성가족부(2019)

○ [학업성적]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본인의 학업성적을 평가하도록 조사한 결과 평균 3.3점을 상회하는 ‘보통이다’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강원도의 경우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이는 초·중·고 학생 일반(3.35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치임(여성가족부, 2019: 549). 이를 볼 때 다문화학생의 경우 학업이 당연히 부진할 것이라는 짐작은 성급한 일반화할 수 있음. 그러나 세부 유형별로 학업성적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초·중·고 학생들과는 달리 중학교(12-14세)와 고등학교(15-17세) 진학할수록 ‘우수’ 및 ‘매우우수’ 응답은 크게 줄어들고, ‘못하는 편이다’와 ‘매우 못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국내에서만 성장한 자녀들에 비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중·고·대입국자녀들이 ‘못하는 편이다’와 ‘매우 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크게 높음.
- 외국계 부와 한국계 모로 구성된 가족의 자녀들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으며, ‘매우 우수하다’ 응답의 경우 거의 두 배가까운 격차를 보임.

<표 4-11> 다문화가족 자녀(재학생)의 학업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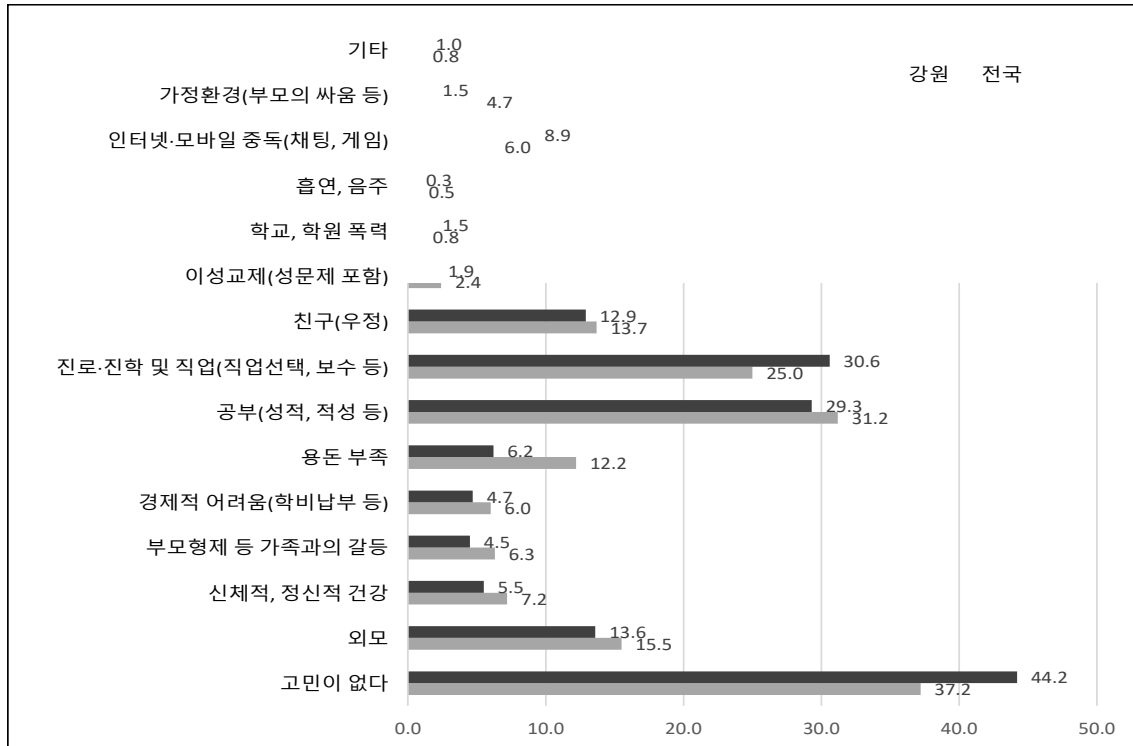
학업성적	매우 우수한 편이다 (%)	우수한 편이다 (%)	보통이다 (%)	못하는 편이다 (%)	매우 못한다 (%)	평균 (5점척도)
전국	7.5	28.8	53.2	9.2	1.2	3.3
강원도	4.1	23.9	62.2	9.4	0.5	3.2
9-11세	9.6	31.9	50.7	7.5	0.4	3.4
12-14세	6.6	25.5	54.4	11.2	2.3	3.2
15-17세	2.6	23.7	59.2	12.2	2.4	3.1
국내에서만 성장	7.4	29.1	53.4	9.3	0.8	3.3
외국에서 주로 성장	6.1	28.9	49.6	12.3	3.1	3.2
외국계 부+한국계 모	13.3	36.0	36.3	13.7	0.7	3.5
한국계 부+외국계 모	7.5	32.1	50.5	8.8	1.1	3.4

출처: 여성가족부(2019)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고민거리]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고민거리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보면 ‘고민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2%로 가장 높으며 이는 전국평균보다 7%를 상회하는 수치임. 그 다음으로는 ‘진로·진학·직업’이 30.6%, ‘공부(성적, 적성)’가 29.3% 큰 고민거리라고 응답함. 공부를 고민거리로 응답한 빈도는 전국평균과 비슷하지만, 진로관련 고민거리를 갖고 있다는 응답은 전국평균보다 5%가량 높았음. 이를 토대로 볼 때 진로지도를 포함한 교육분야 지원 욕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이를 청소년 일반(13세 이상)과 비교하면, 청소년 일반 또한 진로 관련(57.9%) 고민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공부(55.3%), 외모(37.0%), 신체적·정신적 건강(23.9%), 친구(21.2%)의 순을 보임. 이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고민이 없다는 응답이 높아 각각의 고민 유형에 대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와 청소년 일반이 갖고 있는 고민의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여성가족부, 2019: 578).
- 아래 그래프에는 표시하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령기인 9~11세에는 친구(우정)(32.0%), 가정환경(부모의 싸움 등)(15.3%), 인터넷, 모바일 중독(채팅, 게임)(13.9%)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며, 중학교 학령기인 12~14세에는 공부(성적, 적성 등)에 대한 고민이 58.5%로 가장 많고, 외모(34.9%)와 부모, 형제 등 가족과의 갈등(22.2%)에 대한 고민도 큰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교 학령기인 15~17세는 진로, 진학 및 직업(직업선택, 보수 등)에 대한 고민이 62.6%에 달해 가장 많고, 공부(성적, 적성 등)(55.4%)에 대한 고민도 많았음. 18세 이상은 진로, 진학 및 직업(66.1%)에 대한 고민이 월등히 많은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학비 납부 등)(31.2%)에 대해 고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고민거리(복수응답, %)



출처: 여성가족부(2019)

○ [교육지원 서비스 요구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규학교 수업 이외의 각종 서비스에 대하여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조사의 결과를 보면, 강원도는 전국평균과 마찬가지로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큰 3.4점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은 전국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음. 대상자별-주요 서비스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아래 <표 4-12>참조, 여성가족부, 2019로부터 저자 발췌 요약).

-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전체 평균이 5점 만점에 2.3점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 그러나 성장배경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내에서만 성장한 집단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2.2점으로 낮은 편이고,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이 2.4점으로 그보다 높으며,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집단의 요구도는 3.3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 한국 사회 적응 교육: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의 경우도 전체 점수가 2.2점으로 필요성이 크게 높지 않게 드러남. 연령집단별로는 18~24세(2.4점)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재학여부에 따라서는 학교에 다니는 집단(2.22점)에 비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집단(2.5점)이 높음. 또한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들의 경우는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지각(3.1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습지원: 학습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평균 3.4점으로 다소 높음. 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학습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학교에 다니는 경우(3.4점)에 다니지 않는 경우(2.7점)보다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 성장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집단(3.5점)의 필요성 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이 국내에서만 성장한 집단(3.4점), 외국 거주 경험자(3.21점)의 순임. 따라서 조사에 참여한 모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특히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들의 경우 학습지원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습지원의 필요성을 높게지각하는 경향성이 있음. 따라서 학습지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두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나, 외국에서 주로 성장하여 한국에 입국한 자녀 중 한국국적이 없는 저연령의저소득층 자녀들이 가장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음(여성가족부, 2019: 609).
-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의 경우도 필요성에 대한 전체 평균이 3.2점으로 지원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고등학교학령기인 15~17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임. 또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3.17점), 다니지 않는 경우(2.99점)에 비해 요구도가 높음. 성장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집단(3.49점)이 가장 높고 국내에서만 성장한 집단(3.14점)과 외국 거주 경험자(3.07점)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국적이 없는 경우(3.53점),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3.14점)보다 더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평균이 3.03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약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월평균 가구소득 100~200만원 미만인 집단이 3.27점으로 가장 높음. 따라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되고 외국에서 주로 성장했으며 현재 한국국적이 없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음.
- 학습, 친구, 가족, 이성 관련 상담: 마지막으로 학습, 친구, 가족, 이성 관련 상담과 관련해서는 전체 평균이 중간보다약간 낮은 2.8점임. 성별 차이는 크게 없으나 여성(2.85점)이 남성(2.78점)보다 약간 더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음. 연령별로도 큰 차이는 아니나 15~17세(2.9점)의평균이 가장 높고, 다음이 12~14세(2.8점), 9~11세(2.8점), 18~24세(2.7점)의순으로 나타남. 학교 재학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교에 다니는 경우(2.8점), 다니지 않는 경우(2.6점)에 비하여 약간 높고, 성장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면 외국에서주로 성장한 집단(3.1점)이 국내에서만 성장한 집단(2.8점)과 외국 거주 경험자(2.8점)에 비해 약간 높음. 소득수준별 차이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요구도가 높고,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요구도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은 경향성을 보임. 따라서 학습,

친구, 가족, 이성 관련 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그리고 한국국적은 없으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음.

<표 4-12>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 지원서비스 요구도(5점 척도)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적응 교육	학습지원(국어, 영어, 수학, 멘토링 등)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학술, 친구, 가족, 이성 관련 상담
전국	2.3	2.2	3.4	3.2	2.8
강원	2.5	2.5	3.4	3.0	2.8
9-11세	2.3	2.3	3.5	3.0	2.8
12-14세	2.2	2.2	3.4	3.2	2.8
15-17세	2.2	2.1	3.3	3.5	2.9
18-24세	2.4	2.4	2.9	3.1	2.7
학교에 다님	2.3	2.2	3.4	3.2	2.8
학교에 다니지 않음	2.6	2.5	2.7	3.0	2.6
국내에서만 성장	2.2	2.2	3.4	3.1	2.8
외국 거주 경험	2.4	2.3	3.2	3.1	2.8
외국에서 주로 성장	3.3	3.1	3.5	3.5	3.1
외국계 부+한국계 모	2.4	2.2	3.3	3.1	2.8
한국계 부+외국계 모	2.3	2.3	3.4	3.2	2.8
외국계 부모	2.4	2.3	3.4	3.2	2.9
결혼이민자	2.4	2.3	3.4	3.2	2.8
기타귀화자	2.2	2.2	3.3	3.1	2.7
동부	2.3	2.2	3.3	3.1	2.8
읍면부	2.4	2.3	3.5	3.2	2.9
100만원 미만	2.1	2.2	3.7	3.2	2.9
100-200만원 미만	2.4	2.3	3.5	3.3	2.9
200-300만원 미만	2.4	2.3	3.4	3.2	2.9
300-400만원 미만	2.2	2.1	3.4	3.1	2.8
400-500만원 미만	2.3	2.3	3.3	3.1	2.8
500만원 이상	2.2	2.2	3.1	3.0	2.6

출처: 여성가족부(2019)

○ [교육지원 시설 인지 및 이용경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각종 청소년지원시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 주요 지원시설의 인지도는 매 실태조사시 마다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음(여성가족부, 2019). 강원도의 경우 전국과 비교해 인지정도와 이용률이 같은 수준이거나 조금 높았음. 그러나 시설별 인지도 차이가 큼.

-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다양한 지원시설에 대하여 알고 있기는 하나, 주로 학교 방과후교실, 지역사회 방과후돌봄서비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관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청소년대상 기관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은 반면(69.9%),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92.8%)으로 조사되어,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주목할 사항은 다문화학생 특화기관인 레인보우스쿨,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대안학교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접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요청됨.

<표 4-13>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지원지원시설 인지 및 이용 수준(%)

시설	응답	소계	강원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인지 및 이용 경험	모른다	4.9	2.0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	80.0	80.1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15.1	18.0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지 및 이용 경험	모른다	15.4	6.8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	42.8	44.1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41.8	49.0
청소년 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등) 인지 및 이용 경험	모른다	28.3	15.9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	25.6	37.8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46.1	46.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 경험	모른다	30.1	7.2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	26.3	43.1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43.6	49.7
사회복지관 인지 및 이용 경험	모른다	39.5	36.0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	12.4	17.2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48.1	46.8
레인보우스쿨 인지 및 이용 경험	모른다	68.7	64.0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	0.7	1.0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30.5	35.0
다문화 예비학급(예비학교) 인지 및 이용 경험	모른다	68.4	62.0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	1.3	1.0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30.4	37.0
다문화 대안학교 인지 및 이용 경험	모른다	67.7	63.0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	1.2	1.3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31.0	35.8

출처: 여성가족부(2019)

- [사교육 경험]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0%가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강원도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1주일 동안 받은 총 사교육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8.7시간으로 전국평균인 9.0시간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 결혼이민자(9.1시간)가족 자녀가 기타귀화자(7.6시간) 가족 자녀보다 더 많이 사교육을 받았으며, 동부(9.1시간) 거주 자녀가 읍면부(8.6시간) 거주 자녀보다 사교육 시간이 길음 알 수 있음.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임.
-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2015년 실태조사 및 청소년 일반과 비교한 결과,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다문화 학생 전체 비율은 72.0%로 2015년 실태조사에 비해 7.8%p 증가하였음. 한편,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일반의 사교육 경험률은 82.9%로 다문화 학생보다 10%p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경험률에서의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임(여성가족부, 2019: 553). 이를 통해 볼 때 내국인 학생과의 학습 격차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표 4-14> 다문화학생의 사교육시간(주당 시간)

	1~5시간	6~10시간	11~20시간	21~30시간	31~40시간	41시간 이상	평균(시간)
소계	38.5	33.7	23.9	3.3	0.4	0.3	9.0
강원	42.4	31.8	23.0	1.3	0.0	1.5	8.7
9-11세	39.7	35.5	21.4	2.8	0.3	0.3	8.7
12-14세	38.1	30.5	27.1	3.7	0.4	0.3	9.1
15-17세	33.2	34.0	28.0	4.2	0.4	0.3	9.7
학교에 다님(재학 휴학 등)	38.5	33.7	23.9	3.3	0.4	0.3	9.0
국내에서만 성장	37.4	34.4	24.1	3.5	0.3	0.3	9.1
외국 거주 경험	45.9	29.6	20.7	2.7	1.0	0.1	7.8
외국에서 주로 성장	43.2	28.4	27.1	1.4	0.0	0.0	8.2
외국계 부+한국계 모	35.5	33.0	27.2	3.5	0.9	0.0	9.0
한국계 부+외국계 모	34.1	37.6	24.5	3.0	0.4	0.4	9.3
외국계 부모	36.8	32.9	24.6	5.7	0.0	0.0	8.7
결혼이민자	35.5	36.0	24.5	3.3	0.4	0.3	9.2
기타귀화자	38.7	34.8	22.7	3.1	0.4	0.3	8.7
동부	37.8	32.8	25.4	3.2	0.4	0.3	9.1
읍면부	40.4	36.3	19.4	3.6	0.2	0.1	8.6
100만원 미만	54.4	28.1	11.0	6.4	0.1	0.0	7.7
100-200만원 미만	40.5	31.3	24.3	3.7	0.3	0.0	8.9
200-300만원 미만	39.6	35.8	21.9	2.6	0.2	0.0	8.5
300-400만원 미만	37.2	36.3	22.1	3.6	0.5	0.4	9.0
400-500만원 미만	37.3	31.0	27.0	3.5	0.5	0.7	9.4
500만원 이상	33.5	33.9	29.4	2.5	0.4	0.3	9.4

출처: 여성가족부(2019)

- [희망교육수준]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포부와 자기효능감을 짐작하기 위해 어디까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질의한 결과 4년제 대학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62.3%(강원도)로 가장 높으며, 4년제 미만은 25.6%, 고등학교 이하는 8.2%로 전국대비 강원도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희망교육수준이 높았음. 그러나 박사까지 공부하겠다는 학생은 0.7%로 전국평균인 5.4%와는 격차가 컸음.
-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자녀들이 국내에서만 성장한 자녀들에 비해 고등학교이하까지만 공부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역시 그러함.
 - 전 연령층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함. 그에 비하여 4년제 미만의 대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은 17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18~24세에서는 감소함. 또한 고등학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어린 연령에서는 대학을 가겠다는 포부를 품었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낌으로서 점차 교육기대를 낮추기 때문일 가능성을 보여줌.

<표 4-15> 다문화학생의 희망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소계	11.2	23.2	56.5	3.7	5.4
강원	8.2	25.6	62.3	3.1	0.7
9-11세	8.8	21.1	59.4	3.3	7.4
12-14세	10.7	25.5	56.5	2.6	4.7
15-17세	14.5	26.1	53.8	3.4	2.2
18-24세	16.1	23.1	49.8	7.5	3.6
국내에서만 성장	10.7	23.6	57.0	3.5	5.2
외국 거주 경험	9.7	17.4	60.8	4.5	7.6
외국에서 주로 성장	19.3	26.3	44.0	5.9	4.6
외국계 부모	10.5	24.2	51.4	5.7	8.2
100만원 미만	14.4	20.3	54.6	3.3	7.3
100~200만원 미만	14.8	26.8	51.8	2.4	4.2
200~300만원 미만	12.5	25.8	56.6	2.3	2.8
300~400만원 미만	8.9	20.8	61.3	3.4	5.6
400~500만원 미만	8.6	23.7	55.7	4.6	7.5
500만원 이상	9.9	19.8	55.7	7.1	7.5

출처: 여성가족부(2019)

5.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욕구: 1차 자료를 통한 욕구 파악

1)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욕구 파악

- 전문가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음. 최초 1회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연구수행 기간 내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비대면 조사로 변경하여 수행함. 사전에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함.

<표 4-16> 다문화가족 교육관련 욕구 파악 전문가 조사 대상

구분	기관	직책	연령대	조사 방법
전문가 4	강원도 A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50대	대면조사
전문가 5	강원도 C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40대	화상조사
전문가 6	강원도 D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50대	서면조사

주: 제3장의 전문가 인터뷰 대상과 다르며, 식별을 위해 4번부터 면담이 진행된 순서대로 임의 부여됨.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학교생활관련 주요 어려움: 언어발달 지연, 학습능력 저하(개인차 큼), 또래관계와의 어려움, 가정 내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됨.

- 주 양육자(모)가 한국어 수준이 낮고 자녀의 성장발달에 맞는 언어사용의 어려움이 있는 양육자로 인한 발달단계별 언어자극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자녀들의 학년기에 맞는 언어사용이 잘 되지않아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5)
-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문제점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언어나 학습 환경이 가정부터 어려움이 많은 환경이라 학교에 들어가도 평균적 학업을 쫓아가기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환경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정에서의 지원이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자녀들의 학습수준이 평균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5)
- 관계의 상호작용을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언어가 안되는 얼마나 일방적 의사전달은 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학습하면서 자녀들이 또래관계를 할때도 가정에서 학습된 것으로 관계를 하고 있어 또래집단에서는 자녀의 행동이나 언어, 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5)
- 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문화자녀 중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부모님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6)

- 저학년의 경우는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기초학습이 부족한 경우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국어의 경우 단순히 읽기를 넘어 문해력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어릴때부터 충분한 언어 자극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6)
- 중도 입국 아이들을 제가 봤는데, 아이들은 확실히 언어 습득력이 빠르고 한국 사람처럼 발음도 잘 해냅니다. 외모가 중국이나 동남아는 한국 사람 같잖아요. 잘 몰라요, 말을 해보지 않으면. 심지어 언어까지도 잘 습득을 하는데, 문제는 학습,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개네들이 학습이 안됩니다. (전문가 4)

○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에 있어 ‘학업’의 중요성: 학업은 단순히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형성, 또래관계, 향후 진로에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핵심적인 이슈임.

- 사실은 다문화 애들 보면, 일반가정의 아이들도 학교 생활과 교우와 학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서발달과 이런 것들, 다 관련된 것 같아요. (중략) 학교생활이 조금 힘들고 부족하면 나머지들이 다 문제로 다 엮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이 제일 중요하고요. (전문가 4)
- 공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공부가 되지 않잖아요. 뭔가 자기가 투자한 만큼 결과가 오는 거니까 자기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길을 알려주는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엄마들은 오해를 ‘지식이고 공부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업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 아이가 굉장히 소중한 아이로 자라려면 학업과 학교생활과 또래 관계가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다 연관돼 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센터는 그래서 학습을 1번으로 합니다. (전문가 4)
- (관련하여)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자존감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자존감을 스스로 가지려면 스스로 갖게 하는 것보다 외부적인 영향도 큰 거잖아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줘서 내가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 거데 ‘재네 엄마는 뭐 그래’, ‘재는 공부도 못해’, ‘우리랑 할라 하면 뭐가 좀 이상해’ 그럼 스스로도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중략) 똑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르쳐보면 개네들은 다문화 아이들이라도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저는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확실히 있어요. (전문가 4)
- 주눅 들었잖아요. 없는 아이들, 뭔가 부족한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깐 사실은 학교에 가서도 ‘너 어디가?’ ‘학원 가’ 이렇게 얘기 하고 센터로 옵니다. ‘지역아동센터 가’ ‘거기? 너네 엄마 없어? 거기 너네 가난해?’ 이렇게 얘기하니깐 ‘학원 가’ 이려고 아동센터로 오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사실 그것이 문제잖아요. 다 함께 돌봄이 생기면서 더 위축이 들어서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전문가 4)

- 보통 다문화 엄마들은 그 시간(방과후)에 일을 나가서 돈을 벌러 갔다가 밤 9시쯤 옵니다. 그동안 애가 혼자 있으니까. (전문가 4)

○가정의 중요성 및 가정(부모)대상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됨: 다문화 가족자녀의 성공적 학업 및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 및 지지관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근간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생활하다가 사회인이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부족한 엄마를 보고, 부족한 아빠를 보고 ‘나는 저런 아빠가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자극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가 4)
- 다문화 아이들의 더 큰 문제는 부모들의 인식이 그나마 일반가정 아이들 부모들보다 (교육 의식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중략) 일반 다문화 엄마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예전에 우리 60년대 부모님들이 자식 낳으면 ‘자기가 먹을 걸 갖고 태어난다’ 그런 거 같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던 뉘다 학교생활을 잘하면 좋고 공부도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현지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말하자면 한국인데 한국의 전통과 문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뒤로하고 자기가 자라 온 환경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전문가 4)
- 제가 보기에선 꼭 그렇지 않고요, 고학력자가 오기도 해요. 근데 정말 저학력자가 오기도 해요 우리는 보통 못 배워도 고등학교 중학교는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온 엄마들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엄마는 걸로 보면 모르죠. 자기 나라 말 베트남어도 읽을 줄 몰라요. 그림을 보고 아는. 그런데 그 반면에 대학까지 졸업한 베트남 엄마들도 있어요. 중간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처럼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졸업한 게 아니라 아예 못 배우거나 교육환경이 안 좋으면 집에서 뛰어들다가 어른으로 성장한 거죠. 교육환경이 좋은 자녀들은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고... (전문가 4)
- 부모와 자녀간에 건강한 상호작용이 훈련되고 경험이 되어야 하는데 다문화가정의 경우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등으로 인해 상호작용에 있어 건강한 상호작용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갈등이나 폭력적 언어, 행동, 태도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 간의 차이에 대한 의식이나 서로 간의 작용에 있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본인들이 학습되어진 것으로 계속 부정적 환경만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문가 5)
- 방문교육사업(자녀생활서비스)이나 입학 전 한글학습 등을 통해 한글이나 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학교생활을 시작한 아동의 경우 학습진도를 따라 가는데 무리가 없었으나 입학 전·후 가정 내에서 관심이 없을 경우 학교진도를 따라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전문가 6)
- 다문화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부모가 생계를 위한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 내에서 기초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학교에서 부모에게 전달되는 기본적인 학습 안내 및 전달사항이 다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이루어져있어 엄마가 정확한 이해를 하지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 주의가 산만하거나, 또래 친구들과 관계형성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하여 비슷한 환경의 다문화친구들과만 어울리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전문가 6)

○ 학교 및 교사의 중요성 및 학교기반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됨: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데 무지하거나 소극적임(이는 ‘식별’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한 것일 수 있음). 그러나 학교에서의 실질적 지원서비스 없이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 욕구는 해소되기 어려움.

-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도 무조건 다문화,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이 아이를 돌려 싸고 있는 환경을 좀 아시고 그 환경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아동센터가 있으니까 아동센터에 전화해서 개가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어머님께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본인이 직접 못하시면 한 번 완충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버젓이 있는데 안 하시는 거죠. (전문가 4)
- 학교 선생님들도 개인적인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는 친구들한테 더 그 자리에서는 못 해주지만 그 후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정말 일적으로만 상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럴 경우엔 다문화 친구들은 좀 취약한 형편이다 보니까 더 문제가 드러나는 거 같아요. (전문가 4)
-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의 학부모 활동에 있어 다문화가정의 학부모가 내국인 학부모와 함께 자녀지원을 위한 활동을 1:1로 학부모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 내국인 멘토가 있다면 정착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생활하면서 많은 지지와 격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5)
- 학교에서는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내문들이 발송되거나 아이엠스쿨 등을 통해 전달되는데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는 다문화센터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안내문을 번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다문화가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6)

○ 자녀들의 생애주기(학령기)별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가 요구됨: 저학년일 경우 돌봄공백도 같이 해소되어야 하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요구되는 학습 수준에 준하여 학습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정의 경우 맞벌이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할 경우 자녀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식사나 과제 등에 대한 점검이 되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돌봄의 확대 및 정서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6)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문교육의 경우 만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1인당 1회의 서

비스를 받을 수 있어 대부분 입학전이나 저학년 기초학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보완하여 학습 단계에 맞춰 단계별로 2~3회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부족한 학습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6)

-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자녀들의 진로 & 학업과 관련된 지원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6)
- 자녀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부모교육을 통해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정서적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부모역할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참여가 어려운 가정의 많아 멘토-멘티 그룹을 형성하거나 안내문을 배포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다 많은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 6)

○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에서 ‘접근성’의 중요성 및 찾아가는(방문형) 서비스의 도입 및 확대가 요구됨: 서비스기관이 주로 접근성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크게 저하됨.

- 사회복지 기분이 접근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내에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접근성 때문이죠. 사실 교외로 빠지면 저도 월세 부담이 좀 줄고 종을 텐데 접근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습니다. (중략) 이렇게 다문화 아동들이 주를 이루는 아동센터는 강원도에서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중략)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이름 그대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와야 하는데... (전문가 4)
- 서비스기관이 속해 있는 소재지는 대부분 도시나 행정기관등이 집약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를 위한 이용하기 위한 접근이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 5)
-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을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동 건강검진차량처럼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지원 (이동차량지원: 이동도서관, 찾아가는 상담,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맞춤형 가족교육 프로그램등)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가 5)
- 도시와 비교하여 진로나 진학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의 경우 학생들이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정기적으로 문화활동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6)
- 방문서비스를 원거리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까지 확대운영하여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이 없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언택트시대에 필요한 기기 등을 지원하여 원격/화상을 활용하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 6)

○ 관련기관들의 서비스 확장성, 지속성 및 유기적 연계가 요구됨: 단회성이나 자원 봉사자 활용과 같은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하며, 학교 급이 올라가거나 전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일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다문화 중점의 학교와 같이 많은 다문화 아이들로 구성 되어 있는 초등학교를 이 친구들이 졸업하면 중학교는 다들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일반 중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공포가 시작이 돼요. (전문가 4)
- 이 아이가 정말 커서 어떻게 자라는 지까지 관심을 갖고...그냥 자원봉사자는 와서 이렇게 하고 시간하고 자원봉사 센터에 올라가고 이런 역할로만 오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부끄럽지만 대학생 자원봉사 안 받습니다. 대학생, 장학생, 저희는 안 받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 해요. (중략) 아이들하고, 저희가 좀 기쁘고 어떻게 되면..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만남 말고 정말 자식 하나 키운다 생각하시고 좀 지속적으로 애가 어떻게 크는지 이렇게 그런 만남을 좀 가졌으면...(전문가 4)
- 아동센터가 과거에는 보호가 주었어요. 지금은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물론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른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하자면 아이들을 위한 작은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아주 가족상담부터 해서 아이들 학교 문제, 교우라든지, 또래, 건강까지 다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들인데 심지어 취미와 특기 교육까지... (전문가 4)
- 학교나 학업생활에 있어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상황과 처지를 돕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교사회사업가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상황들을 파악하여 가정의 학교와 연계된 어려움에 대해 학교교육과 연결된 어려움을 찾고 지역사회 및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5)
- 다문화사회에서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세계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다문화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교육이수 시간을 배정하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6)

○ 지원기관 운영상 어려움과 개선방안: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 상당함. 시군단위의 실태파악이 요구되고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현장 중심 사업 지원이 필요함.

- 저희가(지역아동센터)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급여가 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월세까지 감당하려 하니깐. (전문가 4)
- 저는 이번에 시 특화 사업을 하나 하기는 해요, 다문화 아이들 해서. 그동안 안 했어요, 특화 사업을 일부로.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할 업무가 너무 많은데 특화 사업까지 하면 그 업무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특화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중략) 인력이 그래서 제일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밖으로 좀 나가 다녀야 되는데 저는

자리에 너무 많이 앉아 있어요. (전문가 4)

- (꿈꾸는 아이들 지원사업) 예산상의 한정으로 일정 대상만 지원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정들의 참여는 적극적이며 지원 받지 못하는 가정들도 지원해달라는 욕구가 많습니다. (전문가 5)
- 도가 정해놓은 정책이나 사업이 아니라 현장의 환경과 처지에 맞는 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저희 센터는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사업, 코로나 시대로 인한 방역 및 영상 교육 시스템지원,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를 위한 차량 및 예산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 5)
-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군별 정확한 다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6)

2) 다문화가족 부모 면담을 통한 욕구 파악

- 결혼이주 어머니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음. 연구수행 기간 내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비대면 조사로 수행함. 사전에 e-mail로 질문지를 보낸 뒤, 전화로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연구 철회 및 익명으로의 조사 참여 등 연구 윤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고 난 후 면담을 수행하였음.

<표 4-17> 다문화가족 어머니 조사 대상

구분	출신 국가	자녀 연(학)령	조사 방법
어머니 1	베트남	3세	전화 조사
어머니 2	중국	4세, 1세	전화 조사
어머니 3	베트남	7세, 3세	전화 조사
어머니 4	일본	13세, 9세	전화 조사
어머니 5	베트남	8세, 12세	전화 조사
어머니 6	베트남	6세	전화 조사

주: 제3장의 어머니 인터뷰 대상 명단과 동일하나, 본 장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인용됨.

- 학교 학습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또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대상학생 특화 및 지속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명확했음. 한국에서 ‘교육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교육 등 추가 교육을 시키고 싶으나 교육비 부담, 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망설이는 것으로 드러남.

- 제가 봐주면서 숙제, 교과서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서 거기서 단어를 검색해보고 문제 자체는 어릴 때는 수학문제 국어문제라고해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다보니까 뜻만 알게 되면 풀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해시키거나 그럴 때는 좀 힘든 게 있겠죠. (어머니 4)
- 교육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교육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5)
- (한글 학습을) 꾸준히 아이가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면 한번 들어가면 6개월, 그렇게만 되니까 6개월만 공부하고 마는 거고 그래서 쪽 조금 더 지원받게 교육 쪽에 주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어머니 5)
- 고학년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물론 한국인 분들은 얼마정도 봐줄 수 있는지를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 큰 애가 올라갈수록 제가 손을 못 대는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한국인분들은 얼마정도 봐줄 수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머니 5)
- 요즘 2세들이 더 중요하니까 2세들이 같이 공부를 배울 수 있게 교육비를 많이 지원해주시면, 저희는 교육비 지원한다고 해서 일단 다른 게 형식적으로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프로그램만 짜고서 이렇게 저만 한두 번만 하고 애들한테 받아들이 수 있는 게 이제 잘 인식하지 못하고서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그런 거 보다 그냥 애들은 진짜 애들이 필요한 거, 예를 들면 단어, 수학, 국어가 약하다면 아이한테 지원해주고, 애들 한 3~4학년 때 자리만 잘 잡아주면 그 이후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거보다 그냥 교육은 진짜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5)
- 저희는 교육비(가 부담이)죠. 왜냐면 이 문제들은 집에서 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교육비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 분들도 거의 애들 저학년부터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이제 제가 이해가 되고... (중략) 제가 봐줄 수 있을 때까지 봐주고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교육비, 애들은 선생님 모시고 공부할 수 있게. (어머니 5)

○ 코로나로 인해 학교 등교 수업대신 온라인 기반 학습 수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드러남.

- 제가 아는 친구는 너무 힘들어해요. 밖에 나가버리고 아예 안하고,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 다 보니까 바쁘시고 애들이 4명이나 있는데 다 뭐하는지 모르겠고, 그럼 온라인 학습이라도 조금씩 하면서 늦춰지지 않게 잘 따라가야 하는데 제가 놀러가 났더니 학습 환경도 안되어 있고 컴퓨터 없고 노트북도 없고. (어머니 4)
- 그 친구 이야기는 컴퓨터 만지고 회원가입하고 학습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약간 복잡한 면이 있어서 비밀번호 그런 것도 설정해야 하고 그런 거를 잘 못했었나봐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4)

- 내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남자아이라서 좀 많이 놀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고 하니까 답답하고 애기 집에 있으면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놀잖아요. 다행히 우리애기는 핸드폰 안 좋아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핸드폰으로 많이 놀아줬어요. 어디 놀러 갈 수 없고 여름휴가에 어디도 못가고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고향에도 못가고 그래서... (어머니 6)

○ 방문 서비스(돌봄 및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확인됨.

- 제가 없는 시간에 같이 있어주고 그림책을 읽어주시거나 한글을 가르쳐주시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어머니 4)
- 아이들 선생님이 집에와서 지도를 해주고 그런식으로도 좋구요 (어머니 5)
- 제가 직장생활해서 아이가 아직 학교를 안가니까 학교생활은 모르겠는데 아이들 일찍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1시 2시쯤에 들어가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집에 있어야 되나 애 혼자 집에 두고 가야하나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어머니 6)

○ 최초 지원서비스 접점으로서 다문화가족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 관련 교육 및 지원은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 다문화가족센터가 2006년인지 그 때 쯤에 오픈을 했어요. 다문화가족센터가...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기회도 많았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거의 그런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한국어 하고 막 여러가지 배우는 기회가 많았어요. (어머니 4)
- 제가 한국말을 이정도 되는 것은 다문화센터 통해서 제가 한국어를 많이 배웠고 문화라던지 모든 게 다문화센터에서 배우게 되었어요. (어머니 5)
- 그때 생각하다보니까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뭐 도와주고 그랬던 게 없었던 거 같아요. (어머니 4)

○ 활용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입국 초기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떨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어디에 요청하는 건지 그런 거 전혀 잘 몰랐던 거 같아요. (어머니 4)
- 우리가 다니는 곳에 슈퍼 안에 있다던가 병원이나 산부인과 같은데도 ‘통역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안내가 있으면) 그런게있구나 하거든요. 버스 안, 기차역, 버스터미널 그런데서 자주자주 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머니 4)

- 전화를 해주실 때도 있는데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도 계셔서 옆에서 보면 선생님도 설명하시는데 고생이 많고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머니 5)
- 언어 쪽은 제가 도움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스스로 해결을 하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언어 쪽에서 통번역 서비스라던지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 없었어요. (어머니 5)

○ 초기 정착시기 각종 지원 습득에 있어서 가족, 지인, 교회 등 민간 지원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

- 교회에서도 교육을 많이 해주셔서 한국어교육, 요리도 많이 배우고. (어머니 4)
- 보험은 저기서 남편의 친구 보험회사 다니는 남편친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입을 했어요. (어머니 4)
- 제도가 있어도 알기가 어려우시니까, 남편이 해주면 하는 거고 안 해주면 안 하는 거고. (어머니 4)
- 처음에는 주로 남편이나 시누이나 주변에 한국에 먼저 들어온 일본친구들,,,그때는 (정보 얻기가) 어려웠던 거 같아요. (어머니 4)
- 시어머니가 계셔가지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도 씻겨주고 아이도 봐주고 같이 조금 조금씩 해서 저도 이제 아이도 키우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문화도 배우고 점점 나아지는 거죠. (어머니 5)
- 저희 시어머니 계신데 또 나이 좀 있어서 병도 걸리시고 아무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그래서 큰형님이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어머니 6)

○ 기타 파악된 욕구: 어머니 취업기회 확대 및 생활밀접 기관들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

- 글썽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던가 그런 거하고 엄마들을 위해서는 단계별로...(교육) 근데 지금도 충분히 되어있는데 조금 더 일자리를 늘여주시거나 교육인거 같아요. (어머니 4)
- 일 때문에 자격증 필요하면 저희한테 그걸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한국생활, 한국말 배우는게 많잖아요. 집에 있는 것 보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야 외국 사람이라서 그 돈은 있으면 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거보다 아무래도 일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6)
- 병원이나 은행. 은행도 필요해요. 은행도 돈 관리라서 돈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잖아요. 조금만 설명해주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6)

제5장. 다문화가족 자녀 건강 및 보건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990년대 초반 농촌을 중심으로 한국남성-외국인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함. 다문화가족의 전국 규모는 2008년 34만명에서, 2011년 55만명으로 급증하였고 2020년 현재는 100만명을 넘어섬. 한국사회는 아직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와의 공존의식이 미흡하여 이민자의 경우는 주로 저숙련, 저임금 직종에 종사. 또한,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이념이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중 어떠한 성격을 지녔는지 불명확하고, 정책내용이 여전히 인권보호나 외국인 관리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그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제도 마련에 힘써왔음(김영란, 2012).
- 더구나,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에서 가장 큰 장애는 언어소통문제임. 사실상 낮은 언어능력 수준은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정보활용 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활용능력을 감소시킴.
- 또한, 이주민은 낯선 환경의 적응문제가 있고, 한국의 전통적 혈통주의로 인한 차별경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전문지식이 강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이주민은 언어적 소통장애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이 높고,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실질적 이해가 어려움(김혜련 외, 2012)
- 다문화가족의 건강수준은 성별, 연령, 출신국가의 건강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사회경제적 상태, 보건의료시스템에 따른 미충족 의료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음(김혜련 외, 2012). ‘매우 좋다’ 또는 ‘좋다’로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인지율(여성 52.2%, 남성 61.6%).

- 이러한 결과는 이민자들이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기 때문임.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낮아짐.
- 이주민 가운데서도 결혼이주여성은 상당수 건강취약 계층임. 출신국가별로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족갈등 뿐 아니라, 자녀양육의 어려움, 건강관리상의 문제를 경험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국적 취득 이전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성과 영유아 건강서비스가 요구가 매우 높은 집단임.
- 결혼이주여성의 약 10%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 연령이 낮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미충족 의료가 증가(김수희, 이정열, 2013)
- 의료기관 이용시 장애요인으로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의료비 부담', '교통 불편', '이용절차 복잡' 등이 있음.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 72.3%, 약국 13.0%, 한의원 6.9%임. 결혼이주여성은 국내 입국 후 평균 6.6개월만에 임신과 출산 경험. 임신 및 출산관련 서비스는 약 30%가 이용. 연령이 적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저학력일수록, 미취업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필리핀 출신이 더 많이 이용(김안나, 최승아, 2012).
- 보건의료인력의 다문화에 대한 준비부족이 다문화 대상자의 부적절한 의료경험의 원인이 되기도 함(박명숙, 권영란, 2013)
-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및 보건 욕구를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강구될 필요가 있음. 강원도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그들의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개입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관련 욕구를 파악하고,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 및 보건정책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챕터 구성

- 다문화가족의 건강 관련 선행연구 분석
-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 정책 분석
-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 및 보건 욕구, 건강지원사업 분석
-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제6장 결론 참조)

2. 다문화가족의 건강 관련 선행연구 분석

1) 다문화가족 건강 및 보건 현황

- 결혼이민여성들은 다문화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젊은 연령층으로 한국문화의 적응에 앞서 임신·출산에 따른 모자보건서비스의 수요가 높음(김혜련 외, 2008). 임신·출산기에는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 자궁내 성장지연, 선천성 기형의 빈도가 일반 한국여성에 비해 높음(안지숙 외, 2013, 재인용).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우리나라 가임기여성들과 비교할 때, 빈혈유병율과 기생충감염율이 높고, B형간염 보균율, B형간염 항체 양성율이 낮았음(김혜련, 2010, 재인용). 이러한 건강문제는 모자수직감염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주여성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에도 중요한 이슈임.
- 한국건강관리협회(2009)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의 부족, 의료진과 의사소통에서 큰 어려움을 겪음.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주로 알고 싶은 내용은 ‘출생 후 아기를 돌보는 방법’, ‘임신 중 태아의 정상발달’, ‘산후관리’, ‘엄마젖 먹이는 방법’, ‘임신 중 음식’, ‘피임방법’, ‘유산·사산 예방관리’, ‘임신 중에 피해야 할 약과 건강생활(담배, 술 등)’, ‘진찰을 받아야 하는 병원이나 보건소의 위치’ 등이었음. 또한, ‘신생아돌보기’, ‘자녀의 성장발육에 대한 정보’, ‘아기 영양보충 방법’, ‘예방접종’, ‘자녀 사고 예방’ 등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요구도가 높음(김혜련, 2010, 재인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건강 및 의료 지원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들은 건강검진사업, 외국인근로자공제회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어, 대부분이 한국의 건강보험체계에 만족하는 편임.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시 다문화가족이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김정인, 2018)
- 이민자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연령, 출신국가의 건강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이민전후 사회경제적 상태, 보건의료시스템에 따른 미충족 의료서비스 수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복잡하게 서로 관련이 있음(김혜련, 2010).
 -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낮아짐. 다문화사회를 이룬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민자와 본국인의 건강상태를 비교할 때 health immigrant effect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함. 이는 이민자들이 이민 초기에 본국인 보다 건강하며, 체류기간이 경과하고 사회에 적응하면서 본국인과 유사한 건강수준을 갖는 경향을 의미함.

- 2009년 결혼이민자의 건강보험가입률은 82.7%였음.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 건강보험가입률이 낮았음.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보험료 체납, 혼인신고 지연 등 가족관계등록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됨.
 - 미충족 의료는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우를 말함. 우리나라 건강보험 특성상, 본인부담률이 높아 보장성이 낮은 편이며, 고비용의 의료행위 이용에 있어 미충족의료 발생 가능성이 큼. 여성결혼이민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체류기간이 길수록, 미충족 의료수준이 높음.
 - 다문화가족이 의료기관 이용시 장애요인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38.7%)'과 '비용부담(26.4%)'을 가장 많이 호소함. 그 다음으로, '교통불편(5.4%)', '이용절차 복잡(3.6%)' 등이 있음.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를 세부요소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결혼이민자의 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은 60.9%였음. 지원서비스별로 보면, '임신·출산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이 45.5%로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51.8%)'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다시 말해, 임신·출산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관심이 한국어능력 배양만큼이나 높음을 방증하는 것임. 특히, 출신국적별 임신·출산서비스 이용경험은 베트남(59.8%), 캄보디아(58.9%), 일본(47.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임신·출산지원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를 5점척도로 측정할 때, 2.95점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러한 임신·출산지원 서비스의 요구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내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60세 이상층에서는 일반국민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건강상태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내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양호한 것으로 보임. 지난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이들은 31.2%를 차지함.
 - 지난 1년간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한 결혼이주민의 비율은 11.5%였음. 의료시설 이용 장애요인으로, '근무, 육아 등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42.0%)',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30.2%)',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12.0%)' 등이 있었음.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가까운데 병원이 없어서, 어떤 종류의 병원을 가야될지 몰라서 가지 못한 경험이 많은 데 비해,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는 체류기간이 길수록 많았음.

2) 다문화가족 건강 및 보건을 위한 개선방안

- 건강문해력이란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건강정보와 서비스를 획득, 이해, 처리하여 적절한 건강행동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함(안지숙 외, 2013). 건강문해력이 낮으면 예방적 검진을 안하고, 만성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입원기간이 길고, 응급실 이용률이 높은 경향이 있음. 결혼이주 여성의 의료용어 이해정도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생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일 가능성을 시사함. 한국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주관적 한국어수준이 낮을수록, 출신국은 중국이 아닌 베트남, 필리핀 또는 기타국일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해력은 낮았음.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해력 수준과 요구도에 맞춘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강교육과 상담이 요구됨.
- 다문화가족은 건강서비스의 주요 문제점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불만, 병원이용시의 불만족 경험을 호소하였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건강정보 접근성, 의료진 인식 개선 등의 장단기 개선방안을 도출함(임동선 등, 2018).
 - 문제점 : 건강정보 접근성 낮음, 영유아 건강검진 알림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부모의 미숙한 한국어능력이 검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감, 형식적 검진서비스 개선요구, 의료진의 다문화인식 및 차별 개선요구, 병원이용 시 복잡한 서류작성과정, 검진예약절차, 부족한 다국어 서비스,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다문화가족의 건강인식 차이에 따른 미진한 구강 관리 및 정신건강 관리, 의료진 및 다문화센터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 이용 서비스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강화
 - 개선방안 : 영유아 건강검진시 건강iN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정보 접근성 및 정보제공기능 강화, 건강검진 전문인력 배치, 의료진 대상 다문화인식 교육을 제시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서비스로는,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서비스, 출입국사무소를 통한 정기적인 정보알림 서비스,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제공 서비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관리, 사회적 연결망 구성
- 이주민의 정착시기에 따라 보건의료 접근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김계형, 박상민, 2014). 입국초기에는 특정 연령군을 중심으로 ‘따라잡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이주과정에서 겪는 정신보건학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중장기 정착기간을 거치면서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함. 출신국가의 사회문화적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포용성을 전제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수준과 탁월한 접근성에 대해 긍정적임. 그러나 의료인의 외국인환자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권위적인 태도에 대해 불

쾌감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가짐.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언어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외국어지원 시스템 확립,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시스템과 진료절차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함(이병숙 외, 2011).

3.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 정책 분석

1) 다문화가족 정책일반

- 이주민과 관련된 개념과 용어의 혼란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정책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본 보고서 제2장 참조).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명확하고 통일된 이주민 용어 정립이 시급함.
- 한국과 독일 간 다문화가족정책의 법제도적 비교검토를 실시함(김영란, 2012). 독일은 한국과 매우 유사하게 순혈주의와 단일민족, 민족분단, 국적법상 속인주의 등의 특성을 보임. 독일은 이민법과 국적법을 근거로 이민자 본인에 정책과, 다문화가족 2세대에 대한 정책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민자문제를 통합적인 정책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룸. 특히 독일의 사회통합책은 독일어 교육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언어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만 2,500억원에 달함. 즉, 이주민의 성공적 정착에 필요한 언어능력의 배양에 정책적 심혈을 기울임.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정부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행정편의에 맞춘 정책문제, 결혼 이외 목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민은 혜택대상에서 배제되는 등의 정책대상범위의 협소문제, 결혼이주민 가족에 대한 동일지원이 아닌 차별화된 지원, 다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 문제가 존재함. 따라서 관리 및 통제의 차원에서 벗어난 다문화가족의 인권이 존중되고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함.
- 다문화주의적 정책성향이 강한 국가로는 캐나다와 호주가 있음. 이주여성의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료시혜 차원을 넘어 이주여성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생태적 접근을 취함. 이들 국가에서는 이주여성의 요구 및 현실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이주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기관 설립 및 차별화된 사업 운영, 1차 진료서비스, 이동건강클리닉, 방문을 통한 집단서비스, 이주여성의 언어에 맞춘 의료정보 시리즈 등 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문화 및 언어적 적합성, 건강정보의 정확성 및 접근성 증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강

화, 옹호(advocacy) 및 커뮤니티 연계가 돋보임.

2) 다문화가족 건강 및 보건정책 분석

- 다문화가족 건강 및 보건정책의 기본골격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시되고 있음. 여성가족부가 중앙정부부처로 주관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 중임. 최근 다문화가족정책은 ‘도입 및 성장기’에서 ‘정착기’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 중심에서 장기정착으로의 정책을 강화하여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맞춰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예산을 배정받아 세부과제를 진행하고 있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비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
 - 목표: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정책과제: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을 둔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2020년 기준, 다문화가족정책에 투입된 총 예산은 5,629억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은 124개의 과제를, 지방자치단체는 1,086개의 과제를 실시 중임. 중앙행정기관의 예산규모는 4,518억으로 여성가족부, 외교부, 교육부의 순으로 높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1,111억으로 강원, 전남, 경남, 경기 순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부문을 관장하며, 2020년 건강 및 보건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세부과제로는 3개가 있는데, 이에 총 34억의 예산이 투입됨. 전체 소요예산(5,629억원)의 0.75% 수준으로 타 부처에 비해 예산규모가 절대적으로 미미하고, 건강 및 보건부문의 전문인력이나 시설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풀이됨.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사례관리사업이 있음. 내실화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복지기관, 시군구/읍면동 간의 정례적 소통 및 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둘째, 다문화가정 영유아보육 및 지원사업이 있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함.
 - 셋째,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의료지원사업이 있음. 베트남 귀환여성 자녀에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하며, 자녀돌봄 건강정보 책자 배포와 교육 등 건강정보 제공이 있었음.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였고,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 운영
 - (사업 목적)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통합서비스 추진경과) 16년(78개소) → 17년(101개소) → 18년(152개소) → 19년(183개소) → 20년(196개소)
- (그간 정부정책의 문제점 진단) 이에 정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 및 정책노력을 지속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다문화정책의 경직성, 부처 간 중복사업, 정책총괄센터 부재, 다문화 전문인력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지적됨.
- 위에서 언급한 국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행연구와 정책검토를 근거로 할 때,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의정책은 절대적 예산이 부족하므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에 ‘가장 비용효과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앞서 분석된 선행연구와 정책적 검토에 비추어 볼 때, 정책수혜집단은 ‘결혼이주여성’으로, 정책목표는 ‘모자보건, 생식건강,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정신건강서비스’로 설정하며, 정책수단은 ‘정보제공’을 채택한다면, 정책성과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3) 강원도 다문화가족 현황 및 건강 관련 조례 검토

- 강원도 다문화가족의 현황
 - (강원도 인구) 강원도의 인구는 2018년 기준 1,561,313명(전국 인구의 약 3%)
 - (강원도 예산) 강원도 2020년 예산은 74,435억원(재정자립도 27.6%)
 - (강원도 다문화가족 현황) 강원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수는 6,989명(전국의 2.1%).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6,824명(전국의 3.1%)
 - 도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총 18개 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강원도 거점센터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강원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다문화가족대상별’ 통계자료에 의하면 도내 사업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결혼이민자 3,951명, 다문화자녀 2,929명 등을 포함한 약 9,000명으로 추산됨(2020년 3월 기준).

- 도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일할 욕구가 높고 청장년층의 장기거주자가 많음

○ 강원도 지역현안

- 제4기 강원도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에서는 다음의 지역현안 문제를 제시함:
- 예산, 인력의 확충 등 강원도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상존,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부족과 정보 불균형 심각.
- 도내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및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함.

○ 강원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현황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강원도의 2020년 사업예산 규모는 12,455백만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음. 강원도의 다문화가족 사업은 총 45개로, 5개의 주요 정책과제별로 강원도 및 18개 시군의 공통사업 11개와, 도내 지자체 특색에 맞춘 특화사업 3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5대 정책과제별 예산비중은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63.24%,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15.30%,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11.5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세부사업별로 보면,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데, 이는 강원도의 다문화정책 총 소요예산의 약 37%에 해당하는 가장 비중이 큰 사업임.
- 다문화가족 사업 중 보건의료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업은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 사업’이 유일무이함. 사업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 등 의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체계적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 기여에 있음.
- 사업대상 및 규모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다문화가정 부부 500명이며, 연간 사업예산은 5천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의 0.40% 수준임. 사업운영방법은 이동검진 차량 순회진료 형태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41개 검진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함.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 간 검진비율은 대략적으로 80% 대 20% 정도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사업수혜가 쏠려 있음.

<표 5-1> 강원도 다문화가족 사업현황(2020년)

사업명	추진주체	성과지표	2020년		
			목표치	예산 (백만원)	총예산 대비 %
1.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1,442	11.58
이주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공통)	강원도	피해인원	50명	56	0.45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공통)	강원도	중개업관리	2회	비예산사업	
다문화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특화)	홍천군, 영월군	탐방수	60명	4	0.03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공통)	강원도	통번역사 수	28명	386	3.10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 사업(특화)	18개 시군	검진인원 수	500명	50	0.40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사업(특화)	15개 시군	방문 가구수	196가구	700	5.62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사업(특화)	4개 시군	캠프실시 수	4개소	100	0.80
외국 이주노동자 한국문화정착 사업(특화)	원주시	참여인원 수	275명	11	0.09
다문화가정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식(특화)	3개 시군	혼례가정 수	13가정	19	0.15
다문화가족 정선바로알기 프로그램(특화)	정선군	개최 수	4회	5	0.04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지원(공통)	7개 시군	사례관리사수	7명	107	0.86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지원(특화)	태백시, 고성군	지원인원 수	20명	4	0.03
민원서류 외국어 지원 서비스(특화)	원주시	번역건수	60건	비예산사업	
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526	4.22
결혼이민자 검정고시 교육(특화,종료)	강원도	실시개소 수	-	-	0.00
한국어교육소 운영(공통)	강원도	운영개소 수	18개소	180	1.45
결혼이민자 상호멘토링 사업(특화)	강원도	참여센터 수	14개소	62	0.50
결혼이민자 취업교육(특화)	강원도	교육인원 수	60명	40	0.32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자립기반조성(특화)	11개 시군	참여인원 수	254명	103	0.83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공통, 신규)	강원도	운영개소 수	18개소	27	0.22
관광통역 안내원 운영(특화, 신규)	고성군	안내원 수	2명	67	0.54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특화)	4개 시군	자조모임 수	600명	47	0.38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1,906	15.30
다문화 및 저소득층 청소년 해양캠프(특화)	고성군	행사참가자수	640명	20	0.16
다문화가족 심리정서 지원(특화)	원주시	참여인원 수	360명	10	0.08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특화, 신규)	강릉시	참여인원 수	20명	5	0.04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강사 지원(공통)	9개 시군	지도사 수	8명	114	0.92
다문화가족 엄마아빠나라 말 배우기(특화)	홍천군, 인제군	운영가구 수	40가구	16	0.1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자 지원(공통)	강원도, 횡성군	지도사 수	113명	813	6.53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도자 지원(공통)	13개 시군	지도사 수	17명	279	2.24
자녀 한글학습지 지원(특화)	강원도, 횡성군	참여자 수	864명	380	3.05
결혼이민자 및 자녀 교육지원(특화)	3개 시군	교육참여자수	348명	247	1.98
다문화가족지원 행복플러스 사업(특화)	태백시	이용가정 수	25가정	17	0.14
군장병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글로벌 리더교육(특화)	홍천군	참여인원 수	40명	5	0.04
4.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704	5.65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특화)	3개 시군	참여자수 등	1,000명	100	0.80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특화)	강원도	행사개최횟수	1회	35	0.28

사업명	추진주체	성과지표	2020년		
			목표치	예산 (백만원)	총예산 대비 %
결혼이민자 문화예술사업 운영(특화)	5개 시군	구성팀 수	6팀	55	0.44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특화)	14개 시군	개최횟수	16회	176	1.41
미혼자 국제결혼 비용 지원(특화)	4개 시군	지원자 수	36명	278	2.23
다문화 감수성 이해향상 프로그램(특화)	원주시	개최횟수	2회	40	0.32
다양한 음식문화 체험프로그램(특화)	원주시	운영개소 수	1개소	20	0.16
5.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7,877	63.24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특화)	강원도	개최횟수	1회	6	0.05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네트워크 구축 운영(특화)	강원도	개최횟수	1회	3	0.0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공통)	강원도	센터 수	19개소	3,151	25.3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특화)	홍천군, 인제군	센터 수	2개소	30	0.2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특화)	강원도	지도사 수	95명	117	0.94
가족센터 건립(공통)	5개 시군	사업추진시군	5개소	4,570	36.69
합계				12,455	100.00

○ 강원도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검토

-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¹⁵⁾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였음. 강원지역의 19개 지자체(본청 포함)는 모두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를 도입하였으며, 건강 및 의료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건강 및 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임.
- 대부분 ‘다문화가족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음. 요약하면, 강원도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정책은 산전·산후 건강관리 및 교육, 건강검진, 영양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전국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수집하여 이주자의 적응전략과 지자체의 제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 243개의 지자체 중 92.1%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도입하고 있음(김정인, 2018). 이주자의 적응전략은 이주자가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문화적응)와 이주수용국가 국민들의 이주자에 대한 수용태도(구조적응)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통합모형은 이주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문화적응高) 이주수용국가의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임(구조적응高). 이와 정반대로 주변화전략 모형은 문화적응低, 구조적응低의 양상을 보임. 동화모형은 문화적응低, 구조적응高인 반면, 분리모형은 문화적응高, 구조적응低인 상태임. 연구결과,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대다수는 통합모형과 동화모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12개 지자체(본청,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

15) <http://www.elis.go.kr/>

시, 홍천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횡성군, 고성군)는 통합모형을 취하고 있으며, 강원지역의 7개 지자체(동해시, 태백시,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양양군)는 동화모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4.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¹⁶⁾ 결과가 공표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건강 및 보건영역에 해당하는 주제로 한정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¹⁷⁾를 구분하여 조사함. 또한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통계와 비교분석함.

1) 결혼이주여성

(1) 전반적인 건강상태

- 강원도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하는 전반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에 평균 3.9점으로 양호한 수준임. 전국 통계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

<표 5-2>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인지)건강상태

단위: %, 점

지역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합계	평균 (5점만점)
전국	25.2	42.6	20.9	9.5	1.8	100.0	3.8
강원	22.0	50.8	21.1	4.7	1.3	100.0	3.9

출처: 여성가족부(2019)

16)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3년 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전수조사 이후로 2012년, 2015년, 2018년 표본조사로 실시되었음. 마이크로데이터의 형태로 통계청에서 원시자료(raw data)를 공개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변수에 따른 세부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임. 다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가공된 형태의 통계표를 구득 가능함.

17) 배우와 자녀 대상의 건강실태 및 의료이용 조사항목은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매우 제한적임. 특히 자녀의 건강현황에 대해서 거의 보고되지 않는 실정임.

(2) 지난 1년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 미충족 의료경험을 묻는 설문문항에 ‘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10.1%를 차지함. 전국 통계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5-3> 지난 1년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단위: %

지역	있다	없다	합계
전국	11.5	88.5	100.0
강원	10.1	89.9	100.0

출처: 여성가족부(2019)

(3) 병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

- 강원도 결혼이주여성의 의료이용 장애요인으로서는 1순위 ‘근무, 육아 등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37.9%)’, 2순위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16.0%)’, 3순위 ‘가까운 데 병원이 없어서(13.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 전국 통계에서는 1순위 ‘근무, 육아 등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42.0%)’, 2순위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30.2%)’, 3순위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12.0%)’의 순으로 나타남. 전국통계와 비교해볼 때, 강원도 결혼이주여성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의료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5-4> 병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단위: %

지역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가까운데 병원이 없어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어떤 종류의 병원을 가야될지 몰라서	이용절차가 복잡해서	근무, 육아 등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기타
전국	12.0	5.7	30.2	4.4	4.1	42.0	1.6
강원	16.0	13.9	13.2	4.2	10.2	37.9	4.8

출처: 여성가족부(2019)

(4) 지난 1년 지속적으로 2주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

- 강원도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은 4점척도에서 3.6점으로 매우 양호함. 그러나 우울감과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29.8%를 차지함. 전국통계와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양상이 관찰되지 않음.

<표 5-5> 지난 1년 지속적으로 2주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

단위: %, 점

지역	그런 적 없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합계	평균 (4점만점)
전국	68.8	24.4	5.0	1.8	100.0	3.6
강원	70.3	24.0	4.2	1.6	100.0	3.6

출처: 여성가족부(2019)

(5) 건강관련 지원시설 이용경험

- 강원도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경험을 76.2%,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용경험을 32.1%로, 전국통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누리 콜센터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7.2%,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34.2%로, 강원도 결혼이주여성의 다누리 콜센터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표 5-6> 건강관련 지원시설 이용경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모른다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모른다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모른다	알고 있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은 없다
전국	19.7	47.6	32.7	57.8	14.7	27.6	66.1	6.0	27.9
강원	6.2	76.2	17.5	39.7	32.1	28.2	57.2	8.2	34.6

출처: 여성가족부(2019)

2) 배우자

(1) 전반적인 건강상태

- 배우자의 전반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에 평균 3.8점으로 양호하며, 전국통계와 거의 흡사한 패턴을 보임.

<표 5-7>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단위: %, 점

지역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합계	평균 (5점만점)
전국	21.3	46.9	22.6	7.5	1.8	100.0	3.8
강원	18.1	51.8	21.6	6.9	1.7	100.0	3.8

출처: 여성가족부(2019)

(2) 지난 1년 지속적으로 2주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

- 배우자의 정신건강 수준은 4점척도에서 3.7점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해석됨. 우울감과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20.0%로 결혼이주여성 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표 5-8> 지난 1년 지속적으로 2주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배우자)

단위: %, 점

지역	그런 적 없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	합계	평균 (4점만점)
전국	77.6	18.6	2.8	1.0	100.0	3.7
강원	80.1	17.6	1.0	1.4	100.0	3.8

출처: 여성가족부(2019)

5.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 및 보건 욕구, 건강지원사업 분석

1)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 및 보건 욕구 : 결혼이민여성 심층인터뷰

- 다문화가족 어머니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음.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확보, 아크릴 설치 등 코로나-19 감염관리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대면조사로 실시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에 e-mail로 질문지를 보낸 뒤, 전화로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연구 철회 및 익명으로의 조사 참여 등 연구 윤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고 난 후 면담을 수행하였음.

<표 5-9> 다문화가족 건강 및 보건 욕구-다문화가족 어머니 조사 대상

구분	출신 국가	자녀 여부	조사 방법
어머니 7	중국	있음	대면조사
어머니 8	베트남	있음	대면조사
어머니 9	베트남	있음	대면조사
어머니 10	베트남	있음	대면조사

주: 번호는 임의로 부여하였으며, 제3장과 제4장의 대상자와는 다름.

(1) 입국초기 가장 큰 어려움

○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언어적 장벽이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공통적으로 호소하였고, 이외에도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자녀교육방식, 식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음.

-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의사소통, 언어예요. (어머니 9)
-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 생길 때도 많았어요. (어머니 10)
- 음식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교육 방식도 다르고. (어머니 9)

(2) 의료기관 이용경험 및 어려움

○ 언어적 문제로 인해 병원 이용시 부정적 경험이 많음. 한국어에 능숙한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고서는 건강상태를 의사에게 설명하기 힘들고, 의료진의 설명이나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움.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심리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큼. 또한 의료기관의 통번역 지원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은 전혀 없다고 하였음.

- 아기 아플 때 어떻게 의사선생님께 설명해야 하는지 어려워요. 항상 남편이랑 같이 가야 해서 불편해요. (어머니 10)
- 거의 다 남편이 다 챙겨요. 예방 접종 해야 되는 날도 남편이 다 챙기고 같이 가서 접종하고. (어머니 9)
- 전 영어 조금 알아서 애기랑 같이 병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랑 조금 영어 섞어서 썼는데 100% 서로 이해 할 수 없고 70% 정도 이해했어요. 베트남어를 영어로 통역하는 어플도 사용했는데 너무 불편해서 이런 점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통역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8)
- 다른 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저도 병원에 남편이랑 같이 가요. 병에 대한 전문 언어가 너무 어렵고 답답해요. 애기 학교 보내는 문제도 저 혼자 하지 못하고 남편이 같이 해야 해요. (어머니 7)

- 병원 갔을 때요. 저 한국에 왔을 때 큰 수술 받았어요. 근데 어떤 수술인지 난 잘 모르
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만 해서 답답했어요. 수술 전에 밥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먹으면
안 되는지 모르고 배가 너무 고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울면서 저는 병 때문에 죽는게 아
니고 굶어 죽을 거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답답했어요. 수술 후 퇴원해도 간호사
선생님이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언제 퇴원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3주 동안 계속 병원에
있었는데, 안내해 줘도 못 알아듣고... 그때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어머니 9)
- (의료기관 이용시 통번역 지원인력이나 관련서비스가) 없었어요. (어머니 9)
- 제가 처음 왔을 때는 2004년도였어요. 그 때 임신 7주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건강보험
처리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9주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심장박동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중국어를 할 줄 아는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두렵기도
하고 불신감이 있어서 다른 병원도 갔어요. 결과는 똑같았지만, 또 그때는 남자 의사 선
생님이어서 많이 불편했어요. 처음 왔을 때, 처음 병원 갔을 때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병원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어머니 7)

○ 자국에 비해 높은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의 문제를 지적함.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기도 함. 다문화가족의 거주형태(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형, 농촌형)에 따라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음.

- 경제적 어려움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산부인과 가면 초음파 검사도 해야 하
고, 스케일링도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요즘엔 많이 줄었지만 예전엔 비쌌어요. (어
머니 7)
- (실제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는 경험) 중국사람은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스케일링을 잘 안 해요. 나이 있는 부분들은 치아가
부실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적 인식이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또 여성들의 경우 자
궁경부암만 검사하는데 다른 부분도 초음파로 검사하고 해야 하는데 안하는 경우도 많아
요. (어머니 7)
- (교통불편이나 지리적 접근성에 따른 어려움) 시내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못
느끼는 거 같은데 시골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많이 불편해하는 거 같아요. (어머니 7)

(3) 상이한 보건의료체계 및 진료비 부담

○ 건강보험 가입률 면에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식하나, 결혼이주여성
의 모국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거나, 진료비 지불시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
를 지적함.

- 지금 한국 의료는 좋다는 소문이 났어요. 반대로 오히려 중국에 있는 자기 부모님을 일
부러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안가는 경우는 좀 있어요. 의료
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을 따로 실비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안가요. (어머니 7)

- 중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긴 한데 시골이나 낙후된 지역은 아직 (가입이) 안 되어있어요. 큰 도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도 한국처럼 이렇게 폭이 넓은 않아요. 그 중에서만 일부만 어떤 병에 대해서 어떤 약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한국은 폭 넓은 의료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지금은 결혼이민자들이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는걸 알고 있어서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검진이에요. 많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건강검진은 일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안가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남편의 의료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가지 않냐고 해요. (어머니 7)
- 베트남에서 직장 다닐 때 의료보험에 가입했어요. 베트남 의료보험은 되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한국에선 많이 못해준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10)
- 베트남은 보험료가 싸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100% 의무 가입되어있어요. 1년 보험료가 3만 원 정도예요. (어머니 10)
- 한국에서는 거의 남편이 내기 때문에 얼마내는지 모르는데 병원 갈 때 돈 내는걸 보고 본인 부담금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았어요. (어머니 10)

(4)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영역

○ 건강검진, 영유아예방접종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이와 관련하여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안내시 정보제공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언급함. 예를 들어, 출신국가 모국어로 번역되어 정보를 안내하거나, 건강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를 희망함.

- 건강검진 관례해서 안내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국어로 쉽게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안 되면 해당되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가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7)
- 의사소통이 제일 큰 문제예요. 병원 가려고 하면 남편이 항상 같이 가야 하거든요. 남편이 바빠서 같이 못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 다 받고 이렇게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들으니 남편한테 전화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남편한테 통화해서 설명 주고, 처방전 주면 그냥 약국 가서 약 받아와요. 내가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뭘 주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약만 받아와요. 또, 자궁암 유방암 이런 걸 검사하고 싶은데 혼자 가면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 남편이랑 같이 가야 하는데 혼자 가면 절차나 설명을 못 알아 들을까봐 두려워요. 제가 외국인이라 잘 몰라서 못 알아들었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설명하고 그래요. (어머니 9)
- 남편들은 해당 되도 부인이 해당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더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무료 건강검진 해당되는 해에는 제가 주변에 얘기 많이 해요. (어머니 7)
- 그리고 건강검진이 참 좋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 검사하러 가면 질문 작성하는 게 너무 많아서 혼자 못 해요. 카카오톡으로 정보 보내줄 때 문진표도 사전에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미리 작성하면 모르는 건 남편한테 물어볼 수 있고. (어머니 9)
-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남편들은 해당 되도 부인이 해당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더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무료 건강검진 해당되는 해에는 제가 주변에 얘기 많이 해요. (어머니 7)

○ 건강상태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비스 요구도 영역은 국적별, 세대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임. 가령, 치아건강과 관련하여 어머니 7은 나이가 많은 연령대에서는 치아건강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데 반해, 젊은 연령대에서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말함.

- 치아건강은 우선순위가 아니기도 하고, 치과 가는 게 두려워요. (어머니 7)
- 중국사람은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스케일링을 잘 안 해요. 나이 있는 부분들은 치아가 부실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적 인식이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어머니 7)
- 아이들 어렸을 때 양육방식, 구강청결 부분도, 지금 중국에 있었을 때는 아마도 이런 부분 되게 중요시 했는데 치아건강을 보면, 옛날에 부모님 세대에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애기들 충치 엄청 많아요. 나도 임신했을 때 이빨 다 망가졌어요. (어머니 7)
- 지금도 중국 이민자들은 치과 가는 부분은 약해요. 치과 가는 것도 두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어머니 7)

○ 결혼이주여성은 본인의 건강관리 보다는 자녀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음. 경제적 부담이 있더라도 출산전후 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에는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말함.

-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주변에 결혼이주여성들을 보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있었을 때도 이민자들 처음 왔을 때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자기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기를 가질 수 있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 산전검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임신하고 나서 아이들 어렸을 때 갈 수 있긴 한데도, 남편이랑 깊은 대화 할 수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 증상 설명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소아과, 아이가 어디가 아프는지, 집에서도 남편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머니 7)
- 아이들한테는 많이 써요. 그런데 자기한테 쓰는 거는 뒷순위로 밀리는 거죠. (어머니 7)
- 소아과는 비용 많이 안는데 산부인과는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염증 같은 거 생기면 한번 가면 6-7만원 정도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병원 가면 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10)
- 다른 결혼이민자 얘긴데,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이 무료로 예방접종 받는 게 안 좋다고 돈 주고 맞으라고 해서 그런 글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대요. 한국 사람이면 뭐가 좋은지 찾아서 잘 알아보고 할 텐데 외국

인이라 그런 정보를 알아볼 수 없어서 그 말이 진짜지 뭐가 좋은건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 8)

(5) 강원도 건강지원사업 수혜 경험

○ 어머니 7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함. 그러나 단순 정보수집 차원에 불과한 건강상태 조사로 인식되고,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체감함. 일부러 방문간호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보건소에서 가정 방문해서 아픈데 있는지 최근 6개월 동안 체중감소한 게 있는지 건강상태 체크하는 거 때문에 왔어요. 내가 아플 때 온 적은 없어요. (어머니 7)
- 아팠을 때 와서 치료를 하거나 서비스를 해줬다는 게 아니고 통계자료로 쓰기 위해서 왔던 거 같아요. (어머니 7)
- 사실 서비스가 의미 없어요. 도움도 안됐고, 오지 말라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머니 7)

(6)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점

○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를 대부분의 대상자가 희망함. 또한 건강정보의 문해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사업수행시 사업홍보 강화, 배우자를 통한 정보의 전달, 사전에 건강정보조사지의 배포 등 정책수행자가 정보제공자로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를 기대함. 이외에도, 어머니 8은 국적 미취득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수혜가 가능하도록 개선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것, 건강검진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작성할 때 사전에 모국어로 작성할 수 있게, 치과 부분도 비용이 좀 낮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7)
- 국적 있는 분들은 거의 매년 건강검진 받고 있고 배우자 통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국적 없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8)
- 자부담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9)

2)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사업 분석

○ 본 연구팀은 강원도 보건정책과 건강증진담당자에게 사전에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연구동의를 얻은 후 최근 4개년도(2007년~2020년)에 해당하는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검진사업실적(내부자료)을 제공받아 분석함. 단, 2020년도 자료는 9월 시점까지 수집된 자료로,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총괄분석에서는 제외됨.

(1) 2017년~2019년 건강검진사업 분석(총괄)

-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사업수혜대상자는 결혼이민자 및 그들의 배우자로, 목표대상자 규모는 500명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음. 결혼이민여성의 검진실적은 450명 정도로, 배우자에 비해 월등하게 건강검진사업의 혜택을 받음. 이는 강원도 결혼이민자 전체 인원¹⁸⁾의 13.6%에 해당하는 수치임.
- 연도별 건강검진 실적은 최소 539명에서 최대 558명(2020년 제외)으로, 건강검진율¹⁹⁾이 10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강원도 다문화가족 건강검진사업의 효과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됨.
- 결혼이민자에 한해 국적별로 사업대상자를 분석하면, 베트남과 중국이 전체 수검 인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우리나라 및 강원도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구성비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시군구별로 세부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인원규모는 춘천시가 100명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나머지 지역은 50명 이하로 대동소이한 경향을 보임. 그러나 2017~2019년 원주시의 건강검진율은 0~4%로,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이는 2020년 원주시 건강검진율이 110%인 것으로 미루어볼 때, 2017년~2019년 사업담당부서의 부재나 전담인력의 공백 등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됨.

(2) 연도별 건강검진 실적(세부)

○ 2020년 건강검진 실적(9월 기준)

- 국적(결혼이민자)별 사업수혜규모 : 중국 71명, 베트남 70명, 필리핀 31명, 캄보디아 13명, 일본 11명, 기타 31명
- 검진결과 : 유소견자 267명(88.4%), 여자 186명(81.9%), 남자 70명(93.3%)
- 질환별 유소견자 : 이상지질혈증 102명, 간기능 36명, 고혈압 63명, 빈혈 41명, 당뇨 38명, B형간염 12명, 신장기능 1명(단, 중복 유소견으로 인해 수검자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음)

18)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2018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결혼이민자는 3,310명으로 파악됨.

19) 건강검진율 = 목표량 대비 (건강)검진인원

<표 5-10> 2020년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적(9월 기준)

시.군명	목표량 (명)	검진인원(명)					검진율 (%)
		합 계	결혼이민자		배우자		
			남	여	남	여	
합 계	500	302	-	227	75	-	60.4
춘천시	100	105	-	78	27	-	105.0
원주시	20	22	-	17	5	-	110.0
강릉시	20	-	-	-	-	-	-
동해시	15	22	-	18	4	-	146.7
태백시	25	-	-	-	-	-	-
속초시	30	-	-	-	-	-	-
삼척시	30	-	-	-	-	-	-
홍천군	60	52	-	38	14	-	86.7
횡성군	10	19	-	15	4	-	190.0
영월군	25	-	-	-	-	-	-
평창군	25	-	-	-	-	-	-
정선군	20	23	-	18	5	-	115.0
철원군	25	-	-	-	-	-	-
화천군	20	1	-	1		-	5.0
양구군	25	22	-	18	4	-	88.0
인제군	15	20	-	14	6	-	133.3
고성군	15	-	-	-	-	-	-
양양군	20	16	-	10	6	-	80.0

○ 2019년 건강검진 실적

- 국적(결혼이민자)별 사업수혜규모 : 베트남 162명, 중국 113명, 필리핀 60명, 캄보디아 37명, 일본 25명, 기타 56명
- 검진결과 : 유소견자 550명(98.7%) 여자 446명(98.5%), 남자 104명(100.0%)
- 질환별 유소견자 : 이상지질혈증 320명, 간기능 285명, 고혈압 83명, 빈혈 244명, 당뇨 85명, B형간염 28명, 신장기능 28명(단, 중복 유소견으로 인해 수검자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음)

<표 5-11> 2019년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적

시.군명	목표량 (명)	검진인원(명)					검진율 (%)
		합 계	결혼이민자		배우자		
			남	여	남	여	
합 계	500	557	-	453	104	-	111.4
춘천시	90	130	-	111	19	-	144.4
원주시	20	-	-	-	-	-	-
강릉시	30	25	-	17	8	-	83.3
동해시	20	19	-	19	-	-	95.0
태백시	20	27	-	23	4	-	135.0
속초시	30	31	-	26	5	-	103.3
삼척시	40	33	-	32	1	-	82.5
홍천군	50	67	-	50	17	-	134.0
횡성군	25	11	-	10	1	-	44.0
영월군	20	29	-	27	2	-	145.0
평창군	20	27	-	18	9	-	135.0
정선군	25	21	-	19	2	-	84.0
철원군	20	26	-	20	6	-	130.0
화천군	20	22	-	19	3	-	110.0
양구군	15	27	-	18	9	-	180.0
인제군	25	20	-	13	7	-	80.0
고성군	10	18	-	16	2	-	180.0
양양군	20	24	-	15	9	-	120.0

○ 2018년 건강검진 실적

- 국적(결혼이민자)별 사업수혜규모 : 베트남 172명, 중국 120명, 필리핀 60명, 캄보디아 31명, 일본 32명, 기타 37명
- 검진결과 : 유소견자 516명(92.5%) 여자 410명(90.7%), 남자 106명(66.2%)
- 질환별 유소견자 : 이상지질혈증 311명, 간기능 202명, 고혈압 120명, 빈혈 243명, 당뇨 77명, B형간염 26명, 신장기능 12명(단, 중복 유소견으로 인해 수검자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음)

<표 5-12> 2018년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적

시.군명	목표량 (명)	검진인원(명)					검진율 (%)
		합 계	결혼이민자		배우자		
			남	여	남	여	
합 계	500	558	-	452	160	-	111.6
춘천시	90	104	-	84	20	-	115.6
원주시	50	-	-	-	-	-	-
강릉시	45	28	-	21	7	-	62.2
동해시	25	21	-	18	3	-	84.0
태백시	20	21	-	18	3	-	105.0
속초시	25	45	-	35	10	-	180.0
삼척시	25	51	-	42	9	-	204.0
홍천군	40	62	-	48	14	-	155.0
횡성군	10	25	-	18	7	-	250.0
영월군	25	21	-	21	-	-	84.0
평창군	20	27	-	23	4	-	135.0
정선군	25	21	-	19	2	-	84.0
철원군	25	32	-	26	6	-	128.0
화천군	15	25	-	22	3	-	166.7
양구군	15	14	-	12	2	-	93.3
인제군	15	31	-	19	12	-	206.7
고성군	10	5	-	5	-	-	50.0
양양군	20	25	-	21	4	-	125.0

○ 2017년 건강검진 실적

- 국적(결혼이민자)별 사업수혜규모 : 베트남 176명, 중국 109명, 필리핀 60명, 캄보디아 40명, 일본 20명, 기타 35명
- 검진결과 : 유소견자 507명(94.1%) 여자 412명(93.6%), 남자 95명(96.0%)
- 질환별 유소견자 : 이상지질혈증 303명, 간기능 215명, 고혈압 132명, 빈혈 289명, 당뇨 54명, B형간염 25명, 신장기능 15명(단, 중복 유소견으로 인해 수검자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음)

<표 5-13> 2017년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적

시.군명	목표량 (명)	검진인원(명)					검진율 (%)
		합 계	결혼이민자		배우자		
			남	여	남	여	
합 계	500	539	-	440	99	-	107.8
춘천시	80	109	-	82	27	-	136.3
원주시	50	2	-	1	1	-	4.0
강릉시	50	43	-	31	12	-	86.0
동해시	25	30	-	26	4	-	120.0
태백시	15	30	-	27	3	-	200.0
속초시	20	31	-	23	8	-	155.0
삼척시	25	35	-	33	2	-	140.0
홍천군	45	51	-	42	9	-	113.3
횡성군	20	-	-	-	-	-	-
영월군	20	34	-	30	4	-	170.0
평창군	20	25	-	21	4	-	125.0
정선군	25	28	-	26	2	-	112.0
철원군	25	34	-	27	7	-	136.0
화천군	10	18	-	13	5	-	180.0
양구군	20	21	-	17	4	-	105.0
인제군	15	19	-	17	2	-	126.7
고성군	15	1	-	1	-	-	6.7
양양군	20	28	-	23	5	-	140.0

제6장. 결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 본 연구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보육 및 돌봄, 교육, 건강과 보건의 세 측면에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이를 통해 강원도가 지역기반의 다문화가족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장기체류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이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결혼이민자 유입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점차 학령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발생되고 있음.
- 강원도는 비록 전국대비 이민배경 인구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도 인구규모 축소 및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중요한 정책적 대상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안정적 성장과 발달은 성공적 사회통합의 핵심지표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글로벌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최근 우리 정부의 이민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은 지역기반의 특화된 서비스 개발과 운영(지역서비스 고도화)을 강조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강원도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 특성,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기반의 정책과제 도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2. 보육 및 돌봄 분야 주요 연구 결과

1) 문제점과 욕구

-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인지·언어 발달과 정서·사회 발달의 지연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그러나 영영아기 아동이 다문화가족과 일반 가족에서 언어발달 차이가 없고, 정서·사회발달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로 볼 때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제공되는 환경(육아지원기관, 가정, 지역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은 청소년기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유아기 지원을 간과하고 있음.
- 강원도 다문화가족정책의 전달체계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여성 청소년가족과에서 맡고 있어 가족구성원의 생애발달이나 욕구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으로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차 자료를 통해 분석한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욕구는 다음과 같음.
 - 육아지원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와 면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경우 인지적·정서적 자극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육아지원기관 이용도 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지도 않고 있는 경우 관련 정책의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바, 효과적인 정보 전달체계의 강구가 필요함.
 - 영유아 자녀와의 활동에 있어 결혼이주자의 배우자가 참여하는 매우 저조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봄을 공유하고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함.
 - 현재의 다문화프로그램은 한국어 소통 능력 향상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으나, 그 외에도 양육비 지출, 학습 지도, 양육방식 갈등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추진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가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욕구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내에서 양육 방법의 차이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것이지만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안(예: 아동 체벌 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육아지원기관을 선택하는 조건은 비용, 물리적 접근성, 긴 이용시간임.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자는 초기입국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를 육아지원기관에 보내면서 의사소통, 문화적인 차이, 교사와의 관계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도움을 받을 인적 자원이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지원기관은 다문화가족 영유아 연령에 따른 적합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자녀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동안 결혼이주자는 정착적응 및 근로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대부분 결혼이주자의 경우 연령이 낮고 정착 초기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부모됨의 준비나 교육이 필요함.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에게 제공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은 결혼이주자의 특성(물리적 접근성의 한계, 낮은 경제 소득 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실질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언어적·문화적 역량이 뛰어나므로, 한국어와 문화의 습득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함.

○ 영유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보육 및 돌봄 욕구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 어머니들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언어소통, 대체 돌봄의 부재,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하기 어려운 상황, 양육비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였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울 때 가족 이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은 부재해 보임.
-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에서는 대개 자녀가 만1세~만2세 무렵부터 육아지원 기관에 보내고 있으며, 물리적 접근성을 가장 큰 기관 이용 조건으로 여기고 있음. 자녀를 육아지원기관에 보내게 된 이유는 한국어 역량 증진때문이었지만, 그 외에도 사회성 발달, 기본생활습관 형성, 육아지원기관 선생님과 교류, 취업시간 확보 등 다방면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함.
- 그러나 결혼이주 후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알려주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기도 어려웠고,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면서도 가정통신문의 이해나 특별활동의 선택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자녀가 다니게 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대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이와 관련한 도움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음.
- 자녀를 보다 잘 키우기 위해 이중언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 양육과 정착 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양육비의 지원 등이 필요함.

2) 정책 제언

○ 영유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은 영유아가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자가 초기 정착 자임을 감안할 때 정착의 초기에 성공을 경험해야 정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이 강조된 정책이 구현되어야 함.

<표 6-1> 다문화가족 영유아 보육 및 돌봄 정책의 원칙

(1) 영유아기는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임.

-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령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전에 영유아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임.
- 영유아기는 언어 발달 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사회성 발달·사회성발달 등 통합적인 발달이 상호작용하며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통합적인 역량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취약성에 집중하기보다 언어적·문화적 강점에 집중하고 이것들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2) 다문화가족의 정착 초기 역시 정착에 결정적인 시기임.

- 아동의 연령별 특성, 양육 방법, 교육 시스템 등 대한민국에서의 부모됨이 안내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 아니라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문화가족에 개입하는 전달체계로 적극 활용하여야 함.
- 다문화가족만의 특수성은 개별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되, 그 외의 부분은 일반가정과 동등하게 개입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물리적·인지적) 접근성을 강화해야 함.
- 자녀의 돌봄과 결혼이주여성 근로의 양립지원
- 영유아 자녀와 결혼이주 부모의 동반 성장을 지향

○ 상기의 원칙에 근거하여 범정부 및 강원도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다음을 제언함.

(1) 정책 전반

- 국제결혼의 감소 및 저출산 경향으로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영유아기에 대한 지원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야 하고(서문희 외, 2010) 친아동적(child friendly), 친가정적(family friendly)이어야 함.
- 다문화가족의 취약성보다 강점에 집중하는 정책을 지향하여야 함.
 - 성공적인 정착 및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발굴하여 멘토-멘티 결연 또는 다문화가족 반장 제도를 실시하며, 이를 일자리로 연결
 -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이중언어 발달을 위한 방문교육 및 기관 프로그램의 확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이중언어 역량에 대한 인식 제고
- 전반적인 보육 및 돌봄 환경의 개선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함.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개인 역량이 국내 일반가족의 영유아보다 취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놓은 환경으로 인해 연령이 증가할 수록 취약성이 발현된다고 보고 있음. 또한 자녀의 영유아시기는 결혼이주자의 초기 정착기이

자, 가족형성초기이기도 함. 부부간의 갈등 문제나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문제시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부부상담, 부모교육, 아버지 참여 교육 프로그램,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과 지원 등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실시가 필요함.

- 자녀의 성장과 함께 부모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특히 돌봄정책과 함께 결혼이주 여성의 역량을 극대화하며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예: 결혼이주 여성 멘토).

(2) 정책 전달체계

-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복지 차원의 접근도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의 다문화가정 또는 국내 일반가정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정책을 구현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욕구에 대해 개입하되,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 부서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위한 전달체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 아니라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함.
- 조사 수행 결과 다문화가족 결혼이주 부모는 도움을 받을 인적자원이 부족하며, 정보 인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정보 전달에 대해 다음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출산 또는 양육수당 신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부모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함.
 - (정착 시기 기준이 아니라)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를 이용하도록 함.
 -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으므로, 육아지원기관을 통한 도움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배치.
 - 부모교육에는 아동의 연령별 발달 특성 뿐 아니라 육아지원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도록 함. (어머니와의 면담에 의하면) 수능배치표와 같이 체계적으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알려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지를 필요로 하고 있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현재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사례관리 전담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님. 강원도 B시의 경우 8개 행정구역에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본인이 맡은 구역에 위 어려움으로 센터에 내방하면 직원들이 1:1로 천천히 안내 또는 관련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 후 통역사를 통해 전달 및 해결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개설시 안내를 하고 있음(전문가 2 서면조사 내용). 따라서 다문화사례관리 전담인력 확보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영유아의 연령별대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구 발주하여 운영(예: 영영아기: 부모자녀애착, 아이돌봄 / 영아 및 유아기: 언어, 영양과 부모상담 및 교육, 놀이 방법 등 / 취학준비시기-신체활동, 학습(예: 독서지도, 학습지도 등))

3. 교육 분야 주요 연구 결과

1) 문제점과 욕구

-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 문제와 욕구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학생이 직면하는 교육/학업상의 위기는 다문화가족이 처한 매우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하에서 이해되어야 함.
 - 다문화학생의 취학률은 내국인 학생에 비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나,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내국인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음.
 - 학업성취도가 저하되는 경우에는 언어발달의 지연과 수준높은 언어능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국어와 사회, 역사와 같은 과목의 특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 비록 생활언어의 유창성이 확보되더라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공적 교육은 유아기부터 학령기로 이어지는 긴 과정속에서 달성되는 만큼, 언어습득과정부터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적 관계형성을 포괄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며, 가정(부모)과 학교(교사와 또래)에서의 동시적 개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정부의 다문화가족 자녀(학생) 대상 지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이민배경 자녀들을 단순히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로서 육성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강조점이 이동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포함한 생애주기의 단계별 전환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음.
- 동등학 교육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확대, 학교 밖 학생들과 같은 사각지대 해소 노력.
- 사회통합의 가치실현을 위해 내국인학생과 대중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 노력.

○ 2차 자료(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한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 문제의 특징과 욕구는 다음과 같음.

-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만6-24세) 양육상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만,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자녀와의 대화부족’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전국대비 더 높았음.
-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고민거리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보면 ‘고민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2%로 가장 높으며 이는 전국평균보다 7%를 상회하는 수치임. 그 다음으로는 ‘진로·진학·직업’이 30.6%, ‘공부(성적, 적성)’가 29.3% 큰 고민거리라고 응답함. 공부를 고민거리로 응답한 빈도는 전국평균과 비슷하지만, 진로관련 고민거리를 갖고 있다는 응답은 전국평균보다 5%가량 높았음. 이를 토대로 볼 때 진로지도를 포함한 교육분야 지원 욕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강원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강원도는 전국평균과 마찬가지로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큰 3.4점으로 나타났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가 파악한 욕구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에 있어 ‘학업’의 중요성: 학업은 단순히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형성, 또래관계, 향후 진로에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핵심적인 이슈임.
- 가정의 중요성 및 가정(부모)대상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됨: 다문화가족자녀의 성공적 학업 및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 및 지지관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학교 및 교사의 중요성 및 학교기반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됨: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는데 무지하거나 소극적임(이는 ‘식별’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한 것일 수 있음). 그러나 학교에서의 실질적 지원서비스 없이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 욕구는 해소되기 어려움.
- 자녀들의 생애주기(학령기)별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가 요구됨: 저학년일 경우 돌봄공백도 같이 해소되어야 하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요구되는 학습 수준

에 준하여 학습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에서 ‘접근성’의 중요성 및 찾아가는(방문형) 서비스의 도입 및 확대가 요구됨: 서비스기관이 주로 접근성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크게 저하됨.
- 관련기관들의 서비스 확장성, 지속성 및 유기적 연계가 요구됨: 단회성이나 자원봉사자 활용과 같은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하며, 학교급이 올라가거나 전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일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어머니)들의 교육관련 욕구는 다음과 같음.

- 학교 학습에 적응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또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학생별 특화 및 지속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명확했음.
- 한국에서 ‘교육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교육 등 추가 교육을 시키고 싶으나 교육비 부담, 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망설이는 것으로 드러남.
- 방문 서비스(돌봄 및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확인됨.
- 활용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코로나로 인해 학교 등교 수업대신 온라인 기반 학습 수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드러남.
- 기타 파악된 욕구: 어머니 취업기회 확대 및 생활밀접 기관들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

2) 정책 제언

○ 교육 지원서비스(프로그램) 개발·운영의 방향 설정

- 내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문제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정책의 ‘철학’이 요구됨. 정부의 다문화교육 기본정책의 이념과 목표는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시·군 단위에서는 자원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실현 하는 것에 어려움이 포착됨.
- 내국인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급학교 진학률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며, 특히 20세 이전의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규교육과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공교육 진입실패 및 탈락이 아동의 언어 능력과 학습 능력이 한국 교과 과정의 어려움이나 가족(부모)의 특성에 의한 것인지, 한국 교육 행

정 체계의 경직성과 사각지대에 따른 배제의 결과인지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보건사회연구원, 2018).

- 다문화가족 부모나 자녀가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 교육문화와 제도 이해 프로그램, 부모의 양육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필요. 단, 가급적 집단 프로그램 보다는 개별적 상담, 1:1 학습도우미, 멘토링 방식이 더 적합함.
- 1:1 멘토링이나 개인 학습 지원과 같은 서비스 형태는 민간 자원 활용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서비스제공자(교사역할자)의 역량과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따라서 대학생이나 단회성 자원봉사자 보다는 지역기업이나 부모회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교육봉사를 할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교육 지원서비스(프로그램) 접근성과 보편성 개선

- 다문화 학생들의 생활환경 안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각종 청소년 지원기관, 사회복지관 등이 가정,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동개발이나 적극적인 사례 공유와 의뢰(referral)가 필요함.
-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접근성에 한계로 인해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앞의 전문가 자문내용 참조).
- 외국인 부모들의 전형적이지 않은 근무 시간과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프로그램 운영시간(주말이나 야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때 반드시 자녀의 돌봄욕구와 교육욕구가 같이 고려되어야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음.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경우 공교육진입 자체가 차단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 파악이 상시 요구되며, 이들이 관련 서비스에서도 배제되지 않도록 국적이나 체류의 합법성보다는 욕구와 인권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인재육성’으로 보는 실용적 접근은 이들을 배제할 우려가 큼.

○ 학교와 교사의 역할 강화

- 학교 이동, 학교 급간 이동에 상관없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학교적응 및 교육성취도가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이를 위해 학교내 다문화학생 사례관리자 역할을 할 인력이 지정되어야 함.
- 다문화 학생의 학교 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있어 다른 어떤 서비스 제공자도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 교사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화적, 심리적 특징을 이해하고 일반학생과의 협업 환경속에서 교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교실에서 다문화 학생을 ‘식별’함으로써 낙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수업설계가 요구됨).

- 그러나 학교 생활 부적응자나 학업성취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다문화 학생은 오히려 조기에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사례관리자의 지속적인 상담, 교육, 모니터링, 필요시 의뢰 등의 밀접관리가 요구됨.

○ 시·군 단위의 실태조사 및 사례 개발과 확산

- 본 보고서 제2장과 본장의 다문화학생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도내 시·군간의 다문화 가족과 다문화 학생의 분포현황의 지역격차가 큼. 따라서 전국이나 광역단위 사업들은 현장에서 적합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시·군 단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욕구 파악 및 서비스 현황과 자원 개발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 타지역 사례를 단순히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긍정적 역할 모델과 진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지역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상담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의 비대면 학습 장비 긴급지원이 요청됨. 최근 등교가 정상화되고 있기는 하나 향후 언택트(untact) 환경에서의 (진학이나 취업시)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학습 경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건강 및 보건 분야 주요 연구 결과

1) 문제점과 욕구

-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건강취약 계층임. 출신국가별로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족갈등 뿐 아니라, 자녀양육의 어려움, 건강관리상의 문제를 경험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국적 취득 이전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성과 영유아 건강서비스가 요구가 매우 높은 집단임.
-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언어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는 연쇄적으로 미충족 의료경험과 부정적인 건강수준을 야기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자녀의 건강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함. 이러한 현상은 연령, 출신국가, 체류기간,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증폭되기도 경감되기도 함.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은 60.9%로, ‘한국어·한국사회적응교육(51.8%)’ 다음으로 ‘임신·출산지원(45.5%)’가 높게 나타났는데, 임신·출산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관심이 한국어능력 배양만

크이나 높다는 것을 시사함.

-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정책은 타 부문에 비해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정책우선순위에서는 밀려있음. 따라서 낮은 예산제약 내에서 극대화 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함. 앞서 분석된 선행연구와 정책검토를 종합 컨대, 정책수혜집단은 ‘결혼이주여성’으로, 정책목표는 ‘모자보건, 생식건강,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정신건강서비스’로 설정하며, 정책수단은 ‘정보제공’을 채택한다면, 정책성과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해석은 아래의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조사결과와 궤를 같이함.
- (건강 및 보건 욕구, 의료이용 장애요인) 임신전후관리, 건강검진,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그러나 언어적 문제로 인해 병원이용 시 부정적 경험이 많음. 다문화가족의 거주형태(도시형, 도농형, 농촌형)에 따라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음. 언어적 문제의 구체적 예로서는, 한국 남편이 동행하지 않고서는 건강상태를 의사에게 설명하기 힘들고, 의료진의 설명이나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두려움이 큼. 따라서 가족단위의 접근(남편에게 주기적 정보제공, 경제적 지원제도 및 보험제도, 본인부담금 등)의 중재방법을 제안함.
- (보건의료체계의 차이) 건강보험 가입률 면에서 볼 때,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나, 자국에 비해 높은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등 보장성 문제가 제기됨.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의료이용 접근성을 제한시키므로, 소득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건강정보에 대한 낮은 문해력)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에 만족하는 편이나, 일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이해가 낮음. 따라서 정책집행자의 정보제공 수단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의 대표적 국적을 추려 다중언어로 번역된 건강정보를 안내하거나, 예방접종 문진표나 건강상태 설문조사 등 이주민 입장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정보를 수집할 시에는 일반적 공지시점 보다는 조기에 통보되어 건강정보를 독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할 것임. 최근 디지털화된 정보(카카오톡, SNS, SMS 등)로 가공하여 신속 전달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일 것으로 보임.
- (실효성 있는 사업기획)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화하고, 다문화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음.

2) 정책 제언

- 강원도 다문화가족의 건강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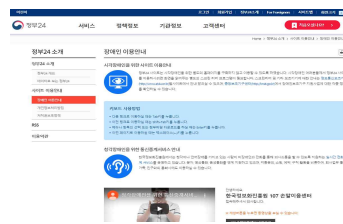
- 건강정보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 건강검진, 영유아 예방접종, 임신부 산전산후관리 프로그램 등 결혼이주여성의 요구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정책집행자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주요 언어관련 통번역 건강정보알림 메시지, AI 스피커를 활용한 이중언어 환경구축 등 다양하고 창의적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적용함.
- 결혼이주여성에 국한된 건강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배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부부공동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단위의 접근과 중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병원-지자체-다문화자조모임 간의 협의체와 같이 지역맞춤형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마련, 대학과 연계한 의료봉사단 구성을 통해 병원이용 시 복잡한 서류작성 및 검진예약절차의 지원, 의료정보에 대한 설명 지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인식증대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음.

○ 다문화가족의 건강문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

-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건강플랫폼 사업 추진]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결혼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그간 국가정보화사업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국가적 차원의 지능형 서비스 실증사업이 사실상 전무함. 그에 반해, 노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행정·복지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됨. 구체적 사례로는, 청각장애인용 통신중계서비스, 시각장애인용 사이트 이용안내, 노인맞춤형 느린말ARS 등이 있음.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강플랫폼 사업추진을 제안함.



청각장애인용 통신중계서비스



시각장애인용 사이트 이용안내



노인맞춤형 느린말ARS

- [쌍방향 정보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부분의 행정·복지정보 및 서비스가 공급자(공공기관) 중심의 일방향적 흐름으로 편중되어 있음. 예를 들어, 민원24, 다누리 등 다문화가족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는 텍스트 위주의 인터페이스, 민원인(다문화가족)의 니즈에 대한 즉각적 해결이 어려움.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실제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와 쌍방향적 소통창구의 설치를 제안함.



민원24 사이트(국문, 다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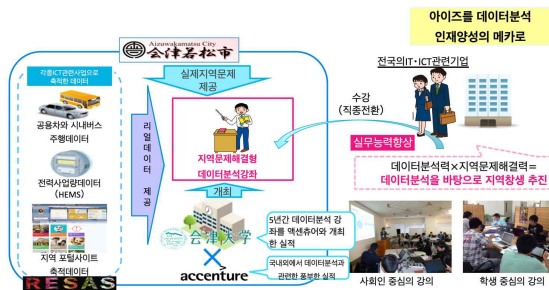
다누리 포털(메인, 정보안내)



-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활성화] 해외사례(아이즈대학, 이와테대학)에서 보듯, 중앙정부의 역할은 전반적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위주의 정책 수행이 강조됨. 특히, 지자체마다 현장의 서비스 제공인력 역량과 자질, 수요자의 요구도, 센터사업 및 행사 등이 다르므로, 서비스 제공요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이 필요. 이러한 지역문제의 실질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지자체-지역기업 주도의 협의체를 조직하고, 이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시스템 정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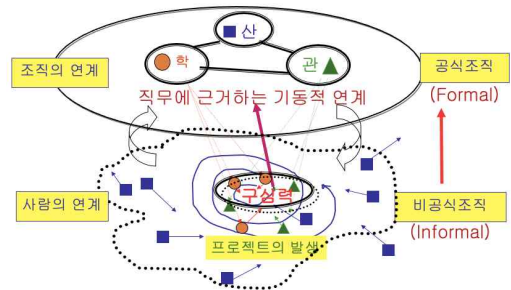
<아이즈대학 사례>

지역대학-지자체-지역기업이 협업하여 지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분석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DATA for CITIZEN(오픈데이터))



<이와테대학 사례>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대학 중심의 컨트롤 타워(지역연계추진센터) 운영
(지역산업 혁신능력 평가에서 일본 전체 대학 1위 차지)



- 앞의 분야별 정책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지역사회 기반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서비스 개발과 전달상의 공통적인 과제로서 제안함.

<표 6-2> 분야별 정책제언 요약

	보육/돌봄	교육	건강/보건
정책일반	•다문화가족의 취약성보다 강점에 집중	•공교육 진입 보장 및 이탈 방지	•건강정보 접근성 강화
	•보육/돌봄(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지원과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통합 지향	•다문화가족의 건강문해력향상
전달체계	•정보 전달 관련한 전달체계 부재 해결	•개별적 상담, 1:1 학습도우미, 멘토링 방식 우선	•가족단위의 접근과 중재방법 모색
	•기존 보육/돌봄 전달체계 적극 활용	•농어촌 지역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건강플랫폼 사업 추진
지역사회	•지역사회 네트워킹 활성화	•지역사회 기관간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및 사례(정보) 공유 활성화	•지역맞춤형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마련

5. 맺으며

- 이민 1세대 뿐만 아니라, 이민 2세대와 1.5세대(중도입국), 3세대의 안정적 성장과 사회통합은 체류이민자 300만을 내다보는 한국 사회의 큰 도전이자 과제임(문병기 외, 2018).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적응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었음.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가 성장하고 뿌리 내릴 곳도 지역임을 인식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정책의 주도권을 지방정부가 가질 때, 다문화가족 정책이 지역소멸의 위기의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비슷한 역량을 지녔다면 내국인 자녀와 외국인 자녀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돌봄, 교육, 고용, 의료 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함. 그렇다면 이들의 향후 사회진출시 활동(performance)은 내국인과 크게 차이나지 않고 국익에 기여할 것임(이규용 외, 2018).

-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에 대한 정책은 한 축으로는 가족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발달과업을 토대로 마련되어야 하며, 다른 한 축으로는 보호 및 지원정책과 발전지향적 육성 및 통합 정책으로의 성격을 지녀야 함. 이로써 다문화가족을 단순히 ‘취약계층’으로 대상화하고 시혜적 성격을 쏟아냄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단기 소규모 연구로서 실태조사의 범위와 엄밀성을 구축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 펜데믹 상황은 자료 수집과 활동범위를 제약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소수(small N) 질적 사례연구로서의 제한된 가치를 가짐.
 - 강원도로 범위를 제한하되 욕구 파악과 아젠다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만큼, 보육과 돌봄, 교육, 건강과 보건의라는 핵심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연구가 되었으나, 추상성의 수준이 다소 높을 수 밖에 없었음.
-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제안됨.
 - 시·군 단위의 욕구 및 서비스 실태조사 및 성공 사례 연구.
 - 이민인구 특성과 욕구는 매우 유동적임. 인구 이동 유형이 다양해지고 가족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주 배경 아동의 유형도 달라지고 있음(보건사회연구원, 2018). 따라서 우리사회에 어느정도 익숙해진 국내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자녀나 미등록 외국 국적 아동, 제3국 출생자녀, 탈북자 자녀 등 새로운 유형의 이민자 자녀 문제에 대한 탐색이 요청됨.

참고문헌

- 건강가정진흥원 (2018) 「2018 가족지원사업 성과보고서」, <http://www.kihf.or.kr/>.
- 교육부 (2019) 「교육통계: 행정구역별 다문화가정학생수」, <https://www.moe.go.kr/>
- 교육부 (2020)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https://www.moe.go.kr/>
- 구효진·최진선 (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3-67.
- 김갑성 (2008) '한국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93.
- 김경식·김춘경·이광석·이채문·이현철·임지영·정정희·조현미 (2018) 「다문화사회의 이해」, 서울: 신정.
- 김계형·박상민 (2014) '국내 이주민을 위한 정착 시기에 따른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방안'. 「다문화사회연구」, 7(2), 29-59.
- 김선희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양육 행동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0(6), 95-115.
- 김소양 (2010)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에 대한 외국인 어머니 및 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 4(2), 96-128.
- 김수희·이정열 (2013) '결혼 이주 여성의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6), 770-780.
- 김안나·최승아 (2012)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295-334.
- 김영란 (2012) '독일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고찰: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와 현황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3, 31-67.
- 김정인 (2018)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전략: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4), 267-292.
- 김혜련·여지영·정진주·백소혜 (2012)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10.
- 김혜련 (2010) '다문화가족의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65, 46-57.
- 김혜련·황나미·장인순·윤강재·강복정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식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66.
- 김혜순 (2015) '지역사회의 이민과 정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77-79.

- 문병기·장임숙·정동재·송형주·박미정 (2018) 「국내체류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www.prism.go.kr.
- 문혁준·최윤경·서소정 (2009) '다문화가정 아동', 「아동학회지」, 30(6), 85-97.
- 박기관 (2011) '다문화시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1), 193-213.
- 박명숙·권영란 (2013) '다문화 산모 간호를 위한 문화적 역량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사례기반 소그룹 학습방법 적용',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626-635.
- 박범종 (2017) '다문화가족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동북아 문화연구」, 51, 285-307.
- 박순영·이종인·김희경 (2007) '가정환경 특성이 만 3 세 유아의 성장발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4, 91-119.
- 박신규·이성희 (2015)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양육환경과 발달상태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다문화 영유아교육지원방안을 위한', 「열린유아교육연구」, 20(1), 159-187.
- 법무부 (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http://www.immigration.go.kr>.
- 법무부 (201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http://www.korea.kr>.
- 법무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http://www.moj.go.kr>.
- 변영희 (2019) '소도시 및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언어와 사회성에 대한 연구', 「다문화건강학회지」 9(2), 33-38.
- 보건사회연구원 (2018)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http://repository.kihasa.re.kr>.
- 서문희·설동훈·최윤경·김은영·조혜주 (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 -영유아·초등학생·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송다영 (2018) '공표기관별 외국인·다문화 통계 비교 연구', 「법무부 연구 보고서」, <http://kostat.go.kr>.
- 송민경 (2018)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http://gwfri.impacsys.kr/>.
- 신은희·노성향·윤매자·이찬숙·최현정·신지현 (2012) 「다문화 사회와 가정. 공동체 아산정책연구소 달린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안지숙·김혜련·양숙자(2013)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문해력과 관련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4), 377-387.
- 양계민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V: 총괄보고서」, <https://www.nypi.re.kr>.
- 양송희·박성지 (2016)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읽기능력 비교-기초학력 검사 읽기검사 하위종목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2(1), 161-75.
- 어린이집안전공제회·한국보육진흥원 (2019) 「다문화 보육과정 컨설팅 매뉴얼」.

-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http://www.korea.kr>.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http://www.korea.kr>.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이규용·김혜순·송영훈·최서리 (2018) 「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http://www.kli.re.kr>.
- 이병숙·오익근·이은미(2011) '한국 거주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경험'. 「간호행정학회지」, 17(2), 226-237.
- 이영주 (2007) '국제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2), 83-105.
- 이재분 (2002) 「초·중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창원 (2015) '이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사용의 부처별 차이와 문제점',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5-13, 1-7.
- 임동선 외 (2018) 「다문화 가정 건강 증진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요조사」, 국민건강보험 연구용역보고서 2018-2-0003.
- 전혜정·민성혜·이민영·최혜영·장수지·조을순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 <http://www.prism.go.kr>.
- 정덕희 (2008)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교육문제' 「아동연구」, 17(4), 243-56.
- 정옥분 (2005) 「청소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은진 (2014) 「강원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방안: 다문화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http://gwfri.gwd.go.kr>.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정하성 (2009) 「다문화 청소년 개론: 여러 나라 문화 이해하기」, 경기도: 예담.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은영(2015) '다문화가족 영유아 교육보육정책 현황 및 과제', 「현대사회와다문화」 5(2), 161-180.
- 최윤경 (2010)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육아정책포럼」 20, 7-17.
- 한재희 (2010) 「한국적 다문화상담」, 서울: 학지사.
- 행정안전부 (2019)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www.mois.go.kr>.
- Bailey Jr, D. B.(2002) "Are critical periods critical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role of timing in early childhood pedagog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7(3), 281-294.
- Kuhl, P. K., Conboy, B. T., Padden, D., Nelson, T., & Pruitt, J. (2005). "Early speech perception and later language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the Critical Period", *Language Learning and Development*, 1(3-4), 237-264.

- Mayberry, R. I., & Eichen, E. B. (1991), "The long-lasting advantage of learning sign language in childhood: Another look at the critical period for 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0(4), 486-512.
- Reynolds, A. J., Temple, J. A., & Ou, S. R. (2003), "School-based early intervention and Child well-being in the Chicago Longitudinal Study", *Child Welfare*, 82(5), 633-656.

